

경제 정책 하면

# 나라경제

2012

nara.kdi.re.kr

# 4

특집

## 여수세계박람회 D-30

이슈

저작권,  
당신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인터뷰

강동석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장

집중토론

동일본 대지진 1년,  
일본경제 어디로 가나?

# “학교폭력 이제 그만!”

**더 이상** 꽃 같은 우리 아이들을 고통 속에 홀로 두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7대 실천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대책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겠지요.  
 결국 사람이 변화하고, 사람이 움직여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교육자,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학교폭력으로 고통 받고 있는 어린 마음을 힘껏 안아줄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교폭력 대책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 [ 직접 대책 ]

- 1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
- 2 신고-조사체계 개선 및 가·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 3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
- 4 학부모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 [ 근본 대책 ]

- 5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 6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 7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요인 대책

# 본 사람! 가본 사람!

눈이 시린 푸른 바다와 싱그런 유채꽃, 제주의 풍경화를 경험 하세요.  
책으로 본사람은 감상에 그치지만, 가본사람은 추억을 만듭니다.



유채꽃과 파란 바다...

# 93일간의 꿈과 바다 이야기

## 2012여수세계박람회

바다와 인류의 아름다운 공존을 노래하고  
자연과 문명의 조화로운 상생을 기원하는  
지구촌 바다축제가 대한민국 여수에서 펼쳐집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는 해양박람회의  
새로운 장을 열어갑니다.

주제 |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기간 | 2012년 5월 12일 - 8월 12일(93일간)  
장소 | 전라남도 여수 신항 일대  
규모 | 참가국 100여 개국

### (입장권 안내)

- 보통권 | 성인 33,000원, 청소년 25,000원, 경로어린이 19,000원
- 평일 단체권 | 성인 27,000원, 청소년 17,000원, 경로어린이 13,000원
- \* 자세한 안내는 하단의 입장권 구매처 참조

### (입장권 구매처)

- 2012여수세계박람회 공식 홈페이지 | [www.expo2012.kr](http://www.expo2012.kr)
- 인터파크 홈페이지 | [www.interpark.com](http://www.interpark.com)
- 전화예매 | 1577-1763(여수세계박람회 입장권부) / 1544-1555(인터파크)

### Official Global Partners



### Official Partners



### Official Sponsors



### Official Suppliers



### Official On-line shopping Mall



## 74일간 노 저어 한반도 바닷길 탐험한 최종열 대장

# 대원들의 무사 귀환, 내가 만든 탐험의 성공

‘바다를 걸어가고 싶다. 거대하고 웅장한 삼면의 바다를 걸어갈 수 있다면 나의 탐험 중 가장 아름다운 탐험이 될 것 같다.’ 2000년 아프리카 적대탐험을 끝내고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면서도 내 마음은 바다에 가 있었다. 몇 년 전부터 가슴속에 담아둔 탐험이었기 때문이다. 관련 전문가를 비롯해 작은 어선의 선장들을 만나 동력 없이 노를 젓는 배로 서해, 남해, 동해를 향해하겠다고 했더니 허황된 꿈이라는 한결같은 말만 했다.

탐험에는 좋은 환경이 없다. 모두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성공시키는 것이 탐험 아닌가. 그래서 고민에 빠진다. 성공할 수 있을까?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 내 가족은 이런 나의 고민이 ‘사치’라고 말한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다 결정해 놓고 고민하는 척하는 것이라고.

바다는 세상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이다. 바다가 없는 대륙 국가들은 발전의 한계에 봉착한다. 우리는 삼면이 바다다. 한때 해상왕 장보고의 화려한 교역의 중심지였던 우리의 바다가 지금은 끊임없이 국제 분쟁을 치르고 있다. 남쪽 끝 ‘이어도’, 동쪽 끝 ‘독도’를 우리 후손에게 곱게 물려주기 위해선 노력이 필요하다. 그 노력이 나에게서 무동력선을 이용한 해양탐험이었다.

2010년 4월 10일, 6명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해양탐험대가 인천 덕적도에서 출정식을 갖고, 첫 항해를 시작했다.



다. 대원들은 모두 일반인으로 탐험경험이 거의 없었다. 나의 또 다른 꿈, 또 다른 탐험을 위해 나는 약 5년간 필요한 정보를 모으고 손수 배를 만들고 훈련하며 준비해 왔다. 훈련돼 있지 않은 일반인을 대원으로 데리고 떠나야 한다는 것이 무척 위험하고 부담스러운 일이었지만, 그것조차도 내가 감당해야 할 또 다른 도전이었다.

탐험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이다. 그렇기에 대장인 나는 대원만은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생각의 각오는 못할 것이 없지만, 막상 육체는 한계점에 다다르면 포기하기 일쑤다. 탐험은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지 않는다. 죽음의 선상에 서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자연이 가로막기도 한다. 서해를 빠져 나가는 동안 대원들은 이미 지쳐 있었다. 뭘든지 하겠다는 각오는 버린 지 오래됐다. 못하겠다고 징징대는 대원들을 독려하고 또 독려해 우리의 해양영토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남쪽 끝 이어도 과학기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찡하고 먹먹해져 왔다. 다 써버린 줄 알았던 에너지가 다시 생겨나고 버린 줄 알았던 각오가 흐주머니 깊숙이 있었다.

이제는 우리의 마지막 꿈의 좌표인 독도로 가는 일만 남았다. 탐험을 시작한 지 74일 만인 2010년 6월 23일 오후 5시 30분, 최종 도착지인 독도가 해무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다. 서해의 시작점으로부터 2,500km 바다를 돌아 동쪽 끝 독도에 도착한 해양탐험대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한마음이 돼 가슴이 벅차올랐다. 5천년 역사 속에서 삼면의 바다를 노 저어 독도까지 온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나는 천연자원의 보고인 해양생태계와 우리의 영해가 얼마나 넓고 소중한지를 널리 홍보하고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싶었다.

이번 탐험은 성공했다. 두 달 반을 바다에서 먹고 잤으니 그 우여곡절이 수없이 많았다. 탐험 중에 죽은 동료나 선후배가 많다. 그래서 나는 탐험대를 이끈 후론 대원들을 무사히 집으로 보내기 위해 결정을 한다. 그것이 내가 만든 탐험의 성공이다. **박지**



**최종열 탐험가, 한국탐험협회 이사**

1991년 국내 최초로 북극점을 정복(북위 90도)하고, 1996년에는 세계 최초로 사하라 사막을 도보 횡단(208일)했다. 저서로 「또 다른 꿈을 향하여 나는 달린다」가 있다.

## 특집 2012 여수세계박람회 D-30



- 14 여수세계박람회, 새로운 해양개발 패러다임 제시한다  
최승민 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
- 16 여수를 신해양경제 선도도시로!  
오운열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과장
- 18 오감만족 체험형 박람회가 온다  
양은주 나라경제 기자
- 20 미래 저탄소 견본도시, 여기 있네!  
조용환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홍보실장
- 22 NFC 활용해 '스마트 엑스포'로 업그레이드  
홍진배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정책과장
- 24 생산유발 효과 12조원, 고용창출 효과 7만8천명  
김영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 25 햄버거, 지퍼, TV 너희들 어디서 왔니?  
양은주 나라경제 기자
- 26 운용 주체 명확히 하고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 줘야  
박웅희 전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인터뷰

#### 08 “이제부터는 세심한 마무리와 세련된 운영에 주력”

강동석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장  
대담 이재열 나라경제 편집장

#### 03 내 인생의 결정적 순간

대원들의 무사 귀환, 내가 만든 탐험의 성공  
최종열 탐험가

### 경제정책해설

#### 68 ‘복지’ 증대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동시에

이대중 기획재정부 협동조합팀장

#### 70 자원공급 안정 수준까지 에너지 자주개발을 끌어올린다

전민영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전략과장

#### 72 지금부터는 철도도 경쟁이다

고용석 국토해양부 철도운영과장

### 정책해설 Plus \_ 중동지역 전문인력 진출 활성화 방안

#### 60 청년들이여, ‘기회의 땅’ 중동으로 눈을 돌리자!

이태희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관

#### 62 중동 해외인력 수요 폭증...

완벽 냉방으로 한국보다 시원해

오응천 KOTRA 중동지역본부장

#### 63 모자이크 사회지만 이슬람으로 하나 돼

안정국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HK연구교수

#### 64 “명문대 졸업장 · 토익점수 필요 없어요”

임광태 에미레이트항공공사 승무원

#### 65 글로벌 청년취업은

국가적 · 시대적 과제라는 인식 절실해

노현중 한국교통대 행정정보학과 교수



08

강동석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장



집중토론

32 동일본 대지진 1년, 일본경제 어디로 가나?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우광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연구위원  
배준호 한신대 글로벌협력대학 교수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외신보도 분석

28 한미 FTA, 정치권 논쟁 속 발효

안기련 KDI 경제뉴스분석팀 연구원

29 성장속도 조절에 나선 중국

조현주 KDI 경제뉴스분석팀 전문연구원

30 김광일과 함께 읽는 책

「열 무덤의 남자」  
김광일 조선일보 논설위원

37 시인 이원규의 지리산 편지

섬진강과 지리산, 그 봄날의 동화  
이원규 시인

나라경제 인사이트

54 순환출자를 통한 몸집 부풀리기,

규제하거나 시장경제의 힘을 활용하거나  
김상택 이화여대 경제학 교수

56 한국경제의 복병, '가계부채'와 '부동산 거품 붕괴'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

연중기획

함께 사는 세상\_다문화

90 “모두가 동등하고 평등한 ‘같은 사람’”

로이 알록 꾸마르 부산외대 인도어과 교수

92 동화주의·혈통주의에 기댄 이주정책 재검토돼야

이한숙 이주와 인권연구소 소장

이슈

저작권, 당신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39 불법 복제로 날려버린 일자리가 3만5천개?

심재석 디지털데일리 기자

40 펄질과 블로그 운영, 과연 자유로운가

정진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1 전자출판에도 배타적발행권 허용

김기태 세명대 미디어창작학과 교수

42 음원 저작권을 둘러싼 '불편한 진실'

이규창 머니투데이 산업부 기자

43 최신 저작물 유통 막도록 초기에 집중 모니터링

정석철 한국저작권위원회 침해정보심의팀장

44 내 저작권 인식 점수는 몇 점?

표초희 나라경제 기자

46 한미 FTA로 달라진 저작권 환경,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박준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8 “창작자에게 돈을 지불하는 건 그 사람의 인생을 사는 것”

전윤수 영화감독

세계는 지금

78 기업의 경쟁법 준수,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이용수 주OECD대표부 참사관

81 'WTO 무역정책검토'는 회원국 경제정보의 보고

유병석 주세네바대표부 1등서기관

84 유럽 재정위기 이후 ECB 역할 놓고 '갑론을박'

서정의 한국은행 차장,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파견

87 재벌기업 개혁에 나선 이스라엘

이영선 KOTRA 이스라엘 텔아비브 무역관장



# CONTENTS

## 칼럼

- 50 오소희의 '사람여행' - 미안마  
행복한 길 잃기  
오소희 여행작가
- 58 창의성을 기르는 생각 3.0  
창의성으로 변신하라; 확대 · 축소  
노경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실 비서실장
- 66 일상의 발견  
아름다운 소통  
허봉조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관리팀장
- 76 전략경영 특강  
다윗이 골리앗에 대응하는 전략  
김수옥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 93 향기 나는 삶  
평범한 일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힘  
박덕자 마음의 집 노인대학 학장
- 94 세상에 없던 직업  
현수막 예코백 제작자  
김륜형 한국고용정보원 직업연구센터 연구원
- 95 도시농부의 농사일기  
텃밭을 풍성하게 하는 잎채소  
김지숙 전국귀농운동본부 「텃밭신문」 편집장
- 96 그림의 결과 속  
공개(龔開)의 '준골도'  
정석범 한국경제신문 문화전문기자
- 98 시평  
복지와 재정건전성  
이만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50



나라경제는 KDI와 14개 경제부처가 함께 만듭니다.

# 나라경제

2012. 04 [제23권 04호 통권 257호]

발행	KDI 경제정보센터
편집	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
발행인	현오석 KDI 원장
편집인	김규옥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고일동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편집주간	심재학 KDI 경제정보센터 정책정보실장
편집위원	기획재정부 민상기 정책관리담당관 교육과학기술부 오태석 기초과학정책과장 외교통상부 김영준 통상기획홍보관 행정안전부 이용철 재정정책과장 문화체육관광부 오영우 기획행정관리담당관 농림수산식품부 박상호 홍보담당관 지식경제부 박형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보건복지부 최중균 기획조정담당관 환경부 황계영 정책총괄과장 고용노동부 김민석 기획재정담당관 국토해양부 윤성원 기획담당관 방송통신위원회 조경식 기획재정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 김윤수 경쟁정책과장 금융위원회 김동환 정책홍보팀장
편집간사	이진민 기획재정부 정책관리담당관실
편집장	이재열
취재 · 편집기자	유성임, 안선경, 권기대, 표초희, 양은주
배포	김경숙
발행처	KDI 경제정보센터 ISSN 1227-8033 04 130-0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49
전화	02-958-4656
팩스	02-3295-0748
홈페이지	http://nara.kdi.re.kr
e-mail	nara@kdi.re.kr
발행일	2012년 3월 31일(매월 말일 발행) 제23권 04호(통권 257호)
등록일	1990년 11월 14일(문화 라 04859호)
기사 문의	02-958-4634
광고 문의	02-958-4614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02-958-4656
구독료	권당 3,000원 연간 30,000원
제작지원 · 인쇄	(주)성우애드컴
사진	이래스튜디오

\*「나라경제」는 한국 간행물 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나라경제」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필자의 소속기관이나 본지의 공식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글과 사진은 KDI의 서면 허락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타임캡슐을 엿다

Open the Time Capsule : Wonderous Expedition to the Past /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1층 특별전시실 · 2012년 3월 20일(화)~5월 6일(일) / 국립공주박물관 기획전시실 · 2012년 6월 26일(화)~8월 26일(일)

## - 색다른 고대 탐험



1938년 전주 출생  
 경희대 법률학과, 연세대 행정대학원  
 1965년 행정고시 합격(3회)  
 1966년 교통부 행정사무관  
 1977년 ~ 1980년 함안청 총무과장, 해운항만청 선원선박국장  
 1980년 ~ 1992년 교통부 관광국장, 도시교통국장, 기획관리실장  
 1992년 ~ 1993년 해운항만청장  
 1999년 ~ 2002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2003년 ~ 2005년 건설교통부 장관  
 2006년 ~ 2007년 전북세계물류박람회 조직위원장  
 2007년 ~ 2008년 인천세계도시엑스포 조직위원장  
 2009년 6월 ~ 현재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장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장

# 강동식



# 이제부터는 세심한 마무리와 세련된 운영에 주력

**5월 12일 개막까지 2개월여 남았다. 전반적인 준비에 문제는 없나?**

아직까지는 없다. 현재 당초 목표한 100개국 참가를 넘어 105개 국가, 10개 국제기구가 참가를 확정했다. 박람회장 공정률도 3월 2일 현재 96.5%에 달한다. 3월 중 전시관, 기타 시설과 그 안의 전시연출, 교통·숙박 등의 준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아무래도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을 지방언론들의 평가는 어떤가?**

지방언론들이 생각보다 까탈스럽다. 한 지역에서만 30년씩 근무한 분들이 많다 보니 지역 사정을 손금 보듯이 안다. 또한 자기들끼리 정보가 얼마나 빨리 전파되는지. 그분들이 처음에는 우리를 크게 경계했으나, 이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엑스포 준비와 개최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선 앞으로 마무리를 잘 해야겠지만, 현재까지의 진도를 봤을 때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박람회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관심은 저조한 편인 것 같다.**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러나 막상 압박해 소문이 나면 국내외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리라 본다. 특히 중국의 경우, 상하이엑스포의 영향 때문인지는 몰라도 관심이 굉장히 뜨겁다. 중국관광객 수용 문제를 놓고 오히려 우리가 고민할 정도다. 여수는 지방도시라 숙박시설과 편의시설 등이 서울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음식·쇼핑 등에서 이들의 필요

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금년은 밖으로는 세계경제 불안, 각국 정치 변동, 안으로는 두 차례에 걸친 선거 등으로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해다. 이런 시기에 여수엑스포는 세계적인 평화의 축제로, 국내외 많은 분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故장승우 위원장에 이어 2009년 6월 취임했는데, 그동안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취임 당시 이미 박람회 마스터플랜이 작성된 후였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하드웨어, 즉 시설배치 위주로 짜여져 있더라. 사실 박람회에 시설 보러 오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다. 콘텐츠, 전시, 프로그램 운영, 거기에 곁들인 문화·예술 행사, 색다른 체험 같은 것들이 종합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대폭 보완했다. 또 3개월 쓰기 위한 시설들은 임시시설로 전부 전환했다. 대전박람회를 1993년에 성공적으로 치렀지만, 지금도 대전엔 17개 동의 영구건물이 19년째 남아 있다. 대전시가 공사를 만들어 유지·관리했지만 적자가 누적되면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 정산했고, 지금은 민간투자를 받아 백지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다. 이런 전철은 밟지 말아야 하지 않겠나. 또 하나, 박람회 전시용 건물들은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창문이 없어 통풍 등의 유지 관리를 에어컨에 의존해야 하고, 조명기구의 역할이 매우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전시용 건물 중 국제관, 주제관, 한국관 세 동만 영구건물로 만들었다. 처음부터 위원장을 맡았다면 영구건물은 한 동 정도만 지었을 거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큰일은 잘 하는데

세세한 사무리는 소홀하기 쉽다.

하지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사무리가 아닌가.

이제부터는 세심한 사무리에 무엇보다 신경을 쓸 생각이다. 또한 전체적인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 세련미를 높일 것이다.



#### 여수엑스포가 다른 세계박람회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특히 최근 상하이엑스포와의 차별성은?

간단히 말해 상하이엑스포가 종합백화점이라면 여수엑스포는 명품전문백화점이라 할 수 있다. 포르투갈(리스본), 스페인(사라고사) 등 바다를 주제로 한 박람회가 있었지만 바다 자체를 박람회장으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건물·기술 중심의 박람회에서 체험·소통의 엑스포를 기획하고 있다. 콘텐츠와 사람 중심의 친인간·친환경박람회가 되는 것도 목표다.

#### 멀리 파견나와 있는 조직위 직원들의 고생이 심할 것 같다.

조직위 직원들이 420여명 된다. 66개 기관에서 파견됐다. 좋게 표현하면 혼성부대고, 조금 마구 말하면 잡동사니 부대다(웃음). 서귀포시에서 면장, 면 서기를 하던 분이 있고, 경제부처·감사원 등 각종 중앙부처에서도 와 있다. 모두들 열심히 해주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 CNN, 세계적인 여행안내서 '론리플래닛'(Lonely Planet) 등이 올해 꼭 봐야 할 여행지로 여수엑스포를 선정했다. 해외 관람객은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나?

목표 관람객 800만~1천만명 중 약 7% 정도를 외국인으로 보고 있다. 참고로 세계박람회 평균 관람객은 내국인 95%, 외국인 5%가량이다.

#### 그렇다면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자랑할 만한 대표적인 킬러 콘텐츠는 무엇인가?

빅오(Big-O), 스카이다워, 엑스포디지털갤러리 이렇게 3대 킬러 콘텐츠가 있다. 빅오는 바다 위에 만들어진 'O'자형 해상구조물이다. 워터스크린, 워터젯, 불꽃, 레이저, 조명, LED 등으로 멀티미디어 특수 영상쇼가 펼쳐지게 된다. 거기에 총 120m 길이에 3열로 이뤄진 해상분수도 가세한다. 박람회가 끝나더라도 상시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 하나 특징은, 바다 위에 무대(이어도)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물속 20cm까지 잠수하는 이 무대에서는 각종 해상쇼, 수상공연, DJ쇼 등 주요 공연이 열리게 될 것이다.

폐시멘트 저장고를 활용한 스카이다워도 있다. 타워 외부는 대형 파이프오르간으로 개조되고, 내부엔 해수담수화 체험시설이 설치된다. 이 파이프오르간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웅장한 소리를 내는 악기로 이미 지난해 10월 기네스북에 등재됐다. 250년 5대에 걸친 독일 파이프오르간 명가 '헤이 오르겔바우'(Hey Orgelbau)가 제작했다.

마지막으로 움직이는 영상관, 관람객과 대화하는 영상관인 엑스포디지털갤러리를 꼽을 수 있다. KTX 여수엑스포역에서부터 국제관을 가로지르는 거리에 조성되는 이



예술관은 길이 218m, 너비 30m의 LED 천장에 환상적인 바다 이미지를 보여준다. 관람객들이 스마트폰에 담은 동영상도 화면에 띄울 수 있다.

이외에도 국내 최초로 바다 위에 세워지는 해상 건축물인 주제관, 국내 최대 규모의 돔형 수조(6,050톤)를 갖춘 아쿠아리움, 태극문양을 본뜬 탄소배출 최소화 건축물인 한국관 등 20여개 전시관에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해상무대에서 공연 시 바람이나 파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염려해야 할 것 같은데...**

워낙 바람이 심하면 공연하지 못한다. 그러나 다행히 멀리론 남해 섬들이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고, 가깝게는 오동도 등이 있어 평상시 이곳 바다는 호수다. 파도가 높은 날은 1년에 며칠 안 된다. 동해안과는 다르다.

**어렵게 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들을 위해 특별히 신경 쓰고 있는 게 있다면?**

조직위원장은 흥행사다. 관람객들을 여수로 찾아오게 하려면 무엇보다 재미가 있어야 한다. 일생일대의 추억과 감동이 남는 박람회가 돼야 한다. 여수박람회 성패의 기본 척도는 얼마나 관람객들이 찾아오느냐에 있다. 많이 올수록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들을 조직위 직원들에게 많이 하고 있다. 사실 공무원들은 재미가 없다(웃음). 나도 평생 공직생활을 했지만, 정서적으로 가장 멋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공무원이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멋있는 것, 재미있는 것을 꾸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파격에 나서도록 자꾸 독려하고 있다. 그를 통해 콘텐츠를 재미있게 꾸미고,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적절히 혼합해 관람객들이 주인이 되어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원양어업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보여주기 위해 박람회장 내에 배를 만들어 참치잡이를 체험케 한다든지, 실제 살아 있는 물고기가 돌아다니는 바다양식장을 조성해 관람객들이 스스로 조작·운영해 보는 것 등이 그것이다. 해양로봇 관도 마찬가지로. 상당수 조종해 볼 수 있다. 쌍방향 교류가 가능한 박람회를 할 것이다. 다양하고 풍성한 문화공연과 체험활동들로 관람객들이 여름밤 남해바다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한여름밤의 남해바다를 제대로 즐기려면 무엇보다 바다가**

**깨끗해야 하지 않나. 여수항 오염이 심각하다는 보도도 꽤 있었다.**

예전 얘기다. 처음 여기에 왔을 때는 바람 불면 시궁창 냄새가 났다. 이곳이 60년가량 항구로 기능해 오면서 폐어구와 생활쓰레기, 중금속 등으로 크게 오염된 탓이다. 바다 밑을 보면 시궁창이 2m가 넘었다. 여수 시내의 하수구가 모두 이리로 통했다. 이를 전부 다른 곳으로 돌렸다. 바다 밑바닥 2m를 모두 파내고, 거기에 모래와 자갈을 깔았다. 해중립(海中林)도 만들었다. 지금은 물고기가 무척 많이 들어온다. 지난번에는 몰래 들어와 낚시하던 사람들이 우리 감사팀에 걸리기도 했다(웃음). 공사한 지 채 2년도 안 돼 수질이 완전히 개선됐다. 3급수 이하였던 것이 1~2급수로 깨끗해졌다.

**우리나라 대형 축제장에 가면 음식이 맛없으면서도 비싸고, 불친절한 경우가 참 많다. 이번 박람회에도 이런 '바가지 상흔'이 기승을 부리는 것 아닌가.**

이번에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완전히 바꿔놓겠다. '여수박람회장에서 먹은 그 음식, 정말 맛있더라. 그런데도 값은 서울보다 더 싸나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게끔 해 두 번 감동을 주려 한다. 당초 음식점 임대료로 110억원의 수익을 올리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러닝 개런티(running guarantee)식으로 수익이 나면 조직위와 음식점이 3:7로 나누기로 했다. 수익이 나지 않으면 우리가 보전해 준다. 또 음식이 최고의 맛과 위생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하나하나 시식하고 현장을 챙기고 있다. 항상 직원들에게 강조한다. 세심한 배려를 곳곳에서 하고 세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박람회가 돼야 한다고.

**북한을 엑스포에 공식 초청했는데, 참석 전망은 어떻게 보나? 참석할 경우를 대비한 준비는?**

엑스포는 지구촌 최대의 평화축제이자 화합의 장이다. 거기에 북한은 세계박람회기구(BIE) 정회원 국가이기도 하다. 당연히 참가하기를 바란다. 북한이 참가할 경우를 대비해 1,220㎡의 독립 전시공간을 준비해 뒀다. 다만 지금 으로서는 북한의 참가 여부가 불투명한데, 참가한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다. 만일 북한이 온다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물꼬를 트는 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위원장은 내륙(전북 전주) 출신이지만 유난히 바다와 인연**



지난 2월 8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여수세계박람회 참가국회의 개막식에서 강동석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장(가운데), 로세르 탈레스 BIE(세계박람회기구) 사무총장(왼쪽), 이준희 여수세계박람회 정부대표(오른쪽)가 박수를 치고 있다.

**이 깊다. 부산항만청에 근무한 이래 나중에 해운항만청장까지 역임했다. 특히 8년간 영종도에서 단군 이래 최대 역사라는 인천국제공사를 맡아 성공리에 개항했다. 위원장에게 바다(해양)는 어떤 의미인가?**

1974년 교통부 부산항만청 해무과장으로 부임해 국내 최초의 부산항 5부두, 국제여객부두 등을 건설했다. 이후 운영사업에도 참여하면서 바다와 인연을 맺게 됐다. 1976년에는 해운항만청 창설멤버로 선원선박국장, 1992년 해운항만청장을 지냈다. 1994년부터 2002년까지 8년 동안 영종도에서 바다를 메워 인천국제공항을 건설했다. 가만히 생각하면 내 생애에서 중요한 12년을 매일 바다를 보며 생활했다. 거기에 2009년 6월 여수박람회 조직위원장을 맡아 3년째 남해바다에서 일하고 있으니 바다와는 여간 깊은 인연이 아닌 듯싶다. 바다는 생명의 원천이고 모든 생명의 어머니다. 도전의 대상이 아니라 더불어 생존해야 하는 터전이다. 아끼고 사랑하고 바다의 큰 아량과 혜택에 보답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인연이 깊는데, 은퇴 이후에 바다 가까운 곳에 가서 사셔야 하는 것 아닌가?(웃음)**

이미 인천공항 건설 때 영종도 주민들하고 거기서 집 짓고 같이 살기로 약속이 돼 있다. 이 일 안 맡았으면 작년, 재작년에 벌써 가서 조용히 살고 있었을 텐데, 박람회가 끝나면 내년 봄에 시작해서 집 한 채 짓고 살려 한다.

**거기서 주로 어떤 일을 하시려 하나?**

전혀 할 일 없다. 지금 나이가 몇인데(올해 강동석 위원장은 74세임), 이젠 다시는 (이런 일) 안 해요. 하하하.

**앞으로 남은 기간 주안점을 둘 부분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큰일은 잘 하는데 세세한 마무리는 소홀하기 쉽다. 하지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마무리가 아닌가. 지금도 조직위가 계속 점검하는 것이, 어린이가 박

람회장에서 뛰어놀다가 어디 다칠 만한 데가 없나, 노인들이 발을 헛디뎠다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을 만한 요인이 없나 하는 점들이다. 세심한 마무리에 무엇보다 신경 쓸 생각이 다. 또한 전체적인 프로그램 운영뿐 아니라 색조·배치 등에서도 바다와 박람회장 환경과 건물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 세련미를 높일 것이다. 세심한 마무리와 세련된 운영, 이 두 가지에 가장 주안점을 둘 것이다.

**국민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서 잠깐 언급됐지만, CNN은 2012년 꼭 가봐야 할 7곳 중 1위로 여수엑스포를 순위에 올렸고, 여수엑스포 마스코트인 '여니·수니'를 10대 여행기념품으로 선정했다. 론리 플래닛은 '2012년 꼭 해야 할 10가지'(Top 10 things to do in 2012) 중 하나로 여수엑스포 관람을 꼽았다. 이처럼 전 세계가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여수엑스포는 관람객들에게 일생 동안 잊혀지지 않는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확신한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 위원장인 나를 포함해 420명 조직위 직원 모두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다. 국민 여러 분께서도 올려름엔 여수엑스포장을 꼭 한번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수박람회의 성공 개최, 자신하시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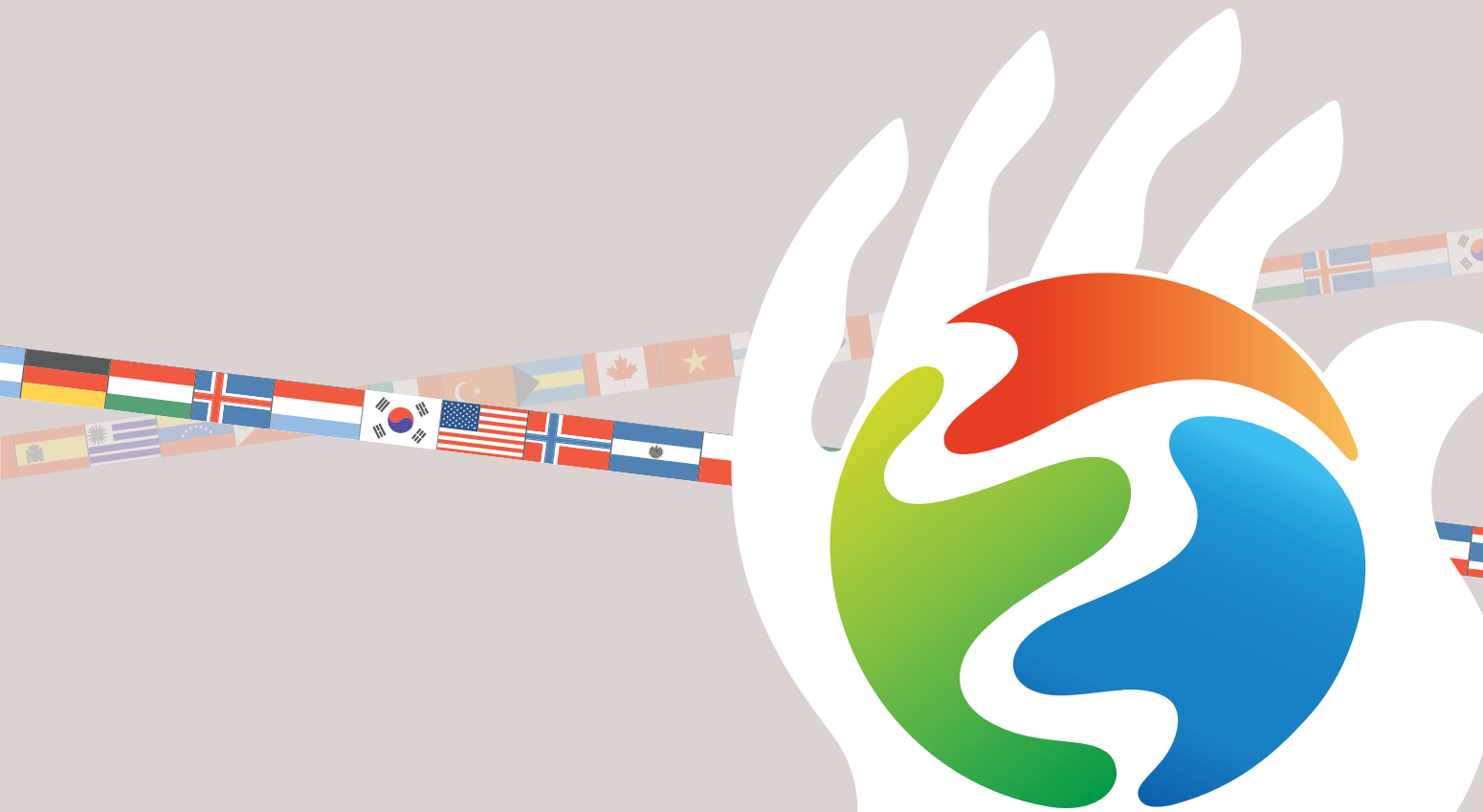
자신한다면 주제 넘어 보일지도 모르지만 성공할 것으로 본다. 말이 씨가 되고, 모든 일은 마음먹는 대로 되는 법이다.

**준비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텐데 장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박람회가 큰 성공을 거둬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전기가 되길 기원한다. 또한 평생 국가에 헌신하고 은퇴를 앞둔 위원장께도 유종의 미를 거두는 자리가 되길 『나라경제』 독자와 함께 응원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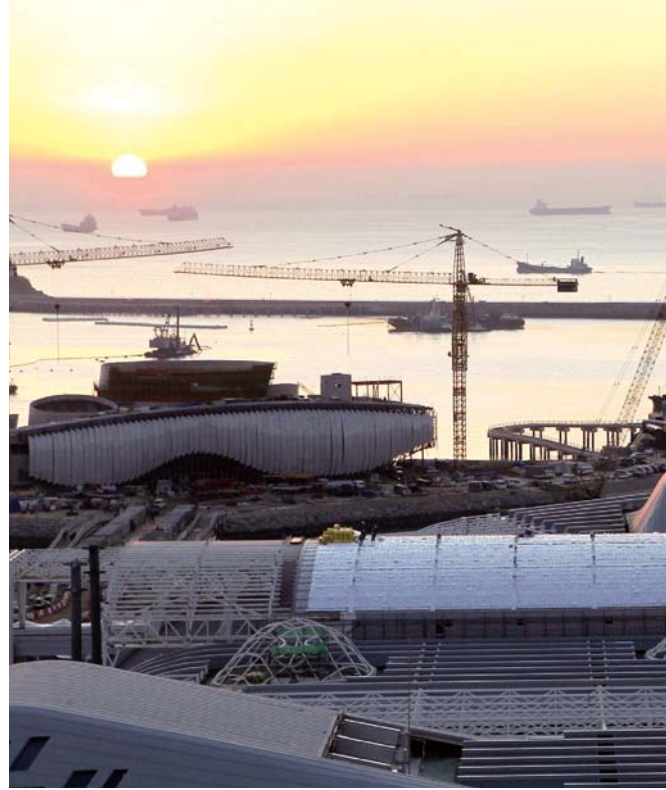
박동석

남해의 미항(美港) 여수에서 개최되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1993년 대전엑스포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개최 되는 박람회이자 '해양'을 주제로 한 세계 최초의 박람회이기도 하다. 오랜 세월 박람회는 수많은 발명품과 아이디어를 선보이는 장이자 인류의 축제였다. 올해는 어떤 기술과 문화를 선보일지, 『나라경제』가 개막 막바지 준비에 한창인 여수세계박람회 현장을 다녀왔다. '93일간의 바다 이야기', 잊고 지냈던 바다의 가치와 매력에 풍덩 빠져보자.

## 2012 여수세계박람회 D-30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 SPECIAL THEME



# 여수세계박람회, 새로운 해양개발 패러다임 제시한다



**최승민**  
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  
smchoe@kordi.re.kr

◎ 지구는 우주에서 바라보면 마치 보석과 같이 빛나는 푸른 별이다. 지구가 이렇게 푸르게 보이는 이유는 지구 표면적의 71%가 바다이기 때문이다. 지구는 은하계의 수많은 행성 중에서 유일한 물의 행성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해양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해양은 21세기 인류가 직면하게 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열쇠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류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 세계 석학들의 모임인 '로마클럽'에서는 "향후 자원고갈과 지구환경 변화 등으로 인류 생존은 커다란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 왔다. 그 결과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양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해양은 식량과 식수 문제, 자원 및 환경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인류에게 남은 지구상 유일한 미개척 영역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 해양에는 막대한 양의 석유 및 천연가스, 메탄 수화물, 니켈, 철, 망간, 구리 등이 다량 존재하고, 전 지구 생물종의 80%가 서식하며, 무한한 식량자원의 저장고이자 지구 기후변화의 최대 조절자이기도 하다.

## 2020년 국내 해양산업 창출 GDP, 10%로 전망

우리나라는 해양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한반도는 1만1,542km에 달하는 긴 해안선과 3,153개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이런 천혜의 환경은 해양국가로서 한반도의 정치적·외교적·지정학적 의미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해운·조선산업에서도 월등한 국제경쟁력을 갖춰 향후 세계 초일류 해양강국 건설을 위한 성장잠재력을 구비하게 됐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가 열릴 여수는 인근 도시에 제철, 항만, 조선 등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강한 해양산업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어 해양플랜트 산업의 최적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진은 여수 신항의 2012년 새해 일출 모습

현재 국내 해양산업에서 창출되는 GDP는 7%에 이르고 있으며, 2020년에는 대략 1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무한한 '해양잠재력'을 지닌 우리나라에서 해양을 주제로 하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가 개최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세계박람회는 올림픽의 10배가 넘는 파급효과가 기대될 정도로 규모가 큰 국제행사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 국민의 자신감을 고취하고 수도 서울의 도시구조에 혁신을 가져왔다면, 1993년 개최된 대전엑스포는 중부권에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고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성장하는 실질적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2002년 한·일 월드컵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수세계박람회의 기대효과는 얼마나 될까? 우선, 생산유발효과 12조2,328억원, 부가가치 5조7,201억원, 고용효과 7만8,800명 등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여기에 해양 관련 산업 및 문화의 발전도 기대해볼 만하다. 연안 해상교통 활성화 등을 통한 해운산업 발전, 차세대부양쾌속선(위그선)과 같은 첨단 해양교통수단 도입, 차세대 해양관광·레저산업, 해양레포츠, 해양문화 등의 분야가 더욱 발전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해양자원 탐사, 해양오염 제거기술, 기

후변화 예측 적응기술 등 미래 인류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첨단 해양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경제 외적인 기대효과로는 박람회에 전시된 제품과 기술, 다양한 형태의 문화, 예술, 공연 등을 통해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을 홍보할 수 있다는 점이 손꼽힌다.

이처럼 여수세계박람회로 벌어질 이익을 계산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박람회 사후 발전 방안에 대한 고민일 것이다.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정신적 유산인 바다의 가치를 최대한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박람회장 일대를 향후 해양레저관광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여수세계박람회를 계기로 그동안 비교적 지리적·문화적으로 '변방'에 속했던 여수는 한려수도 및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세계인에게 알릴 수 있는 거점도시, 동북아 해양레저의 허브도시로 거듭날 것이다.

### 바다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부의 창출

21세기 들어 유럽연합을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해양강국들이 국가의 위상을 더욱 더 강화하기 위해 해양정책의 다변화를 통해 미래 해양지향형 경제발전 모델을 구축·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를 감안할 때 여수세계박람회가 그 주제를 '바다'로 택한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한 선택이었으며, 대한민국이 세계적 해양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특히 개최도시인 여수의 경우 인근 도시에 제철, 항만, 조선 등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강한 해양산업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어 해양플랜트 산업의 최적지로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오징어 하나로 연간 5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일본의 하코다테, 요트 하나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고 세계적 요트의 메카로 도약한 호주의 골드코스트, 해양특구 개발을 적극 추진 중인 중국 저장성의 사례는 우리에게 바다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부의 창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여수세계박람회가 지구 온난화로 대변되는 현재의 위태로운 바다 생태계를 보존하면서도 동시에 지속 가능한 해양개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실천 목표를 달성하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여수엑스포에 대한 관심이 해양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 관심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박재**

# 여수를 신해양경제 선도도시로!



오운열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과장  
woho@milm.go.kr

◎ 세계박람회는 인류문명의 성과와 바람직한 미래상을 모색하는 전시·토론의 장으로 월드컵, 올림픽과 더불어 3대 세계축제의 하나로 자리잡아 왔다. 초기의 박람회는 신제품·신기술을 출시하면서 국가의 산업기술을 과시하는 측면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인류 공동의 관심사항을 모색하고 미래사회의 새로운 가치관을 전파하는 장이 되고 있다. 이러한 연장선 상에서 여수세계박람회는 최근 인류가 직면한 기후변화 등 인류 공동의 문제를 해양을 통해 극복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담고 있다.

해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구 표면적의 71%를 차지하는 바다에서는 지구 생물의 약 90%가 서식하고 지구 산소 중 75%가 생성되며, CO<sub>2</sub>의 50%가 바다에서 정화되는 등 인류의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매립 및 연안개발로 1987년부터 2005년까지 653 km<sup>2</sup>(20%)에 달하는 갯벌이 상실됐다. 또한 최근 35년간(1968~2002년) 한반도의 해수면 표층수온은 0.85℃ 상승했으며 해수면은 세계 평균의 두 배인 5.4mm가 상승하는 등 해양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기후변화와 같은 인류의 위기에 대한 공동의 대응방안 모색이 절실하다. 또한 1994년 UN 해양법 발효 이후 연안국의 해양자원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이 도입돼 해양에

대한 세계 각국의 치열한 경쟁이 고조되고 있어 지속 가능한 해양이용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 사람과 바다, 연안이 함께하는 박람회

여수세계박람회는 해양과 연안의 가치를 재조명함으로써 최근의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 인류의 현안과제를 해결하려는 국제적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국가적으로도 우리의 국격을 향상하고 해양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모멘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여수 일대를 중심으로 남해안 지역발전의 기폭제로 작용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해양과학기술과 국내 해양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안고 다가오는 5월, 전 세계인을 찾아갈 여수세계박람회는 다음 세 가지 비전을 제시한다.

첫째, 해양환경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새로운 해양문화를 창달하고자 한다.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해양을 통해 전 지구적 환경 문제의 대안을 모색하고 국제사회의 공존과 협력을 도모하는 한편, 여수를 해양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해양경제 선도도시로 조성할 것이다.

둘째, 해양에너지·바이오 기술 등 첨단 해양기술 개발과 해양레포츠 및 관광산업 등 신해양산업 육성을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3월 6일부터 전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홍보 투어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투어버스 안과 밖에 박람회를 소개하는 동영상 상영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입장권도 판매한다. 사진은 투어버스 앞에서 홍보를 펼치는 모습



통해 해양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가발전 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한다.

셋째, 남해안 선벨트 구상 등과 연계해 지역개발 효과를 극대화하고, 여수 및 인근 지역을 세계적인 수준의 해양관광레저벨트로 조성해 지역균형발전의 성장거점으로 육성·지원한다.

이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와 조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해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먼저 사람과 바다, 연안이 함께하는 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즉, 해양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바다에 대한 친근감을 높여 바다와 인간의 소통이라는 해양이용에 대한 시대적 소명의식을 전달한다.

다음으로 감동과 참여가 있는 박람회 개최를 준비한다. 특별한 전시연출과 다양한 볼거리 등을 통해 평생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하고, 인종·문화의 장벽을 넘어 관람자 상호 간에 소통·공유하는 장을 마련할 것이다.

나아가 첨단 과학기술과 미래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첨단 IT기술, 해양과학기술이 융합된 미래해양비전, 가상현실, 과거의 해양 등을 입체적으로 체험하는 박람회를 구현하고, 기술보유가 어려운 후발 국가를 위해 환경친화적 첨단 해양기술을 전시·공유하며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해양산업 및 과학기술의 비전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사후활용에 성공하는 박람회를 목표로 한다. 리스본 등 사후활용에 성공한 타 박람회를 벤치마킹해 여수 인근이 행사 이후에도 해양과학기술과 산업이 조화된 친환경 해양도시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

끝으로, 국제적 협력과 평화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21세기 해양에 관한 새로운 국제적 협력과 평화적 이용을 촉구하

는 ‘여수선언’을 채택하고, 해양 관련 개도국 지원 프로그램인 ‘여수프로젝트’를 시행할 계획이다.

### ‘인류와 해양의 공존’ 메시지 담은 ‘여수선언’

여수선언과 여수프로젝트는 해양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확산과 전 지구적 공동의 노력이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선언문에는 자원의 보고이자 생태계의 근원으로서 해양과 연안의 중요성, 무분별한 자원 이용과 오염물 유입 등으로 파괴돼 가는 해양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공동의 노력,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현상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 해양자원과 에너지 이용을 통한 녹색성장, 해양문제 해결을 위한 해외개발원조의 필요성, 문제해결 역량강화를 위한 여수프로젝트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며, 이를 통해 바다를 통한 인류와 해양의 공존이라는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여수프로젝트는 여수선언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해양환경 문제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대처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이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 공약한 여수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위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 이후에는 1천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본 사업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여수프로젝트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되면, 당면한 해양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적 문제의식 제고와 공동의 노력이 이끌어내고, 개발도상국의 문제해결 능력 향상 및 해양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지**



01



02

01 여수세계박람회장 조감도

02 버려진 시멘트 저장고를 개조해 만든 스카이다워

# 오.감.만.족. 체험형 박람회가 온다

◎ KTX 개통으로 서울에서 3시간 40분, 미항(美港)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아름다운 남해를 품고 있는 여수에서 한 달 후면 전 세계인의 축제 세계박람회가 개최된다.

행사 개최에 앞서 조금 일찍 방문한 길, 여수엑스포역에 내리면 전시관들이 한눈에 펼쳐지고 건물들 너머로 보이는 바다는 마치 호수처럼 잔잔하다. '부~웅' 하는 뱃고동 소리에 고

개를 들어보니 버려진 시멘트 저장고를 개조해 만든 스카이다워에서 들려오는 것이었다. 스카이다워 외부에는 파이프오르간이 설치돼 있는데 시험 연주가 한창이다.

박람회장 곳곳은 막바지 준비로 분주했다. 이번 박람회의 킬러 콘텐츠로 손꼽히는 '스카이다워', '빅 오(Big-O)' 등은 제 모습을 거의 찾았고 완공된 전시관들의 내부에서는 전시물 설치 전 마감공사가 진행 중이다.

전시관의 규모나 위용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뜨거운 여름 별을 가려줄 차양막이 행사장 곳곳에서 눈에 띈다. 관람객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부분이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시설물은 '빅 오'라는 해상구조물로 박람회 기간 내내 야간 뉴미디어쇼가 펼쳐진다고 한다. 해상에 자리한 둥그런 모양의 구조물에서 레이저, 빛, 소리, 영상 등이 해상분수쇼·공연과 어우러질 계획이다. 밤바다를 바라보며 오감을 자극하는 공연을 즐기다 보면 더위도 가시지 않을까.

대부분의 전시관은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이었기에 현재 공



사를 마무리하고 전시 준비에 한창인 '기후환경관'을 방문했다. 겨울폭풍 블리자드를 체험할 수 있는 얼음터널을 지나 북극빙하 체험실로 들어서니 천장과 바닥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얼리는 작업이 한창이라 냉기가 훅 끼쳤다. 시공사인 휴먼씨의 백지영 과장은 “직접 만져볼 수 있도록 전시장 가운데 얼음 구조물을 세워 체험형 공간으로 구성했다. 더 열린 후에 모양을 잡고 전시 틀을 갖춰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람객들은 북극의 환경을 체험하고 난 뒤 자연스럽게 영상 관람 공간으로 이동해 기후변화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담은 영상물을 보게 된다. 한편 기후환경관 옆에 위치한 '아쿠아리움'은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해상에 건설된 '주제관'과 육지의 '해양산업기술관'을 이어주는 다리를 거니노라면 한쪽에는 드넓은 남해가 한쪽에는 해상무대가 펼쳐진다.

전시물을 일일이 관람한 것도 아닌데 박람회장 전체를 둘러보면서 걷다 보니 2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다. 여수세계박람회는 80여개의 특화·전시시설을 비롯해 원양어업체험장, 바다숲, 에너지파크 등 체험형 시설을 선보인다. 모형 원양어선에 승선해 4D로 재현된 참치를 잡고 바다숲에 마련된 미니 양식장에서 살아 있는 물고기를 볼 수도 있다.

조직위 측에 따르면 5월 12일 개막을 앞둔 현재 96.5%의 공정률(3월 초 기준)을 보이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4월 말로 예정된 모의박람회를 개최하려면 3월까지의 시설과 행사, 전시연출 등 대부분의 준비를 완료해야 할 것이다. 이에 1일 300여대의 장비와 4천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완벽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살아 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모토로 한 여수엑스포는 지구의 3분의 2를 차지하면서도 멀게만 느껴졌던 해양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다. 아울러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연으로 축제의 장이 될 전망이다. 지구가 아닌 해구(海球)의 시대를 향한 새로운 비전, 이제 곧 여수에서 펼쳐진다. **▶**

양은주 나라경제 기자

자원봉사자

INTERVIEW

조유은 이화여대 영어영문학과 4학년

“대한민국을 알리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어”

자원봉사자로 자원하게 된 계기는?

전라도민으로서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에 기여해 왔다. 이번 박람회 참가국이 105개국이나 되는데 이런 국제적 행사에서 활동해보고 싶었다. 스페인에서 6년간 살았기에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스스럼없이 다가갈 자신이 있다. 또 대학교 마지막 4학년을 새로운 경험으로 채우고 싶었다.

자원봉사 경력이 많다고 들었다. 그간 활동한 경력을 간단히 소개한다면?

자원봉사 경력이 많진 않다. 하하. 그저 교육봉사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 교내 언어교육원에서 외국인 한국어 도우미를 했고, 3학년 때부터 영어스터디센터에서 대학생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영어토론 어시스턴트를 맡아 활동했다.

박람회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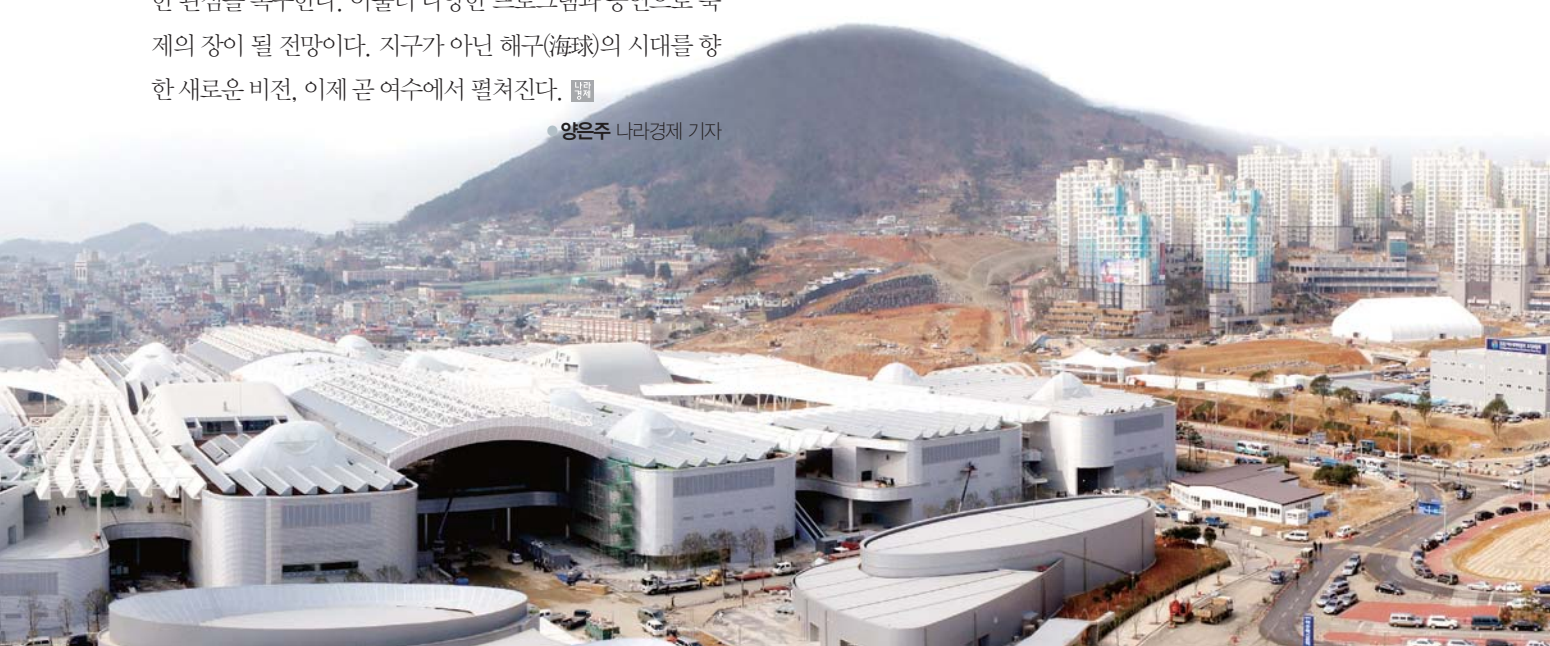
박람회 자원봉사자들은 평일, 주말별로 기수가 정해져 있는데 나는 7기로 활동한다. 해외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위치 안내 등을 통역하게 될 것이다.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있다면 어떤 내용인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박람회에 대한 소개 및 운영 개요, 자원봉사자의 마음가짐이나 행동 등 봉사자로서의 자세, 관광객을 대면했을 때의 행동·어투·화장법, 끝으로 응급처치에 대해 배운다.

끝으로 여수의 매력과 포부를 들려 달라.

여수에 대해 이야기할 때 '미항(美港)이라는 말이 꼭 붙더라. 그만큼 아름다운 곳이다. 여수가 하나의 창구가 되어 한국의 멋진 문화와 전통, 앞서나가는 기술 등을 지구촌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이번 활동을 통해 조금이나마 대한민국을 알리는 데 기여하고, 내 오랜 꿈인 통역사의 길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 미래 저탄소 견본도시, 여기 있네!



**조용환**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홍보실장  
c4951@naver.com

◎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세계 최초로 바다와 연안에서 개최되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는 지금까지의 박람회와 차별화된 친환경박람회를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추진 중인 박람회 조성현황과 대표적 친환경교육 장소인 ‘에너지파크’, 폐사일로(버려진 시멘트 저장고)를 개조한 ‘스카이트워’ 등을 소개한다.

## 시설물 스스로 전력 공급하는 시스템 갖춰

조직위에서는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저탄소형 친환경박람회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람회장 인근의 준설토 투기장을 매립해 신재생에너지 생산 시설을 설치하고 각 전시관들이 태양열·해수열 히트 펌프나 풍력 등을 활용해 전력을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태양광 파고라(Pergola, 햇빛 가림 지붕), LED 블록, 솔라 트리(Solar tree) 등의 조정 시설물들도 전력을 스스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전시관에는 친환경 건축자재, 고효율 조명기구, 우수처리시설과 중수도시설을 설치했으며, 박람

회가 끝나고 철거하는 전시관은 재활용이 쉬운 건축자재를 최우선으로 사용했다.

박람회가 바다를 주제로 하는 만큼 여수신항 수질을 2등급 이상이 되도록 개선하기도 했다. 2등급은 관광과 수산생물 서식에 적합한 수준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08년 여수신항 해양환경개선대책을 수립했고, 유관기관과 힘을 합쳐 수질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



진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신항으로 유입되는 육상오염원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주택가 등 배후지역의 하수관거 정비를 마쳤으며, 빅 오(Big-O) 구역을 시작으로 방파제 안쪽까지 오염퇴적물 준설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진행했다. 또한 해상쓰레기 수거선인 청항선 2척을 투입해 부유쓰레기를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있으며, 바닷속에 버려진 페타이어나 페그물 등 수중침적폐기물 178톤을 제거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박람회가 개최되는 여수신항 지역은 현재 2등급 이상의 수질로 개선됐다. 그리고 최근에는 해양수질자동측정소를 여수신항에 설치해 개선된 수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 사진으로만 보던 태양광발전소가 내 눈앞에

에너지파크는 많은 인파로 북적이는 전시관과는 달리 야외에서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신재생 에너지 생산시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에너지 관련 놀이시설에서 마음껏 뛰어놀면서 에너지 생성원리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친환경교육 장소다. 에너지파크는 여수역과 크루즈터미널 사이에 8만3,121㎡ 규모로 조성되며 에너지 생산시설·체험시설 및 온라인 전기버스 운행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에너지파크 생산시설은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단지로 한국중부발전이 2MW급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그동안 사진에서만 봐오던 태양광발전소를 이곳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생산시설 한쪽에 마련된 홍보관에서는 전기의 생성원리와 전력의 생산과정 등 복잡한 역학이론을 알기 쉽도록 풀어헤 놓은 전시물을 통해 에너지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되는 발전량은 약 271만kw로, 1년 동안 700가구에 전기를 동시에 공



⇨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눈으로 직접 보고 에너지의 생성원리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에너지파크(조감도)  
↓



급할 수 있는 양이며, 이로 인해 온실가스를 연간 1,600톤 감축하고 270ha의 산림을 가꾸는 효과가 발생한다.

에너지파크 체험시설은 신재생에너지의 생성원리를 놀이 시설에 접목시킨 놀이공원이다. 어린이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에너지 미로게임, 자전거물대포, 댄스플로어, 재활용로켓 등 에너지 관련 내용으로 구성된다. 관람객은 햇빛, 물, 파

도, 바람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해 직접 몸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체험을 할 수 있다. 한 예로 물을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자전거물대포'는 관람객이 자전거 페달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고, 그 전기로 물대포가 물을 수차로 쏘아 보내면 수차가 돌아가며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다. 수차에서 생산된 전기량은 디지털 계기판에 표시돼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생산됐는지 알 수 있다.

에너지파크 수변로에서 운영되는 친환경교통수단인 온라인 전기버스를 시승해 볼 수도 있다. 온라인 전기버스는 코드를 꽂아 충전하는 일반 전기차와 달리 도로 위를 달리면서 무선으로 전원을 공급받는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타임지가 2010년을 빛낸 세계 50대 발명품으로 선정할 바 있다.

### 폐사일로에서 아름다운 선을 퍼져나와

박람회장 내에서 가장 높은 수직구조물인 스카이다워(57m)는 폐사일을 재활용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 문화공간이자 여수세계박람회를 기념하는 영구시설로 보존될 계획이다. 특히 스카이다워는 산업화 시대의 임무를 다하고 더 이상 활용도가 없어진 사일을 이용한 조형물이라는 점에서 친환경박람회를 표방한 여수세계박람회에 딱 들어맞는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다.

스카이다워 외부에는 하프의 형상을 한 거대한 파이프오르간을 설치했는데, 반경 6km까지 소리가 울려 퍼져 '세계에서 가장 큰 소리를 내는 파이프오르간'으로 기네스 인증(2011년 10월 21일)을 받기도 했다. 파이프오르간은 피아노에 버금가는 80음계까지 소리를 낼 수 있으며, 매일 6회 파이프오르간 라이브 공연이 스카이다워 앞 광장에서 열린다. 또한 개·폐장 시간을 뱃고동소리로 알리는 시보 기능을 하며 참가국 국가 연주, 현장 음악회 등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도 선보일 계획이다.

사일로 1호기 내부는 남해안의 비경 등을 보여주는 영상관으로 운영하며, 2호기 내부는 해수담수화시스템을 설치해 관람객들이 담수화 과정을 직접 보고 정수된 물을 시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여수세계박람회는 박람회장을 저탄소 녹색성장 견본도시로 조성하고, 다양한 에너지 관련 체험시설과 프로그램을 통해 녹색성장의 의미를 되새기고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박람회가 될 것이다. 박람회

# NFC(근접통신) 활용해 '스마트 엑스포'로 업그레이드



홍진배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정책과장  
jbhong@kcc.go.kr

◎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축제로 꼽히는 엑스포는 인류의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하는 경제·문화 분야의 올림픽이다. 증기기관차, 전화기, 자동차 등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혁신적 기술 및 기들의 역사가 모두 엑스포에서 시작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도 여수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자 여수엑스포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와 손을 잡았다. 바로 NFC(근접통신, Near Field Communication) 기술을 세계 최초로 엑스포에 적용해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IT 응용서비스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새로운 기술을 보여주는 엑스포 취지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앞선 IT 기술을 엑스포에서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IT 기술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계기이기도 하다.

## 근접통신 기술로 손쉽게 정보 교환을

NFC란 두 대의 단말기가 약 10cm 이내의 거리에서 데이터를 양방향으로 통신할 수 있는 기술로, 이용자가 스마트폰을 인식장치에 가져다 대는 것만으로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NFC는 모바일 결제뿐만 아니라 개인인증, 티켓팅, 모바일 마케팅 수단 등으로 활용될 수 있고, 향후 모바일 분야를 넘어 다양한 산업으로 파급돼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방통위는 민관 협의체인 'Grand NFC

Korea Alliance'를 구성하고, NFC 결제 인프라 확산 및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NFC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한편 조직위, 방통위, 국내 업계는 엑스포를 찾는 대국민에게 NFC라는 신기술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관련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뜻을 모았다. 지난 2월 8일 조직위와 방통위는 여수엑스포 NFC 시범사업 추진

지난 2월 8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여수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여수엑스포에 NFC 기반의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적용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NFC 관련 기술 시연을 참관 중인 방통위 김중식 상임위원과 강동석 여수엑스포 조직위원장



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여수엑스포에 NFC를 적용한 응용서비스 개발을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여수엑스포 시범사업에는 이동통신사(SK플래닛·KT·LG유플러스), 카드사(신한카드·KB국민카드·삼성카드·롯데카드·하나SK카드·이비카드), 솔루션업체(AQ주식회사·큐앤솔브·유비벨록스·엠펙비전·솔라시아),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총 17개 업체·기관이 참여했다.

여수엑스포는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국제행사라는 점에서 국내 NFC 기술을 세계에 선보일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여수엑스포에서 선보이게 될 다음과 같은 다양한 NFC 응용 서비스들은 관람객들에게 편의와 재미를 동시에 안겨줄 것으로 기대된다.

### NFC로 관람하고 쇼핑한다

첫째, 박람회장 내 전시물에 NFC 태그를 부착해 '전시물 정보 음성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시관의 개별 전시품목에 부착된 NFC 태그를 스마트폰으로 터치하면 전시품 관련 정보, 다국어 음성 안내 서비스 등을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전시 관람을 도와주는 개인 안내인 역할을 수행하며, 로봇관·한국관 등 다양한 전시관들에서 서비스가 구현될 예정이다.

둘째, 스마트폰 하나로 손쉽게 결제하는 'NFC 결제 서비스'를 여수엑스포 내 약 300개의 계산대에 적용할 계획이다.

카드사들의 프로모션이 함께 진행되면서 모바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이용자들은 할인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엑스포 셔틀버스 승차장 주변에는 'NFC 쇼핑 월(Shopping Wall, 가상스토어)'이 설치된다. 서울 지하철 선릉역에 설치돼 이미 화제가 된 바 있는 QR코드 가상스토어는 2011 칸 국제광고제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했을 만큼 주목을 끌었다. 엑스포에 구현되는 가상스토어는 NFC 기능을 접목해 NFC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하고 집에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여수 특산품 판매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어 향후 지역 경제와 연계한 서비스 모델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넓은 환승주차장에서 한 번의 터치만으로 자신의 차량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NFC 기반의 스마트 주차장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관련 서비스는 여수엑스포 환승주차장 6개소에 마련될 예정이며, NFC를 통해 주차한 위치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어 널리 이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섯째, NFC 태그 기반의 '스마트 포스터 및 홍보물'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행사장 내의 포스터에 NFC 스마트폰을 터치할 경우 여수엑스포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곳곳에 비치된 홍보물을 터치해 다양한 NFC 응용서비스 활용 방법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NFC 응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NFC 체험관'은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채워줄 것이다. NFC 체험관에서 버스도착 정보, 도어락, 스마트 포스터, 미디어폴 등 다양한 NFC 서비스를 체험해볼 수 있으며 NFC의 개념 모바일 카드를 발급받는 방법과 NFC 활용방법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여수엑스포는 국내 NFC 활성화 정책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람회 기간 동안 내외국인들에게 국내의 앞선 NFC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여수를 방문할 800~1,200만명의 관람객들이 잠재적인 NFC 이용자인 것이다. 또한 그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축적된 다양한 NFC 기술을 여수엑스포에 적용함으로써 국내 NFC 업체들의 해외 진출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5월, 세계인들이 손안의 스마트폰을 통해 아름다운 여수의 바다를 즐길 수 있는 '스마트 NFC 엑스포'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 생산유발 효과 12조원, 고용창출 효과 7만8천명



김영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yjkim@kcti.re.kr

◎ 2012 여수세계박람회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여러 부문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일으키는 대규모 이벤트다. 경제적으로는 개최도시 및 국가 그리고 스폰서들에게 직·간접적인 경제이익을 발생시키며,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사회적 자산을 체계화하고 자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사회통합 수단으로서 정치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세계박람회는 주변 지역과 국가에 경제적 실익을 창출한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기반시설 투자비와 관광객 소비지출에 의해서 일차적으로 발생된다. 여수세계박람회의 투자비는 2조1,590억원, 관광객 소비지출은 1조2,400억원으로 추산된다.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박람회 개최를 통해 전국적으로 생산유발 효과는 12조2,328억원, 부가가치 효과는 5조7,201억원, 고용창출 효과는 7만8,833명에 이른다고 한다.

사회·문화적 효과는 무형적이기는 하나 광범위하다. 여수세계박람회는 남해안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화와 기술을 체계적으로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국가 브랜드 가치를 효과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다. 브랜드 프리미엄은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후방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다. 개최지의 브랜드 프리미엄은 세계박람회의 유산

(legacy)이 돼 지속적 효과를 미친다.

아울러 여수세계박람회는 남해안 지역 발전과 국가 관광 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 남해안권, 특히 서남권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발전 기반도 미흡하다. 그러나 여수세계박람회를 계기로 고속철도 등 기반시설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며 관광호텔이나 크루즈터미널과 같은 관광기반시설도 대폭 확충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각종 관광상품 개발과 마케팅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 중이다. 여수세계박람회를 계기로 남해안 지역은 세계적인 해양레저관광의 거점으로 주목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면 한국관광은 외래관광객 1천만명 시대를 넘어 질적 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는 쉽게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준비 부족으로 국가 브랜드 디스카운트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 엑스포 자체가 흥행에 성공할지라도 국가 및 지역재정 투입의 후유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사전단계 전략, 박람회 기간 중 전략, 사후단계 전략이 체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특히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과 박람회 효과를 확산시키기 위한 대비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박람회 유산을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잘 유지시키느냐가 박람회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박정**

# 햄버거, 지퍼, TV 너희들 어디서 왔니?

‘경제·산업올림픽’이라 불리는 세계박람회는 산업과 기술, 문화 등 총체적 문명이 어우러지는 지구촌 축제다. 각종 발명품과 이슈를 낳은 세계박람회의 이모저모를 소개한다.

## 최초의 세계박람회

근대 최초의 세계박람회는 1851년 5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만국 산업 생산품 대박람회’(Great Exhibition of the Works of Industry of all Nations)다. 25개국이 참가해 1만3천여개의 전시물을 출품했으며 600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갔다. 런던박람회가 근대 최초의 세계박람회로 꼽히는 이유는 ‘국제성’ 때문이다. 런던 이전에도 유럽 몇몇 국가에서 박람회를 열었으나 모두 주최국만 참가하는 박람회였다.

## 희대의 발명품, 여기 모두 모였네

세계박람회는 새로운 기술과 산업이 만나는 거대한 장이 돼 왔다. 런던박람회(1851년)에선 증기기관이 전시됐다. 증기기관은 사람의 근육에 의존하던 노동방식을 기계로 바꾼 거의 최초의 발명품으로, 런던박람회 이후 증기기관차가 널리 보급됐다.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한 필라델피아박람회(1876년)에선 전화기가 처음 선보였고, 박람회 폐막 4년 뒤 전 세계에는 25만대의 전화기가 보급됐다. ‘발명왕’ 에디슨이 화려하게 등장한 파리세계박람회(1878년)도 빼놓을 수 없다. 에디슨은 파리박람회에 전구를 출품해 주목 받았고, 자신이 직접 노래를 녹음한 축음기로 관람객들을 놀라게 했다. 자동차를 처음 선보인 것은 벨기에 안트베르펜박람회(1885년)였다. 미국 세인트루이스박람회(1904년)에선 비행기가 전시됐으며 뉴욕박람회(1939년)에 모습을 드러낸 TV는 20세기 미디어의 등장과 새로운 문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됐다.

선진국들이 신기술을 뽐내는 장으로 박람회가 커다란 역할을 해왔지만 획기적이고 거대한 물건들만 등장한 것은 아니다. 그 대표적 예가 지퍼(Zipper). 지퍼는 시카고박람회(1893년)에서 등장한 획기적 발명품으로, 당시엔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이후 널리 퍼져 인류에게 편리함을 안겨줬다. 시카고박람회에선 초대형 회전관람차와 검도 최초로 등장했다.

## 박람회가 낳은 또 다른 스타

박람회가 건물 안에서만 펼쳐지는 것은 아니다. 1904년 세인트루이스박람회장 밖에선 비행기보다 더 유명한 물건들이 태어났다. 바로 햄버거와 아이스크림콘이다. 당시 아이스크림은 접시에 달아서 파는 방식이었는데, 아이스크림이 불티나게 팔려 그릇이 모자라게 됐다. 이에 과자로 아이스크림을 싸서 판 것이 아이스크림콘의 시초가 된 것. 햄버거 또한 몰려드는 손님을 감당할 수 없어 빵 사이에 고기와 채소를 ‘대충’ 끼워 내놓은 음식점 주인의 아이디어가 빛을 발한 역작이다. <sup>1)</sup>

자료: 「바다에서 꿈꾸는 미래 여수에서 하나되는 인류」(여수엑스포 조직위)

● 양은주 나라경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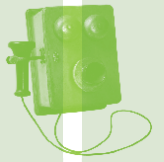
〈표〉 국제박람회기구의 공인박람회

구분	등록박람회 (Registered Expositions)	인정박람회 (Recognized Expositions)
범위	주제에 제한이 없고 포괄적 전시	분명한 주제를 가짐
개최기간	6주~최대 6개월	3주~3개월
개최시기	5년마다 한 번씩	등록박람회 사이에 개최
전시관 설치	참가국이 부담, 전시관 면적은 제한 없음	개최를 원하는 나라에서 유치해 열게 되며 주최국이 건축
예	2010년 상하이세계박람회(중국)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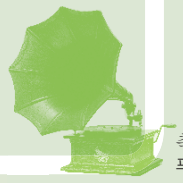
증기기관  
영국 런던

1851



1876

전화기  
미국 필라델피아



1878

축음기  
프랑스 파리



1885

자동차  
벨기에  
안트베르펜



1889

에펠탑  
프랑스 파리



1939

텔레비전  
미국 뉴욕



냉동 매머드  
일본 아이치

2005

# 운용 주체 명확히 하고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 줘야



**박동희**  
전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whpark@jeri.re.kr

◎ 지금까지 세계박람회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개최국가와 개최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개발을 획기적으로 촉진하는 계기가 돼 왔다. 1970년 오사카 만국박람회는 일본이 제2차 세계 대전 패전을 딛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됐으며, 1975년 오키나와박람회는 오키나와를 세계적 관광휴양도시로 발전시켰다. 1992년 스페인 세비아박람회와 1998년 포르투갈 리스본박람회는 낙후된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에 크게 기여했으며, 2010년 상하이박람회는 개최지 항공포장 일원을 세계적 비즈니스 중심지로 변모시켰다. 이 모든 박람회의 주최측은 지역여건을 반영한 박람회 시설에 대한 사후활용 방안을 계획해 추진했다.

## 박람회 효과를 남해안 산업발전으로 극대화시키는 전략 필요

오는 5월 범국가적 행사로 개최되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는 해양과학기술의 진흥,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위상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세계적 행사다. 즉, 광양만·진주광역권의 공동발전을 촉진하고,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을 동북아시아의 해양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로 출발한 것이다. 따라서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된 박람회 관련 시설에 대한 효과적 사후활

용은 박람회의 개최효과를 남해안 산업발전으로 극대화하기 위한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방안을 염두에 두고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을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해 법제화했다. 이 법의 근본 취지는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는 동시에 박람회 개최 후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기념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이를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의 준비·운영과 더불어 사후활용 준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사후활용 사업 등에 기금을 사용하거나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조직위원회는 예전부터 박람회 사후활용 중장기 실행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사후활용 계획의 수립원칙을 박람회 개최지의 상징성, 국가의 재정부담 완화 등으로 정하고, 박람회장을 '상업 및 신해양녹색복합단지'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박람회장 내에 건설되는 전시관은 영구 및 임대 건축물로 구분되며, 영구 건물은 행사 후 그대로 존치해 활용되고 임시건물은 향후 투자자의 계획에 따라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된다. 그중에서 국제관은 접근성의 입지적 장점을 보유하고 있어 관광형 상업시설 및 공공시설로 활용하고, 기타 상업시설 등은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

획이다. 아쿠아리움을 제외한 부제관과 기업관, 지자체관 및 국제기구관 등은 임시건물로 조성하고 박람회 이후 철거해 민간에 매각할 예정이다. 엑스포타운은 박람회 이후 주거단지로 전환하고, 민간자본이 건설한 호텔 등의 숙박시설은 박람회 이후에도 그대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 동북아 해양관광 명소로 적극 육성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남해안의 해안자원을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투자를 활성화한다면 해양휴양·관광의 명소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박람회장과 지역사회가 하나로 연계됐을 때 가능한 얘기다. 따라서 박람회장이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준비가 병행돼야 할 것이다.

첫째, 박람회 사후활용 범위와 주체에 대한 명확한 사전 정의와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대전박람회 등 사후활용에 실패한 박람회 사례를 사안별로 면밀히 분석해 시장수요에 부합하는 시설규모 및 활용과 운영주체 설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박람회 투자·입주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사후활용 실천방안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수목적회사(SPC) 설립 등 사후활용 운영주체에 대한 계획, 운영재원 확보, 각종 세금·부담금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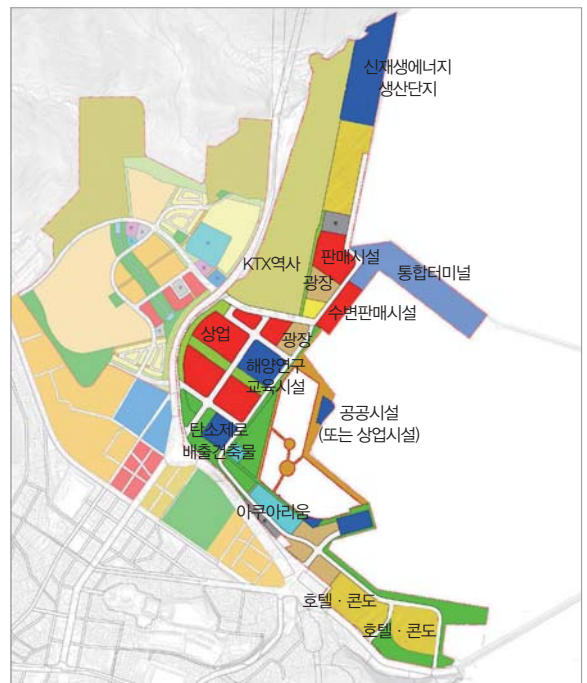
둘째, 무엇보다 여수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사후활용을 위해선 랜드마크가 있어야 한다. 파리박람회가 개최된 지 100년이 넘도록 세계적 명소로 자리 잡은 에펠탑처럼 여수박람회를 상징하는 시설활용이 필요하다. 여수의 경우 주제관·한국관·'Big-O' 등 박람회를 대표할 수 있는 기념비적 시설이 많다. 이 시설물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문화이벤트를 겸한 기념공원, 탄소배출제로 시범건물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대규모 씨푸드(Sea food) 타운을 조성해 지역의 대표 복합상업지구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박람회 이후 시설의 일부를 전남 마이스(MICE: Meeting, Incentive, Convention, Exhibition) 산업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국제관을 리모델링해 최소 비용으로 국내 무역의 8%를 차지하는 전남에 컨벤션인프라를 구축해 무역 촉진을 위한 전시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만하다. 2010 상하이박람회가 박람회 개최효과를 마이스 산업육성으로 연계시키기 위해 1층 4관(엑스포

〈표〉 전시관별 사후활용 및 운영계획

시설명	사후기능	운영주체
주제관	상업 또는 해양과학관 등 공공시설	민간 또는 공공기관
한국관	탄소배출제로 테스트베드	민간 또는 공공기관
국제관	관광형 상업 및 해양연구교육시설	민간매각 및 임대
해양생물관(부제관)	아쿠아리움	민간투자 후 민간운영
엑스포타운	주거단지	민간투자 후 분양
호텔 및 콘도	고급 숙박시설	민간투자 후 민간운영

〈그림〉 박람회 사후활용 공간배치 계획



축, 중국관·주제관·엑스포센터·엑스포문화센터)을 구상하고 중국관을 중심으로 컨벤션 지원시설과 상업시설을 보완해 국제컨벤션 및 비즈니스 밀집지역으로 조성하고 있는 것이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박람회 관련 상위계획(남해안 선벨트 종합계획 및 여수시 도시계획 등) 연계방안을 검토하고 사후활용 계획 확정에 따른 기존 관련계획(기본계획, 실시계획 등) 변경 사항 및 절차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일회성 전시행사가 아니라 박람회 개최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과 아울러 남도문화권과 한려수도권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연계시키는 사업발굴이 진행돼야 할 것이다. 박람회

한국  
경제

# 한미 FTA, 정치권 논쟁 속 발효

Wall Street Journal/ 2012.03.15/ US, South Korea to start tariff cuts  
Bloomberg/ 2012.03.16/ US-Korea free trade starts as Seoul opponents vow repeal  
china Daily/ 2012.03.16/ Calls to advance trade tie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됐다. 협상 타결, 발효 지연, 추가 협상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던 만큼 외신들은 그간의 쟁점들을 정리해 보도하는 한편, 한국 내 일부 反FTA 기류를 소개하는 데 지면을 할애했다.

Wall Street Journal(이하 WSJ)은 3월 15일자 기사에서 한국경제는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는데다 빈국에서 부국으로 도약하기까지 성장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높은 수입 관세를 유지해 온 만큼 관세 철폐의 영향은 미국보다 한국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15일 Washington Post(이하 WP)와 Bloomberg는 한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접근성 개선,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등 한미 FTA가 한국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19일 WP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미국 로펌들이 미개척 법률 시장인 한국에서 입지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한국에 진출하려는 미국 로펌들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일부 언론들은 한미 FTA 재협상 및 폐기를 주장하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국내 야권의 반발을 전하기도 했다. 15일 Bloomberg는 한국 야권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물가상승과 소득격차 확대에 대한 여론의 불만을 자극해 의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일본 Nikkei와 중국 관영 영자지인 China Daily는 한미 FTA 발효가 자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목하면서 무역 영토 확장에 조속히 나설 것을 자국 정부에 촉구했다. Nikkei는 16일자 사설을 통해 한미 FTA 발효로 미국 시장에서 일본 제품의 경쟁력이 더욱 낮아졌으며, 이를 타개하려면 우선 일본이 환태평양동반자협

정(TPP)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Nikkei는 한미 FTA가 타결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정부가 FTA에 대한 반발이 심했던 국내 농업 부문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한 영향이 크다고 평가했다. 한국이 2008년부터 10년간 21조1천억원을 투입해 품목별 농업 경쟁력 강화, 농가 연령 낮추기, 농가 경영체질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온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China Daily는 17일 미국이 한국과 FTA를 체결하는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중국도 서둘러 한·중·일 FTA 체결 작업에 진전을 이루고 아시아 경제통합의 이점을 확보하는데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외신들은 미국이 한국에 이란산 원유를 대체할 수 있도록 수입원을 다각화하려는 압력을 가하는 가운데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내 미개발 유전 3곳의 개발권을 확보한 사실에 주목했다. Financial Times는 3월 6일자 기사에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한국석유공사를 비롯한 한국 업체들이 최적의 개발 기술을 갖추고 있지 않지만 경험이 풍부한 파트너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초대형 유전개발 사업에서 소규모 지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아부다비 원유개발 시장에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외교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WP와 Reuters는 6일자 기사에서 세계 10대 원유 소비국에 속하는 한국이 최근 공급 측면에서 비롯된 유가 상승으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한국의 중동산 원유 확보 기회가 확대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도했다. **황희**

● 정리 안기련 KDI 경제뉴스분석팀 연구원

# 성장속도 조절에 나선 중국

Financial Times/ 2012.03.06/ China's growth model running out of steam  
Economist/ 2012.03.10/ Year of the tortoise  
Economist/ 2012.03.17/ Fears of a hard landing

지난 3월 5일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최식 연설에서 올해 중국의 성장률 목표를 7.5%로 제시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성장 방식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수출·투자 주도에서 내수 확대 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중국이 성장률 목표를 8% 이하로 잡은 것은 2004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외신들은 대체로 중국의 성장목표 하향 조정과 내수 확대 기조를 환영하며 중국의 정책 전환이 세계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Financial Times(이하 FT)는 3월 6일자 기사에서 중국 정부가 이번 발표를 통해 내수를 촉진해 세계무역 불균형을 축소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했다고 평가했다. 10일자 Economist는 중국이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 다소 낮은 성장속도를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중국 관영 언론인 China Daily 역시 6일자 사설을 통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함으로써 구조적 모순과 성장 불균형 등의 문제를 해소할 기회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외신들은 중국경제에서 수출산업과 투자집약적 자본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 경우 단기적으로

일본·독일 등 기계·장비 수출국과 호주·브라질 등 원자재 수출국들은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특히 FT는 그간 중국경제 호황의 가장 큰 수혜자였던 원자재 수출국들이 앞으로 수년간 중국발 수퍼사이클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3월 12일 Wall Street Journal(이하 WSJ)과 Economist는 중국경제의 중심축이 내수로 이동하면서 선진국들이 생산하는 소프트웨어·첨단제품·서비스에 대한 중국의 수입이 증가해 미국·유럽 등은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중국의 2월 무역적자가 대다수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보다 높은 315억달러로 발표되자 외신들은 중국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팽창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WSJ는 3월 12일자 기사에서 중국의 2월 무역적자액이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중국 당국이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수개월간 완화적 통화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같은 날 New York Times(이하 NYT)는 중국경제의 경착륙을 예상하는 이들은 거의 없지만 성장 둔화의 신호가 나오고 있는 만큼 중국 당국이 정책적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반면 Economist는 3월 17일자 기사에서 춘절 연휴 기간 동안 수출업체들이 조업을 중단하면서 중국의 무역수지가 일시적으로 왜곡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Economist는 2월 경제지표만으로 중국 경제를 판단할 순 없다고 전제하면서, 2월 무역수지 적자가 대외 불균형이 해소되고 있다는 희망적 신호일 수도 있지만 중국경제가 급격히 둔화될 경우 세계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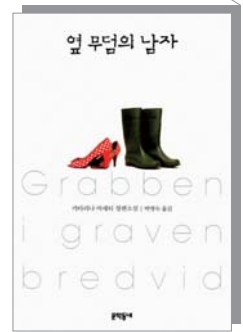


지난 3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7.5%로 제시했다.

● 정리 조현주 KDI 경제뉴스분석팀 전문연구원

# 「옆 무덤의 남자」

카타리나 마세티 지음, 문학동네



우리는 경제 활동을 한다. 그러나 경제 전망을 잘 믿지 않는다. 우리는 사랑을 한다. 그러나 사랑을 믿지는 않는다. 스웨덴 소설가 카타리나 마세티가 쓴 「옆 무덤의 남자」(문학동네)는 따뜻하고 재밌다. 남녀 주인공이 불같이 사랑에 빠졌다가 다시 시들해지고 그러나 여운은 남게 되는, 남녀의 마음과 행동을 산뜻하고 세밀하게 그렸다. 누가 읽든 묘하게도 '어, 내 얘기 아냐' 하는 느낌에 빠져들게 한다.

여주인공 '데시레'는 지적인 것에 쏠리는 도서관 사서다. 그녀의 취향은 철학자 크리스테바나 라캉을 읽고, 아로마테라피를 즐기며, 그레고리안 성가에 심취하는 것이다. 데시레는 오페라 '리골레토'를 보면서 같이 눈물 흘릴 남자를 기다린다.

그녀 앞에 나타난 남자 주인공은 시골 마을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산림조합원 '벤니'다. 그의 관심사는 오로지 농기구, 축사 그리고 24마리 젖소들뿐이다. 가족 분비물 냄새를 풍기는 이 남자는 자기를 대신해 트랙터를 몰 수 있는 여자를 원한다.

원래 데시레의 남편은 생물학자였는데 어느 이른 아침 새들의 짹짹기를 관찰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길을 나섰다가 트럭에 치어 죽었다. 데시레는 틈만 나면 남편 무덤 앞 벤치에 앉아 남편과 즐거웠던 순간들을 되돌아보며 상념에 빠진다. 노총각 벤니는 같이 살던 홀어머니가 암으로 죽었다.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어머니 무덤을 손질한 뒤 그 앞 벤치에 앉아 잠시 쉰다. 데시레 남편의 무덤과 벤니 어머니의 무덤은 나란히 있다. 벤치에 앉은 두 사람은 상대의 외모를 보고 저 사람과 내가 한 이불을 덮는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그러나 남녀 관계는 장담하지 말 일이다. 남자는 양봉에 관한 책을 빌리러 도서관에 갔다가 여자를 발견하게 되고, 여자에게 묘지를 한 바퀴 돌지 않겠느냐고 제안하게 되고, 두 사람은 점심 때 식당에 가서 비트(beet, 사탕무)와 빵을 곁들인 쇠고기 스테이크를 엄청나게 먹어치우게 되고, 남자가 여자 생일에 하모니카를 선물하게 된다.

소설이 85쪽에 이를 때쯤 두 사람은 두 번 연속 거침없이 사랑을 나누게 되고, 섬세한 기교 따윈 없이 단진 쪽 뽕은 철로 위를 달리는 고속 열차처럼 멈추는 게 불가능하게 된다. 뜨겁게 늦바람이 난 두 사람은 사위를 하러 갈 때도 마치 다리가 여덟 개 달린 선사시대 생물체처럼 몸을 붙인 채 떨어지지 못했지만, 그 시간들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면서 여러 영역에서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된다.

소설이 250쪽쯤 가면 두 사람은 점차 뜸하게 만나게 되고, 차마 입 밖에 내뱉지는 못하지만 머릿속에 '과연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까?' 하고 회의에 빠지게 된다. 또 계절은 바뀌고 두 사람은 원래 만났던 묘지의 벤치로 돌아와 있다. 두 사람은 무덤 사이에 서서 한참 동안 서로를 꼭 껴안고 있다가 데시레가 입을 연다. "바로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는 거야. 한 50년쯤 후에."

헤어진 후 서로의 전화벨이 울릴 때도 있었다. 누군지 알지만 두 사람은 전화를 받지 않는다. 자칫하면 또다시 덮에 걸려들고 말 게 뻔하기 때문이다. 끝에 아련한 반전이 있다. 사람들은 사랑에 빠질 때 가장 비경제적인 코스를 밟고, 헤어질 때 가장 경제적인 방식을 취한다.



**김광일**  
조선일보 논설위원  
kikim@chosun.com  
1985년 조선일보 기자, 1993~1999년 파리 특파원, 이후 문화부장, 국제부장, 편집국 부국장 역임. 현 논설위원. 문학담당기자를 하면서 '책 읽어주는 남자' 연재



## 어린이가 행복한 교통안전 세상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는 그만!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도 그만!

도로교통공단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교통안전 세상을 꿈꿉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관과 어머니 교통안전 명예교사 운영,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통해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든든한 우산이 되겠습니다.

• 운전면허안내 콜센터 1577-1120 • 교통정보안내 길눈이 콜 1644-5000

# “지금은 일본경제 구조 전환기… 급격한 추락 가능성 낮아”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때 \_ 2012년 3월 14일 오후 2시  
 곳 \_ KDI 세미나실  
 진행자 \_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참석자 \_ 이우광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연구위원  
 배준호 한신대 글로벌협력대학 교수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정성춘** \_ 지난해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후 1년이 지났다. 일본경제는 우리 경제에도 중요한 만큼 앞으로 과연 일본경제가 어디로 갈 건가는 우리 사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는 이슈다. 오늘 토론에선 거시경제, 재정, 제조업 경쟁력, 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일본경제를 진단해 보고자 한다. 먼저 이지평 박사께서 거시경제 전망에 대해 말씀해 달라.

**이지평** \_ 일본경제는 지난해 마이너스 0.7% 성장률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는 플러스 성장을 회복할 전망이다. 해외수요가 부진하지만 동일본 대지진 복구 관련 수요 확대가 내수경기의 회복을 견인해 연간 2% 전후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환율의 경우 양적 금융완화 규모 확대에 소극적이던 일본은행이 지난 2월 14일 추가적 금융완화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엔화 강제 추세는 어느 정도 억제될 전망이다. 1달러당 75엔 전후이던 엔화환율이 3월 14일 기준으로 82엔 수준까지 떨어져 약세를 보였다. 지난해 일본은 31년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는데 원전가동 중단으로 인한 LNG 등 연료수입 확대, 국제유가 상승세, 유로권의 마이너스 성장

등 세계경기 부진으로 올해도 무역수지 적자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대일 수출은 40% 이상 증가했으며 대일 무역수지 적자는 76억달러 정도 감소했다. 올해에도 지진복구 수요로 인해 시멘트, 철강 분야의 대일 수출이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인다.

**이우광** \_ 한·일 무역에서 지난해 무역적자가 76억달러 감소했지만 지진요인에 의한 직접적 수출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다. 지진피해 복구 과정에서의 품목들보다 석유제품, 무선통신기기, 철광관, 화학원료 등에서 수출이 많았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난해는 양국 간 산업구조에 있어 변화를 예고하는 한 해가 아니었나 싶다. 특히 대일 무역적자가 줄긴 했지만 이것이 구조적인지 일시적인지는 좀 더 관찰해봐야 한다.

**이지평** \_ 한국에 대한 일본의 부품수출이 대지진에 따른 생산차질로 줄어들어 무역적자 축소에 일시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또 일본 부품이 아닌 국내 부품을 써보니 ‘괜찮다’라는 판단이 들면 계속 쓰게 된다. 이런 면에서 구조적으로 변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정성춘** \_ 구조적 변화인가 아닌가에 대해선 올 1년 정도



**배준호**  
한신대  
글로벌협력대학 교수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우광**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연구위원

더 무역수지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금으로선 한국의 대일 수출에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갖춰졌다. 환율도 엔고여서 우리 제품을 안 쓰던 일본 기업마저 어쩔 수 없이 우리 제품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해 대일 수출을 늘릴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배준호** 일본은 다른 나라 제품이 일본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운 유통망 구조를 갖고 있다. 지진 발생으로 인해 일시적 수급 차원에서 석유화학 제품이 늘어난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유통망 구조가 변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구조적 변화를 논하기엔 아직 이른 감이 있다.

**이우광** 한 가지 덧붙이자면 최근 일본 소비자들의 한국 제품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 전자의 스마트폰 매출이 지난해에 80% 늘었다. 변화하는 일본시장의 틈새를 잘 파고든 거다. 또한 한국의 과자, 라면, 화장품, 맥주 등이 한류 붐을 타고 선전하고 있다. 지금까지 유통망 때문에 수출이 안 됐던 것도 사실이지만 최근 일본의 변화를 보면 소비자가 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정성춘** 이 문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이슈인

재정 문제로 넘어가자. 유럽 재정위기로 일본의 재정상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배준호** 일본정부의 채무잔고는 지난해 말 기준 GDP 대비 204%다. 이탈리아가 130%대고 영국이 90%대, 미국이 80% 후반인 것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일본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정부채무가 늘었는데, 거품붕괴 이후의 경제살리기 대책을 재정지출 확대에 집중적으로 의존했기 때문이다. 이 기간 중 일반정부 채무잔고의 GDP 대비 비중은 90%대 전반에서 170% 후반까지 상승했다. 순채무(정부의 총부채 잔액에서 정부가 보유한 연금적립금 등 금융자산을 뺀 금액)를 기준으로 해도 일본은 2010년 기준 114.9%로, 이탈리아 104.1%, 미국 66.6%, 프랑스 57.2%, 영국 53.5% 등에 비해 여전히 높아 재정상황이 불안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는 나라다.

**정성춘** 그렇다면 정부채무 증가로 인해 유럽과 같은 재정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나?

**배준호** 포르투갈·이탈리아·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 등 남유럽과 같은 재정위기 발생 가능성이 전혀 없진

일본 기업의 경쟁력은 지진 이전부터 미국발 금융위기, 엔고, FTA·법인세·전력 등 여러 가지 입지여건 등으로 약화되기 시작했고 지진으로 인해 두드러졌다고 봐야 한다. 산업 전체적으로 보면 전자제품 경쟁력이 가장 약화됐고 철강은 약화되는 쪽이고, 기계는 정밀기계만 기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우광 연구위원



배준호 교수

남유럽 국가들과 같은 재정위기 발생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지만 매우 낮다. 정부채무 중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국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십수년간 지속된 저금리로 인해 크지 않고, 채권자의 60% 이상이 외국계인 남유럽 국가들과 달리 일본은 95% 이상이 국내 금융기관이다.

않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 정부채무 중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국채인데 십수년째 지속된 저금리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지 않다. 또한 채권자의 60% 이상이 외국계인 남유럽 국가들과 달리 일본은 95% 이상이 국내 금융기관이다.

**이우광** 장기금리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장기금리가 계속 안정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어느 시기에 조금이라도 일본재정이 불안해진다는 신호가 오면 일본은행들도 투자를 하는 입장인만큼 행동이 달라질 수 있고 그러면서 장기금리가 급상승하고, 그래서 다시 급격하게 엔저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지 않나?

**정성춘** 이우광 박사님 말씀에 덧붙이면 일본 금융기관의 국채보유 비중이 60%가 넘는데, 만약 장기금리가 1%p 올라가면 국채가격 하락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손실규모가 6조엔 정도 된다고 일본은행 총재가 의회에서 보고한 적이 있다. 그런 손실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금융기관의 재정상황에 큰 타격을 주게 되고 그로 인한 금융기관의 위기가 실물 부문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은행연합회 등에서도 지금보다 더 강력한 재정규율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다. 이는 경제상황이 바뀐다면 언제든지 국채를 투매할 수 있는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생각된다.

**배준호** 두 분 말씀에 동감한다. 다만 원래 경제성장률이 낮으면 금리가 낮다.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지난 20여 년 동안 평균 1% 전후였다. 이것이 2~3%로 가야 금리도 조금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성장 전망이 보이지 않고 있다. 당분간은 단기금리를 포함해 금리 부문에 대한 걱정은 덜해도 될 것 같다.

**정성춘**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빠르게 늘고 있는 재정적자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일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음은 일본 제조업 경

쟁력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지진이 일본 제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우광 박사께서 말씀해 달라.

**이우광** 지난해 지진으로 부품 소재 공급망이 단절·훼손되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산업이 자동차였고, 다음이 전자, 화학 그리고 일부 소재였다. 광공업 생산을 보면 3월에 지진이 일어나고 4월에 15%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최근 들어 지진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됐다. 지진이 일본 제조업에 준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일본 기업의 경쟁력은 지진 이전부터 미국발 금융위기, 엔고, FTA·법인세·전력 등 여러 가지 입지여건 등으로 약화되기 시작했고 지진으로 인해 두드러졌다고 봐야 한다.

산업 전체적으로 보면 전자제품의 경쟁력이 가장 약화됐고 철강은 약화되는 쪽이고, 기계는 일반기계 쪽은 조금 약화됐고 정밀기계만 기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쟁력 약화로 기업들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해외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기존에는 최종 메이커



정성훈 연구위원

2050년까지 앞으로 30여년에 걸쳐 일본은 에너지 구조를 전환해 나갈 것이다. 원전을 당장 모두 멈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역주민들을 설득해 정기점검이 끝난 원전을 재가동하면서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장기적으로 원전 비중을 제로로 만들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가 나가고 일부 부품 메이커들이 따라 나가는 형태였는데, 지금은 경쟁력 있는 부문까지 해외로 나가고 있다. 특히 소재기업, 중견·중소기업의 진출이 두드러진다. 최근 들어 더욱 급격히 증가했는데 아직 최고 수준은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일본 제조업의 생산시스템 등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정성훈** 우리나라에도 지난해 일본 기업들의 진출이 많았다고 들었다.

**이우광** 기존에는 생산비 절감을 위해 중국이나 태국 중심으로 나갔는데 최근엔 비용절감뿐 아니라 엔고·전력·FTA 등 종합적 입지 측면을 고려해 한국·대만으로의 진출이 활발하다. 특히 일본 기업들이 부품조달 채널을 다변화하고 있어 한국에 진출할 동기가 많아졌다. 따라서 일본 기업 유치정책도 달라져야 한다. 법인세를 감면해주거나 토지 구입비용을 싸게 해주는 기존의 인센티브 정책에서 벗어나 장기적 사업비전이나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일본경제는 해외수요가 부진하지만 동일본 대지진 복구 관련 수요 확대가 내수경기의 회복을 견인해 올해 연간 2% 전후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수지는 원전가동 중단으로 인한 LNG 등 연료수입 확대, 국제유가 상승세, 세계경기 부진으로 올해도 적자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지평 수석연구원

**이지평** 일본 제조업이 어려워진 데는 선택과 집중을 잘 못한 것이 무엇보다 컸다고 본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렵지만 그나마 괜찮은 기업을 보면 히타치제작소와 같은 솔루션과 철도·전력 등 인프라 쪽에 선택과 집중을 했던 기업들이다. 또 모든 것을 자급하겠다는 수직분업 형태 문제였다. 우리도 부품소재를 일본에 의존하지 말고 자급해야 하지만, 경제원리에서 벗어나 수직분업만 고집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자동차가 전자산업 못지않게 어려웠던 것은 일시적 측면이 크다. 올해는 해외수출도 잘 되고 있고 미국시장에서의 점유율도 늘고 있다. 차세대 분야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역시 우리 기업이 도저히 따라가기 어려운 경쟁력을 갖고 있다. 도요타가 지난해 말 출시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아쿠아'는 1500cc이면서도 가격이 160만엔(약 2,15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리터당 40km를 달린다.

**정성훈** 일본의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다만 기계 장치적 요소가 많은 부문에선 여전히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국제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 같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일본은 원전 사고 이후 2010년에 만든 에너지기본계획을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2010년 계획의 핵심은 원전 비중을 50% 이상 늘린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앞으로 논의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원전을 어떤 속도로 축소해가고 이것을 대체하는 에너지원으로는 무엇을 택할 것인가가 될 것 같다.

동일본 대지진 등으로 지난해 31년 만에 최대 무역적자를 보인 일본이 지난 1월 또다시 1조4,750억엔에 달하는 월간 최대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사진은 지난 2월 13일 도쿄 항구에서 트럭들이 컨테이너를 실어나르는 모습



**이우광** 원자력 의존을 몇 %로 가져갈 것인지가 가장 궁금하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현실적으로 원전을 대체하기는 무리다. 결국 원자력을 어느 정도 움직여야 할 것이다. 관건은 아마도 원자력, 화력, 화석, 재생에너지의 최상의 조합을 찾는 것이 될 것이다.

**정성춘** 원전을 줄이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언제까지 몇 %를 줄일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 수치는 올해 안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거라고 본다. 노다 정부의 방침은 '40년 원전 운용 그리고 기간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폐기, 만약 단기 전력 공급상 문제가 있을 경우는 예외적으로 20년 연장' 이렇게 돼 있다.

**이지평** 정치상황으로 보면 원전 신설이 어렵기 때문에 증장기로 보면 원전 발전은 제로가 될 것이다. 또 신재생에너지는 초기에 비해 비용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일본은 가정용 전력의 경우 그리드패리티(Grid Parity;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단가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존 화력 발전 단가가 동일해지는 균형점)에 굉장히 가까워졌다. 전기료가 비싸면 그리드패리티에 빨리 도달하는데 그것이 신재생에너지에 플러스로 작용할 것이다. 탈원전이 단기적으로는 원료수입을 확대하겠지만 신성장산업의 발전 원동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멀리 내다보아 태양광,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에 의존하는 사회가 된다면 일본은 새로운 발전 원동력을 갖게 될 것이다.

**정성춘** 일본은 2050년까지 앞으로 30여년에 걸쳐 에너지 구조의 전환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원전을 당장 모두 멈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역주민들을 끊임 없이 설득해 정기점검이 끝난 원전은 재가동하면서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발해 장기적으로 원전 비중을 제로로 만들지 않을까 싶다. 현재 일본은 에너지 구조의 대전환기에 직면해 있다. 우리나라와 굉장히 비슷한 에너지 공급구조, 에너지 정책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앞으로 크게 바뀔 것이다. 우리의 에너지 정책에도 시사하는 내용이 많은 만큼 일본

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문제에 대한 논의는 여기까지 하고, 끝으로 우리 경제에의 시사점을 이야기해 보자.

**이지평** 단기적으로 보면 일본경제는 회복될 것이고 올해에 큰 이변도 없을 것 같다. 여러 가지 위험요인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정도로까지 일본경제가 추락할 가능성도 낮다. 다만 전력위기, 탈원전, 재정위기 등 현재 도전받고 있는 증장기 과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일본경제는 쇠퇴할 수밖에 없다. 이웃나라가 큰 파탄은 아니더라도 그러한 위기상황이 되면 우리나라도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동향을 지켜보면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우광** 일본은 현재 경제적으로 구조전환기라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서로 경쟁했지만 앞으로는 협력할 분야가 많아지면서 한·일 간 경제협력이 더 가속화될 것 같다. 예를 들어 중국 견제라는 측면에서도 양국 정부가 서로 협력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배준호** 일본경제가 빠르게 침체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마이너스라고 생각한다. 다만 고유가와 발전단가 상승 등 에너지 문제로 일본경제는 당분간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10년 내지 20년이 어찌면 우리에게도 일본의 경쟁력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호기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

**정성춘** 일본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한·일 간 협력 의의는 여전히 크다. 두 나라 간 경제를 좀 더 개방하고 문호를 더 터야 한다. 경쟁을 할 때는 치열하게 경쟁하되 협력할 분야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특히 중국 경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기업 친화적 경제구조로 바꿀 것인지에 대해 양국 정부 그리고 기업이 협력해야 할 과제가 많다. 한·일 경제가 더 좋은 동반자 관계가 되도록 이끌어가는 게 우리에게도 중대한 과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다. **박재**

● 정리 **유성임** 나라경제 기자

## 섬진강과 지리산, 그 봄날의 동화(童話)

그대의 척추에도 고로쇠 수액이 차오르고 있는지요?

모처럼 명상을 한답시고 바위 위에 앉으면 코끝을 스치는 매화향이 결국은 재채기를 부르고, 뒷마루에 앉아 시집이라도 좀 읽을라치면 아기 솜털 같은 햇살이 발바닥을 간지럽히는 등 마음도 한자리에 못 앉게 만드는 봄날입니다.

이 세상의 봄날이야 어디든 다 좋겠지만 지리산과 그 옆 구리를 휘돌아가는 섬진강의 봄날은 그야말로 무릉도원 그 자체입니다.

하루 종일 꽃을 따라 헤매다 날이 저물어서야 집에 돌아와 보니 문득 그대가 꽃이었는지, 내가 그대였는지, 꽃이 나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이 맡은 꽃향이 뇌 속까지 들어와 생각들이 온통 꽃무늬로 어그러지고, 너무 많이 본 꽃들이 몸속에까지 들어와 동맥과 정맥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문득 언젠가 보았던 「벽암록(碧巖錄)의 ‘장사화상이 봄기운을 느끼다’(長沙春意)가 뇌리를 스쳐, 얼른 일어나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향기로운 풀을 따라갔다 지는 꽃을 따라 돌아왔네’라는 구절은 여전히 절창입니다.

그러하여 봄을 맞는 여러 가지 중에 꽃축제만 찾아다니는 것처럼 미련한 짓도 없습니다. 광양에서 매화축제 한다고 해서 가보고, 산동의 산수유축제, 화개의 벚꽃축제, 지리산 철쭉제 등 행사만 찾아다니는 봄이 꼭 거기 있겠는지요?

꽃과 사람들은 봄빌지 몰라도 바로 그 꽃의 어머니인 봄은 이미 더 깊은 산속으로, 강물 속으로 피신해버리고 없을

지도 모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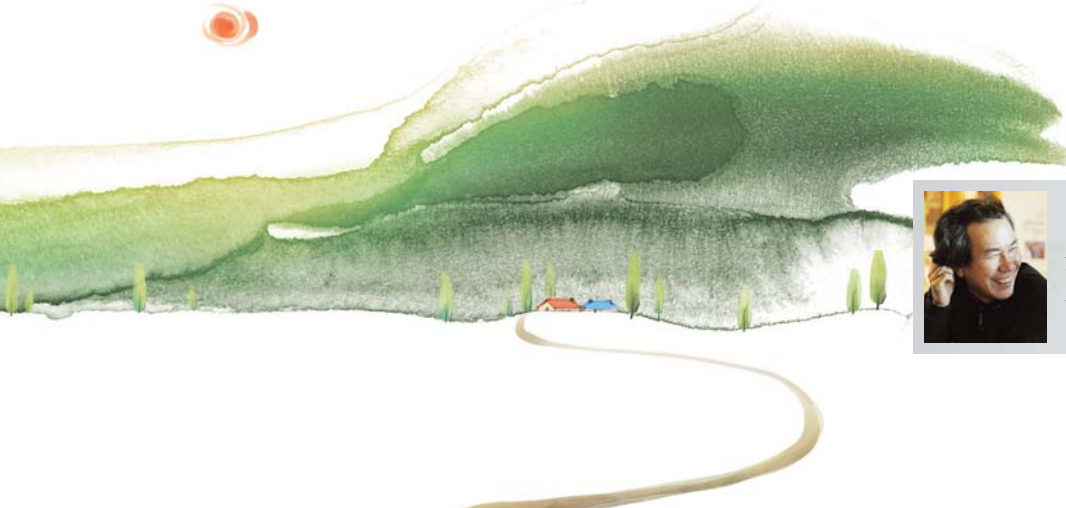
그래도 굳이 광양의 매화꽃, 산동의 산수유꽃, 화개의 벚꽃을 호젓이 보겠다면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 방법은 단 하나. 축제가 끝났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쯤 비로소 찾아가면 되지요. 사람들의 소란스러움에 귀를 막던 꽃들이 그제야 서서히 온몸을 던지며 낙화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함박눈처럼 지는 꽃잎들은 모체인 나무와 허공과 땅의 경계를 한순간에 없애버리지요. 섬진강 물 위에 떠서 이리저리 밀리는 꽃잎들의 모습은 일순 이리 밀리면 이곳이 피안이고, 저리 밀리면 저곳이 피안이게 만들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봄날의 동화는 1백년 된 고목에서 막 피어난 벚꽃입니다. 그것도 그냥 가지에서 피어난 꽃이 아니라 고목의 몸통을 곧바로 뚫고 나와 겨우 한 송이 혹은 두 송이를 피운 꽃.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가지도 없이 그 늙은 몸의 허리에서 겨우 2~3cm의 싹을 내밀어 곧바로 꽃을 피우는, 대담하지만 너무나 연약한 꽃!

바로 이 아름다운 꽃 한 송이에 지리산과 섬진강의 동화 같은 봄날이 압축 파일처럼 저장돼 있다면 과장일까요. 내가 문득 그대를 알아보는 순간도 바로 이러한 꽃 한 송이를 볼 때, 다시 말하자면 노스님 같은 고목의 이 한 소식을 접할 때 인지 알겠는지요.

그대가 내게 올 때도 그렇게 나의 옆구리를 뚫고 한순간에 오리라 믿습니다. 봄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



이원규 시인

jirisanpoem@daum.net

1984년 『월간문학』, 1989년 『실천문학』으로 등단. 『강물도 목이 마르다』, 『옛 애인의 집』 등 시집과 『멀리 나는 세는 집이 따로 없다』, 『지리산 편지』 등 산문집이 있다.



## 저작권, 당신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 이 표시가 의미하는 것은? 영화, 시, 소설, 음악, 미술품, 각종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보고 읽고 느끼는 모든 콘텐츠에는 그것을 만든 자가 가지는 권리, 즉 저작권(Copyright)이 존재함을 뜻한다. 이는 우리가 향유하는 콘텐츠에 누군가의 노고와 열정이 담겨 있기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며, 창작자의 의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번 달 이슈는 우리 사회가 '문화'를 얼마나 성숙하게 배려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 세계와 어깨를 겨루며 교류할 준비가 돼 있는지 생각해보기 위해 '저작권'을 화두로 제시한다. 저작권, 당신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도입

# 불법 복제로 날려버린 일자리가 3만5천개?

1995년 발매된 가수 김건모의 3집 '잘못된 만남'은 280만장이 팔렸다. 신승훈 5집은 248만장, 조관우의 '님은 먼 곳에' 역시 비슷한 판매량을 기록한 베스트셀러다. 음악계에서는 이 시대를 '한국 가요의 르네상스 시대'라고 부른다.

그러나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음악 산업은 큰 타격을 입었다. 현재 가요계에서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는 그룹 소녀시대도 30만장을 판매하는 것이 힘들다. 그럼 현대인들이 당시에 비해 음악을 덜 듣는 것일까?

그렇진 않을 것이다. 오디오나 휴대용 카세트플레이어, CD플레이어 등을 통해 음악을 들었던 1990년대에 비해 지금은 휴대폰(스마트폰), MP3플레이어, 컴퓨터 등 더 다양한 기기를 통해 더 자주 음악을 접한다.

하지만 음악인들의 생계는 과거보다 어려워졌다. 음악을 듣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불법 콘텐츠를 다운받기 때문이다. 최근 아이돌 가수들이 음반의 품질보다는 행사나 연기로 발길을 돌리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는 가요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음악뿐 아니라 영화, 드라마, 만화, 게임,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불법 복제 및 저작권 침해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이런 저작권 침해는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까지 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콘텐츠 불법 복제 감소가 국



최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콘텐츠 불법 복제 감소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10년 영화계가 불법 복제로 입은 피해액은 8,684억원에 이른다. 사진은 지난 2월 경기지방경찰청이 압수한 불법 복제 DVD

가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불법 복제가 날려버린 콘텐츠산업의 일자리가 영화 1만349개, 음악 8,554개, 출판 3,824개, 게임 1,899개, 방송 1,196개, 관련 산업 9,914개로 집계됐다.

2010년 영화계가 불법 복제로 입은 피해액은 8,684억원에 이른다. 이는 역대 한국영화 가운데 최대 제작비(280억원)를 들인 '마이웨이'를 31편 제작하고도 남은 규모이며 영화관 입장 수익 1조2,362억원의 70%에 육박하는 액수다. 그 피해액이 다시 영화산업에 투자됐더라면 한국영화 산업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진보해 있을 것이다.

문제는 우리 내부에서 피해를 입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009년 1천만 관

객을 동원한 영화 '해운대'의 경우 극장 상영이 끝나기도 전에 동영상 파일이 인터넷에 불법 유통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영화는 당시 한국 상영을 마치고 DVD 출시 및 미국과 중국, 동남아 등 해외 24개국에서 상영하기로 돼 있었다. 국내에서 불법 유통된 파일은 중국과 동남아 등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 결과 해운대는 해외 시장에서 재미를 보지 못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저작권센터가 중국의 28개 주요 포털사이트에 유통 중인 한국 드라마, 영화, 콘텐츠 9,700여개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 중 41%에 달하는 4천여개에서 저작권 침해 사례를 적발했다. 태국은 12개 포털 및 7개 P2P사이트에서 유통 중인 한국 콘텐츠파일 1만7천여개 중 98%가 불법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했다.

해외의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안의 불법 복제를 줄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국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 쉽게 공짜로 내려받을 수 있는 콘텐츠를 굳이 돈 내고 볼 해외 사용자들은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

**심재석**  
디지털데일리 기자  
sis@ddaily.co.kr



# 펌질과 블로그 운영, 과연 자유로운가



이용자 입장에서 볼 때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규정은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과 사적 복제에 관한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관리하는 자유이용 사이트(freeuse.copyright.or.kr)에 가면 저작권이 소멸됐거나 기증된 저작물을 볼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문제는 우리 「저작권법」이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이나 비평 또는 연구 등의 목적으로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이용 역시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인터넷에서의 이용행위가 금지된 것인지 허용되는 것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이용자 입장에서 볼 때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규정은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과 사적 복제에 관한 것이다. 이 규정은 문화발전을 위해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것들이다.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공정한 인용). 또한 “공표된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사적 복제). 이때도 일정한 제한이 있

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법원은 정당한 인용이 되려면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돼야 할 것”이라고 그 범위를 정했다. 또 공정한 관행에 따라 출처표시를 해야 한다.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역시 가정에 준하는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되고,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복사기기를 이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것은 사적 복제행위다. 하지만 공개된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어 사적 이용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소리바다’ 사건으로

알려졌듯 자신이 내려받은 저작물을 다른 사람에게 P2P 기술을 이용해 전송하는 것도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이 역시 사적 영역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기사도 ‘사실 그 자체’가 아닌 한 블로그에 올리거나 P2P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다. 물론 뉴스 기사를 자신이 나중에 다시 보려고 컴퓨터에 저장하는 것은 사적 복제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단, 불법 저작물임을 알면서 내려받아 저장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최근엔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되는 ‘앱’(app)이 중요해지면서 소위 ‘탈옥’(jailbreaking)문제가 중요한 「저작권법」적 이슈로 등장하기도 했다. 다행히도 이러한 논란은 미국의 소위 ‘룰메이킹’(rule making)에 의해 탈옥행위가 호환성 확보를 위한 것이란 이유로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으로 일단락됐다.

인터넷은 저작물 이용환경을 급격하게 변화시켰다. 인터넷 환경에서의 이용행위가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정당한 인용 또는 사적 복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데, 결론적으로 이용의 목적과 범위가 우리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건전한 저작권 문화를 육성하기 위해선 법규의 해석보다도 이용자들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즉 이용자들은 ‘타인의 저작물 이용 그 자체’가 목적인 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

정진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jkjeong@kangwon.ac.kr



● 출판 분야

# 전자출판에도 배타적발행권 허용

최근 우리 「저작권법」은 EU 및 미국과의 FTA에 따라 요동치듯 개정됐다. 지난해 6월엔 한·EU FTA 이행을 위해 사후 또는 공표 후 70년으로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을 연장했으며 12월엔 한미 FTA 국회비준에 따라 큰 변화가 생겼다. 2011년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저작권법」에 기존 「출판권」과는 별도의 '배타적발행권'을 신설해 향후 우리 출판 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그밖에도 FTA로 인한 법 개정에 따라 대두된 이슈를 정리하면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 인정, 접근통제(access control) 기술적 보호조치 신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강화, 비친고죄 범위 확대,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이 있다. 특히 '배타적발행권' 신설은 디지털미디어 시대의 저작물 이용방식에 새로운 영역이 생겼다는 점에서 출판권과의 불가피한 충돌이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개정 「저작권법」 제57조에는 출판권과 별개로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제1항에서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발행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제2항과 3항에선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발행 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배타적발행권을 설정받은 자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 등

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각각 규정했다. 이로써 「저작권법」상 종이책과 전자책(e-Book)은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정립된 것이다. FTA 비준과정이나 「저작권법」 개정을 둘러싸고 갑론을박할 때는 지났다. 어떻게 하면 향후 법 적용과정에서 나타날지 모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지 묘안을 짜내는 데 관계자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정부는 관련 정보를 적극 공개해야 하고, 출판계는 출판계대로 다음에 유의하면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강화, 저작권집행 강화와 관련해 향후 고소나 법정손해배상제도 시행에 따른 민사소송이 폭주할 수 있다는 점에 대비해야 한다.

둘째, 이른바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을 둘러싼 계약상의 혼선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신설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대한 구체적 의미를 확정해 이를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

셋째, 자유로운 이용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public domain)을 포함해 연차별 저작재산권 소멸 저작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전자출판사도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자출판의 경우 기존 출판 계약에 '복제·전송할 권리'가 포함돼 있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포함돼 있지 않다면 기존 출판권과는 별도의 계약이 있어야 한다.

필요가 있다. 시대변화에 발맞춰 저작권을 존중하면서도 너그러운 이용 질서를 제공하려는 사회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미당에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자의 아름다운 상생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번 한미 FTA를 통한 저작권 보호 수준의 강화가 일방적 보호의무 강화로 전락하지 않고 우리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긍정적 계기로 작용하려면 무엇보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이다. ■

김기태  
세명대 미디어창작학과 교수  
kkt21@hitel.net



# 음원 저작권을 둘러싼 ‘불편한 진실’



KT는 7개 주요 음반기획사의 유통을 맡은 KMP홀딩스와 손잡고 클라우드형 디지털음악 서비스 '지니'(Genie)를 지난해 12월 21일 출시했다. '지니'는 서비스 사업자가 아닌 음악권리자가 직접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매출의 70%를 저작권자에게 돌려주는 애플의 아이튠스가 바람직한 모델로 거론되면서 국내 음원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SM, JYP, YG 등 주요 제작사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인기 아티스트들의 음원이 제값을 받지 못한다고 불평한다. 'K팝'이 멜론, 벅스, 소리바다 등 음원서비스(판매접점, POC)에 발목 잡혔다는 말까지 나온다.

'멜론'을 운영하는 음원서비스 1위 업체 로엔엔터테인먼트는 '공공의 적'으로 몰렸다. 월 3천원짜리 '무제한 스트리밍' 요금제로 음원을 할값에 팔아 시장을 위축시키고 저작권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실상도 그럴까. 로엔이 유통하는 음원을 한국 아이튠스에서 판매한다면, 매출액의 30%

가 애플 몫이고 저작권 9%, 실연권 4.5%, 유통수수료 11.3%, SM과 같은 제작사 몫으로 45.2%가 배분된다. '멜론'을 통해 판매되는 음원수익은 권리자 몫이 총 53.5%, 유통사 몫이 46.5%다. SM소속 아티스트의 음원이 '멜론'에서 판매될 경우 저작권, 실연권은 동일하고 제작사인 SM의 몫은 40%가 된다. 단순히 총합을 보면 차이가 커 보이나 실제 아이튠스와 국내 POC의 수익배분율 차이는 제작사만 약 5%p 정도다.

착시효과의 원인은 유통사의 존재다. 유통, 즉 음반사는 자본이 부족한 제작사에 투자해 권리를 확보하고 온라인 음원사이트와 오프라인 매장 등에 음반을 유통·배급해 마진을 얻는다. 로엔은 제작사에 수백억원을 선금금으로 투자하고 음원으로 이를 회수한다. 10개사에 투자하면 1~2개가 성공해 나머지 실패를 만회하는 흥행 프로모터 역할이다.

수익배분 차이가 크지 않다면 결국 국내 음원시장의 문제는 판매 단가로 수렴된다. 음원 다운로드 가격은 곡당 600원인데 정액제로 인해 100원 수준으로 떨어지고 그나마 스트리밍의 경우 곡당 1.2원까지 내려간다. 곡당 1달러에 판매되고 스트리밍 요금제가 없는 아

이튠스에 비해 할값임은 분명하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POC들조차 '할값 요금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행 요금제가 결정된 2008년 당시 불법 시장으로 인해 고사 위기에 몰렸던 음원시장을 살리겠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소리바다 등의 합법화에 나섰고 이를 위해 무제한 요금제가 도입됐다. 문화부가 제안했던 요금제는 월 9천원에 다운로드 전면 무제한, 5천원에 100곡 이상이었다. 이를 업체들이 '지나치게 할값이다'라고 주장해 9천원에 120곡, 5천원에 40곡으로 합의했다.

음원시장을 망친 '공공의 적'으로 내몰린 억울함을 뒤로 하고 POC들도 과정이야 어쨌건 최근 진행 중인 음원가격 인상 논의를 반기고 있다. 문화부와 저작권위원회, 음원권리자 3단체(음원제작자협회, 음악저작권협회, 음악실연자연합회)가 음원가격을 인상에 '정상화'하고 저가의 스트리밍 요금제는 가격을 대폭 인상하거나 서비스를 축소해 저작권자들의 몫을 높여주는 게 논의의 요지다. 하지만 기대만큼 불안도 크다. 소비자들이 기꺼이 한 달에 몇 천원을 내기 시작한 지 몇 년 되지 않았는데 가격이 크게 오른다면 또다시 불법 시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 신원수 로엔 대표는 "국내에서 음악감상 시장의 소비자는 2천만명, 그중 매월 돈을 내는 사람은 400만명, 그중 90%는 정액 스트리밍 요금제를 이용하고 이들은 가격인상 시 불법 시장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소비자의 이해와 동의가 시급하다. ■

### 이규창

머니투데이 산업부 기자  
mrtrendreporter@gmail.com



● 정책

# 최신 저작물 유통 막도록 초기에 집중 모니터링

저작권은 특허, 상표와 같은 산업재산권과 달리 권리발생에 있어 어떠한 절차나 형식적 요건도 요구하지 않아 보호가 매우 용이한 구조인 반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판단이나 보호 강도는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저작권 침해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권리자들의 '창작 과정'에서의 표절과 같은 문제, 다른 하나는 저작물 '이용 과정'에서의 무단 복제와 같은 문제다. 전자의 경우 남의 작품이나 학설 따위의 일부를 허락 없이 발췌해 쓰고 출처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것으로 나타내는 표절(plagiarism)로 다루지는 경우가 많다. 보통 양심과 도덕의 영역으로 다루지지만 많은 부분 저작권 침해로 확대될 수도 있다. 개인에 의한 저작물 이용 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는 온라인을 통한 콘텐츠

무단 복제 및 공유가 다수를 이룬다. 저작권보호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조1천억원 정도의 불법 복제 피해규모 중 80%가 온라인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보호센터는 온라인에서의 불법 복제를 유통방지를 위해 유기적·지속적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에는 10여명의 온라인 전문 모니터링 요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외부 신고 접수를 위한 불법 복제물 신고사이트(www.copy112.or.kr)와 불법 침해정보 수집시스템(일명 'DAMO', 스마트 앱 전용 S-DAMO도 있다)이 가동 중이다. 불법 유통되는 저작물들의 특징을 미리 분석해 등록하고 시스템을 통해 불법 복제물의 수집에서 증거 확보,

심의에 이르기까지 자동화해 처리한다. 영화, 음악, 출판물, 소프트웨어 및 게임 등 주요 저작물이 대상이며, 최신 출시된 인기 저작물의 경우 초기에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유통확산을 억제한다.

이러한 모니터링 및 신고 접수를 통해 위원회는 웹하드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Online Service Provider)에 대해 불법 복제물 삭제 및 전송 중단, 불법 게시자에 대한 경고 등 「저작권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다. 지난해 위원회는 총 10만7,724건의 시정권고를 했는데 OSP의 이행률은 98%에 달하고 있다. 해외로 유출되는 경우엔 북경, 태국 등에 운영하는 해외사무소를 중심으로 해당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해외에 서버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기도 한다. 주요 불법 복제물 유통의 본거지로 주목돼 온 웹하드에 대한 등록제가 지난해 11월 20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불법 복제물 유통이 파일공유 프로그램 토렌트나 블랙마켓 등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검찰청,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사법경찰과의 공조 아래 디지털증거 획득 및 분석 등 수사지원도 수행하고 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 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 한 장, 음악 파일 한 개라도 저작권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함부로 게시해 공유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난해 6월 17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마련한 '디지털저작권 포렌식 기자 간담회'에서 포렌식팀이 저작물에 대한 증거분석 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영화, 드라마 등 불법 복제물의 범죄 증거를 찾고 분석하기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정석철**

한국저작권위원회 침해정보심의팀장  
jsc@copyright.or.kr



알쏭달쏭한 저작권에 대한 상식을 넓혀 드립니다. 지금부터 다음 문장을 읽고 진실(T), 거짓(F)으로 답해보세요. 많은 문제를 맞힐수록 '저작권지킴이'가 될 자질이 높아집니다!

자료: 한국저작권위원회

# 내 저작권 인식 점수는 몇 점?

신문사에 원고료를 받고 칼럼을 썼다. 이 글은 내 개인 블로그에 올려도 된다.

'신문사'는 원고료를 받고 칼럼을 썼다. 이 글은 내 개인 블로그에 올려도 된다. '신문사'는 원고료를 받고 칼럼을 썼다. 이 글은 내 개인 블로그에 올려도 된다. '신문사'는 원고료를 받고 칼럼을 썼다. 이 글은 내 개인 블로그에 올려도 된다.

지역사회복지회관에서는 시민들을 위해 무료영화 상영을 계획하고 있다. 입장료는 받지 않겠지만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지역사회복지회관'에서는 시민들을 위해 무료영화 상영을 계획하고 있다. 입장료는 받지 않겠지만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지역사회복지회관'에서는 시민들을 위해 무료영화 상영을 계획하고 있다. 입장료는 받지 않겠지만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구매한 MP3 음원을 개인 블로그에 스트리밍 방식으로 업로드 했다. 합법적으로 산 것이고 다른 이용자들이 다운받지 못하게 스트리밍 방식을 이용했으니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구매한 MP3 음원'을 개인 블로그에 스트리밍 방식으로 업로드 했다. 합법적으로 산 것이고 다른 이용자들이 다운받지 못하게 스트리밍 방식을 이용했으니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구매한 MP3 음원'을 개인 블로그에 스트리밍 방식으로 업로드 했다. 합법적으로 산 것이고 다른 이용자들이 다운받지 못하게 스트리밍 방식을 이용했으니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수업과제를 하다 보니 자료를 복사하거나 인터넷 자료를 이용하게 됐다. 이때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

'수업과제를 하다' 보니 자료를 복사하거나 인터넷 자료를 이용하게 됐다. 이때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 '수업과제를 하다' 보니 자료를 복사하거나 인터넷 자료를 이용하게 됐다. 이때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

블로그에 영화감상 쓰는 취미가 있다. 이때 영화포스터나 영화의

스틸컷 등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다.

'스틸컷 등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다. '스틸컷 등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다. '스틸컷 등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다. '스틸컷 등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다.

중학교 경제 교과서에 내가 수년 전 쓴 칼럼이 실린 것을 봤다. 내 글을 이용해도 좋다고 허락한 적이 없으니 내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다.

'중학교 경제 교과서'에 내가 수년 전 쓴 칼럼이 실린 것을 봤다. 내 글을 이용해도 좋다고 허락한 적이 없으니 내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다. '중학교 경제 교과서'에 내가 수년 전 쓴 칼럼이 실린 것을 봤다. 내 글을 이용해도 좋다고 허락한 적이 없으니 내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다.

최근 유행 중인 재능기부 중에 강연 활동이 있다. 이때 강연은 저작물이다.

'최근 유행 중인 재능기부' 중에 강연 활동이 있다. 이때 강연은 저작물이다. '최근 유행 중인 재능기부' 중에 강연 활동이 있다. 이때 강연은 저작물이다. '최근 유행 중인 재능기부' 중에 강연 활동이 있다. 이때 강연은 저작물이다.

UCC를 만들면서 30초의 짧은 음악만 삽입하고 직접 노래를 불러 녹음했으니 저작권 침해라 볼 수 없다.

'UCC를 만들면서 30초의 짧은 음악만 삽입하고' 직접 노래를 불러 녹음했으니 저작권 침해라 볼 수 없다. 'UCC를 만들면서 30초의 짧은 음악만 삽입하고' 직접 노래를 불러 녹음했으니 저작권 침해라 볼 수 없다. 'UCC를 만들면서 30초의 짧은 음악만 삽입하고' 직접 노래를 불러 녹음했으니 저작권 침해라 볼 수 없다.

● 표초희 나라경제 기자

cc creative commons



창작으로 푹푹튀는  
당신의 상상력!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지켜갑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음악·영화 파일 전체를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다운로드하는 것은 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다. 사진은 지난 3월 13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 롯데시네마에서 열린 영화 '건축학개론' 시사회 모습

## 한미 FTA로 달라진 저작권 환경,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미 FTA가 발효된 3월 15일, 한미 FTA를 반영한 개정 「저작권법」도 발효됐다. 그동안 “인터넷검색만 해도 저작권 침해”라느니 “영화관에서 스마트폰을 소지만 해도 처벌받는다”는 등 ‘한미 FTA 괴담’이 떠돌았다. 다행히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의 적극적 홍보 덕분에 괴담은 사라졌지만 한미 FTA에 대한 반감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한미 FTA로 인해서 달라진 저작권 환경을 권리자와 이용자의 측면에서 소개하고 적응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 저작권 권리 강화된 만큼 공정이용 규정도 마련돼

한미 FTA를 통해 저작권이 강화된 부분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반제작자와 실연자의 권리 존속기간이 실연 또는 음반제작을 한 때로부터 70년까지로 연장됐다(1987년법은 20년, 1994년법은 50년이였다). 따라서 올해 제작된 음반은 2083년까지 보호된다(물론 2083년 전에 존속기간이 90년으로 연장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렇다). 「저작권법」의 역사를 보면, 소설가·작가 등 저작

권 존속기간을 늘린 후 음반제작자 또는 실연자 등 주변인의 권리 존속기간을 늘리는 개정이 반복됐다.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위성방송 및 유선방송의 신호를 복호화(decoding)해 무단으로 시청하는 행위, 음반·DVD 등에 부착하는 정품인증라벨의 위조 행위가 처벌된다.

셋째, 저작권 침해 시 원고의 손해액 입증 없는 때에도 침해된 저작물당 1천만원까지, 영리 목적을 갖고 고의로 침해한 때는 저

작물당 5천만원까지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이 규정의 영향을 받으면 전반적으로 손해배상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넷째, 영리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상습적 침해가 아니라도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 처벌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상습적 침해는 영리 목적이 없어도 고소 없이 처벌될 수 있다.

반면 개정 「저작권법」은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공정이용' 규정을 뒀다. '공정이용' 규정은 한미 FTA에 의해 강제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비롯된 제도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했다라고 그것이 「저작권법」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문화의 향상·발전에 도움이 되는 때,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가치보다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때, 통상적으로 저작권자의 시장을 크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때 등에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패러디, 비판적 창작, 원작품과 다른 유형의 창작, 연구목적 이용, 썸네일 사진제작 등이 대표적 사례다. 최근 5살 어린이가 가요와 유행을 따라한 동영상을 부모가 인터넷에 올린 사건에서도 공정이용 규정이 있었다면 법원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간단히 판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FTA, 국가 간 대결 아니라 국내 산업 간 조정으로 봐야**

달라진 저작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 스스로 달라져야 한다.

우선, FTA를 국가 간 대결이 아닌 국가 내 산업 간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한국이 저작권에서 양보한 부분은 한국의 자동차·기계·섬유·해운·항공 분야의 새로운 기회로 전환됐다. 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위원회 교육원에서 개정 「저작권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일반인, 저작권산업계, 법조계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작권이 강화돼 이용이 위축됐다고 한미 FTA를 비판만 할 수 없는 이유다.

둘째, 저작권이 문화에 기여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엔터테인먼트 목적으로 만든 음악·영화 파일 전체를 같은 엔터테인먼트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다운로드하는 것은 문화를 죽이는 행위다. 영화관에서 도촬한 파일을 인터넷에 업로드하는 것은 약탈 행위다.

셋째, 저작권자들뿐 아니라 이용자들도 저작권 제도에 적극적으로 적응할 필요가 있다. 1980년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때만 해도 미국 등 선진국의 압력으로 인해서 저작권이 강화됐다. 그러나 2000년대부터는 국내 저작권자들 스스로의 로비활동으로 저작권이 강화돼 왔고 한미 FTA는 그 노력에 힘을 보태줬을 뿐이다. 「저작권법」에 있는 공정이용 규정, 저작권의 효력제한 규정, 저작권자가 정당한 권리 없이 권리를 행사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규정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정들이 있다. 이 모든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저작권자의 주장에 대응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들도 단체를 결성해 정부·국회에 대한 로비활동을 적극 벌여야 한다. 현재는 정부·국회·언론이 「저작권법」 개정 시 이용 활성화

에 관한 의견을 구하고 싶어도 접촉할 수 있는 이익단체나 싱크탱크 조직이 없고 있어서 전문성이 떨어진다. 물론 이용자들이 이 같은 입법·사법적 노력을 하는 데 필요한 「저작권법」 전문가의 활용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예전과는 환경이 달라졌다. 전국에 있는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 다양한 경험과 저작권 지식을 겸비한 예비법조인들이 있다. 이들은 리걸클리닉(legal clinic) 등의 실습과정을 통해 「저작권법」 전문변호사와 한 팀을 이뤄 개인·기업·정부를 대상으로 저작권 관련 상담 및 솔루션을 무료로 제공한다.

**저작권 이용자들도 제도 형성에 적극 나서야**

FTA로 인해 저작권이 강화됐어도 추후의 입법·사법활동을 통해 권리보호와 이용 간에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제는 숨어서 불법 다운로드나 하고 괴담에 현혹되기보다 저작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저작권 제도의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때다. ■

**박준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plawkorea@sogang.ac.kr



● 인터뷰

전윤수 '식객', '미인도'의 영화감독

# “창작자에게 돈을 지불하는 건 그 사람의 인생을 사는 것”

전화기 너머의 그는 경쾌한 목소리로 인터뷰에 응하겠노라 했다. 감정적인 것 말고는 해줄 말이 없다면서도, 그걸로 충분하다 답했다. 창작하는 이의 고뇌를 엿볼 기회가 일반인들에게는 많지 않으니. 전윤수, 2001년 영화 '베사메우초'로 서른 한 살에 데뷔. 영화 '파랑주의보'(2005), '식객'(2007), '미인도'(2008) 각본과 감독. 그의 필모그래피는 간단했지만 색감 있는 이야기는 그의 영화만큼이나 강렬했다.



일찍 (데뷔)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까지 하고 싶은 작품을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도 한국영화가 지금보다 더 산업적으로 활발할 때, 좀 더 여유 있을 때 데뷔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지금은 신인들이 데뷔할 수 있는 문이 좁아졌거든요. 콘텐츠도 적어지고 제작규모도 작아지고, FTA로 인한 스크린쿼터 축소나 폐지 같은 영향도 있을 테죠. 창작하는 사람 입장에서 위기감이 느껴져요.

영화주간지에 연재된 그의 기고를 보면서 상업영화 감독은 저작권을 갖지 못한다는 걸 처음 알았다. 연출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모든 소유는 투자·배급사에 귀속된다. 시나리오 작가도 마찬가지다.

촬영, 조명, 감독, 홍보, 분장, 영화 쪽은 너무나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일하잖아요. 그들을 다 배려해서 저작권을 나눠줄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몽땅 묶어서 투자한 사람이 저작권을 갖는대요. 저작권을 가지려면 제가 돈을 만들어서 찍고 그걸 배급해서 개봉하고 수익을 내야 하는데 혼자 그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작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본의 논리예요. 창작을 했



전윤수 감독

던 주체가 저작권을 소유하지 못하는 현실이 좀 안타깝죠.

그나마 경쟁력 있는 감독들은 계약할 때 흥행지분 같은 것을 약속하기도 한단다. 그렇다고 해도 저작권과는 다른 것이다. 저작권을 갖지 못한 자의 비애를 이야기할 때 전 감독의 눈빛이 서늘해졌다. 그럼에도 그는 저작권을 인정해 주는 문화가 되어 한다고 말했다.

창작자들이 자기 창작에 대한 권리를 발휘하는 상황이 돼야 좋은 인력이 떠나지 않고 영화계에 남아 활동을 할 텐데 그렇지 못하니 재능 있는 사람들이 떠날 수밖에 없죠. 특히 작가군이 힘들어요. 저작권 인정 못 받고 개런티도 못 받고 투자가 이뤄져야 잔금을 받을 수 있어요. 계약금만 받고 (일했다가) 날리는 경우도 있고 하니 좋은 작가는 방송 쪽으로 가고... 창작자에게 돈을 지불한다는 건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에 지불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살아온 정서들, 그것을 가치로서 인정하지 않으려는 부분이 있다는 걸 창작하는 사람으로서 느껴요. 창작자에게 돈을 지불하는 건 그 사람의 경험치를 사는 거예요. 그게 창작자의 재능이고 능력이고 상품인데 그걸 별개로 생각하면 안 돼요. 창작자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저작권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지불해야죠.

나는 대체 왜 아무 생각 없이 영화나 음악을 공유하는 이들 중에 하나였던가.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은 1인당 약 48회가량 불법 복제물을 이용했다.

공짜구경이란 게 되게 달콤하잖아요. 제휴 사이트나 IPTV를 이용하면서 예전보다 나아졌다고 하지만 (불법 복제는) 디지털화되면서 해결되지 못한 부분 같아요. 너무나 익숙해지

고 무감해지고, 이전 불법 복제를 받지 못하면 놓친 콘텐츠를 볼 수 없는 시장구조가 돼 버렸어요. 시사회도 그래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영화를 만나겠다 욕심이 있지만 제대로 된 콘텐츠를 돈 내지 않고 본다는 매력도 있어요.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해야 그것들이 재투자 돼서 좋은 작품으로 돌아오는 구조를 갖는데 그렇지 못하죠. 음악 만드는 분들도 MP3로 들으니까 세션을 제대로 안 쓰기도 한대요.

일각에서는 저작권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권리를 어느 정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 감독은 헛웃음을 지었다.

권리에 대한 보호, 이런 말은 너무 순진한 거 아닌가요. 이젠 도둑질인데 '도둑당한 사람을 얼마나 보호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개인의 창작물이고 엄청난 제작비가 투여됐고 그래서 저작권이 포함된 관람료 같은 것이 금액으로 책정돼 수용자에게 다가갔는데 그런 것들이 흐려졌어요. 보호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지켜져야 할 부분이고, 지켜지지 않아 문제고. 그러다 보니 한국 영화의 제작비 수준이 점점 낮아져요. 그럼 관객들은 안 오겠죠. 한국영화 재미없다고, 세트도 못 쓰고, 조명도 못 쓰고 그럼 영화 질은 더 떨어져서 관객들은 더 관심 없어 할 테고, 제일 급한 건 창작자나 저작권자나 모두 노력의 대가를 제대로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대기업 위주의 투자·배급 시스템에서 투자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영화를 만들 수 없단 뜻이다. 데뷔를 해놓고도 두 번째, 세 번째 작품으로 연결되는 감독이 불과 20~30%에 불과한 현실에서 자신은 지금이 상업영화 감독이어야

한다는 전우수 감독.

한국 영화계에서 제 위치를 잘 알아요. 끊임없이 영화를 만들어서 중간에서 받쳐줘야 되는, 그러니까 흥행이 아니라 계속 안타를 쳐서 투자사에 수익을 만들어주고 또 투자하게끔 만들어주는. 저 같은 사람이 흥행작이 아닌 작품을 꺼내놓으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재밌는 영화, 트렌디한 영화, 대중을 끌고 갈 수 있는 영화를 쉽게 만들어서 투자자들이 재투자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죠. 앞으로 한 열 작품 하고 은퇴하고 싶은데 그 생각이 지켜질 수 있을진 고개가 가우뚱해요. 저만 열심히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니까. 기회가 되면 다른 분야에도 도전해볼 생각이예요.

늘 인간의 삶에 애정을 갖고 트렌드에 따라 재미와 감동을 같이 주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 점점 나이가 들면서 젊은 관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두렵기도 하다는 이야기. 수다스럽다 싶을 만큼 빠르게 쏟아져 나오던 그의 이야기는 어느덧 결말을 향해 가고 있었다.

저작권은 창작하는 사람들이 계속 힘을 내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보장되지 못하면 떠나죠. '난 창작이 좋아서 굶으면서라도 할 거야' 하는 사람이 많이 줄었어요. 현장에 뛰어들고서도 수익을 얻기까지 5년 이상 고생해야 하는데 그 시기를 버틸 사람이 많이 적어진 거 같거든요. 콘텐츠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 영혼을 팔아서 만든 작품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통되면 창작할 의지가 꺾이지 않겠어요? 이걸 원, 어려워요, 안타까워요, 힘들다고만 한 것 같네요. ■

● 표초희 나라경제 기자

기차를 타고 내리는 사람들의 즐거운 표정들





# 행복한 기쁜 일기

미얀마에서 한국인 단체 관광객을 만났다. 그들은 5일 동안 국내선을 이용해 미얀마 일대를 돌아보는, 나로서는 생각도 할 수 없을 만큼 짝 짜인 일정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 중 가이드로 짐작되는 남자가 내게 다가왔다. 적당히 바지런하고 말수가 많아 사교성 있어 보이는 사람이었다. 그는 내게 미얀마의 어느 곳을 둘러보았는지 물었다. 시골마을이나 돌아다녔다는 내 시원찮은 대답에, 그는 적잖이 놀라며 동시에 실망하는 눈치였다.

“버간과 인레 호수를 가보지 않으셨다고요? 이런, 어쩌다...! 버간과 인레 호수를 보지 않은 건 미얀마를 보지 않은 것과 같은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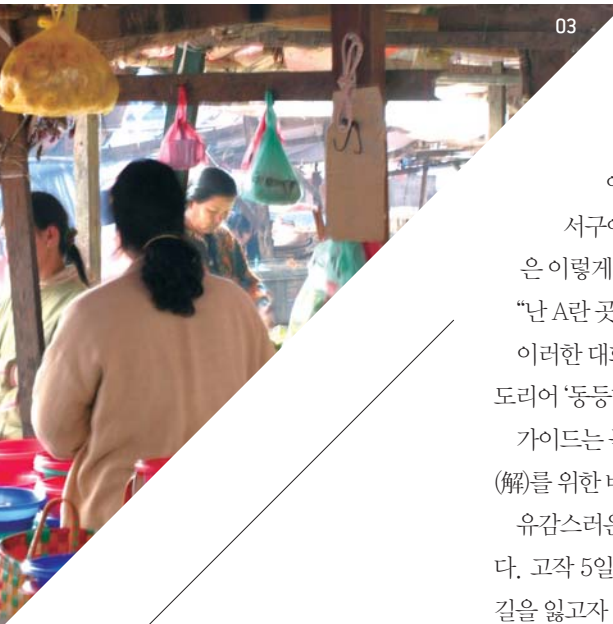
버간에 있는 수천 개의 불탑과 인레 호수의 기막힌 풍경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나는 다만 선택했을 뿐이다. 조그만 시골장터를. 그러나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씁쓸했다. 한국에 와서 불국사를 보지 않으면 한국을 보지 않은 것인가? 오늘날 한국의 문화현상 중



01



02



03

과연 얼마만큼을 불국사가 설명해 주는가?

‘다름’을 인정하기 힘들어하는 한국인들에게는 늘 정답이 있다. 정답대로 행동하면 박수를 치고 정답에서 벗어나면 루저가 된다. 문제는 정답이 하나뿐이고 정답에서 벗어난 다른 해(解)가 무한하다는 데 있다. 획일적 사고방식 때문에 무한한 해의 가능성이 사장되고 수많은 루저가 그릇되게 양산된다. 결혼을 하지 않는 자, 아이를 낳지 않는 자, 대학에 가지 않는 자, 혹은 그저 남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갖는 자...

서구에서 온 여행자들이 어느 곳을 다녔는지 물을 때는 사뭇 그 전개방식이 다르다. 그들은 이렇게 묻는다.

“난 A란 곳을 갔어. 거긴 즐거운 곳이었어. 넌 B란 곳을 갔구나. 그래, 거긴 어땠니?”

이러한 대화 속에서는 거대한 에펠탑도, 보잘것없이 무너져가는 사원도 각기 ‘다른’, 그렇기에 도리어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

가이드는 곧 나와 나눌 말이 많지 않음을 깨닫고 그가 속한 무리로 바빠 되돌아갔다. 유일한 해(解)를 위한 바쁜 걸음은 결코 방향하지 않는다. 소리 없이, 목표와 속도에 치져갈 뿐.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행복한 길 잃기. 여행이 주는 즐거움 중 절반이 여기서 벗어지는 까닭이다. 고작 5일밖에 허락되지 않은 여행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기꺼이 길을 잃고자 하는 마음자세다. 잘 구획됐으나 조금쯤 염증을 느끼는 일상의 전면에서 벗어나, 낯선 뒷골목에 몸을 던지고 방향하고자 하는 자세. 방향 속에서 영혼의 여백을 만들고 거기 잠시 앉았다 오는 ‘쉽’의 행위. 무릇 여행은 그러해야 한다. 바쁜 사람들의 짧은 여행일수록, 더더욱 그러해야 한다.

사실 미안마처럼 길을 잃기에 적당한 나라도 없다. 그곳은 지도에도 잘 나와 있지 않은 작은 마을에 머물며 빗방울처럼 흘러다니기 딱 좋은 곳이다. 게다가 그곳에는 길 잃은 빗방울에게 꼭 어울리는 ‘빗방울 전주곡’이 있다.

전주곡이 울려 퍼진 것은 한낮의 뜨거움이 식고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말하자면, 아름다운 노을과 서늘한 산들바람이 열대지방 특유의 어찔한 열기를 몰아내고 등장하는 매혹적인 시간대에 전주곡도 함께 등장했다. 당연히, 나는 그 등장에 번번이 마음을 앗겼다.

음악은 나무 수레에서 울려 퍼졌다. 무지개처럼 환한 빛으로 채색되어 음악 테입을 가득 싣고 다니는 수레였다. 수레에 매달린 스피커에서는 미성을 선호하는 미안마인들의 기호에 따라 한없이 부드러운 음악이 둥글게 둥글게 울려퍼졌다. 아름다운 노을을 배경으로 수레가 마을 공터를

01 엄마처럼 동생을 돌보며 호박씨를 먹여주고 있는 누나  
02 음악을 실어 나르는 바로 그 수레 03 이른 아침의 시장 풍경 04 뒷골목에서 만난 미안마 어린이들 05 탁발에 나서서 어린 비구니들


# 미얀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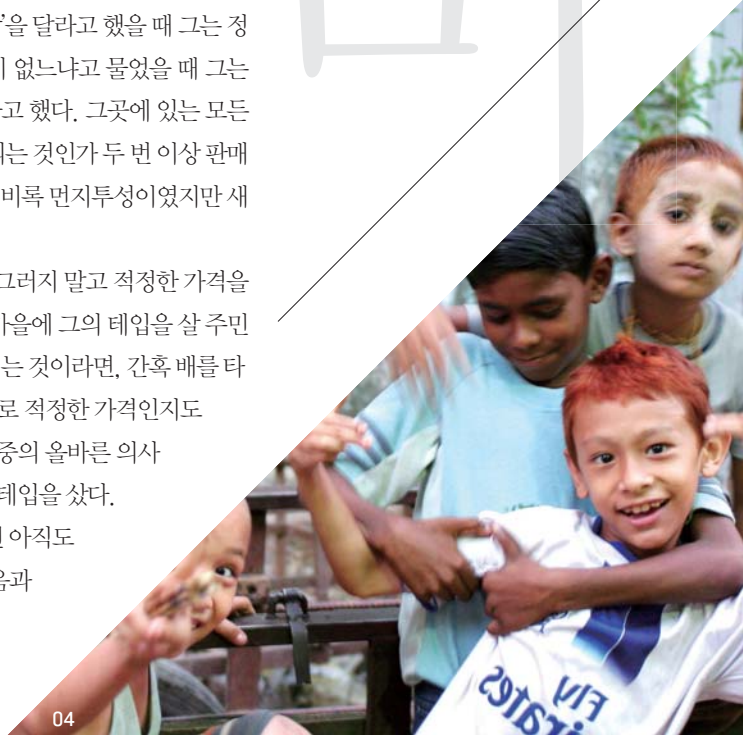
가로지를 때마다 나는 함께 걸으면서 수레의 앞모습을 보고, 옆모습을 보고, 뒷모습을 보았다. 수레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낮을 놓고 음악을 들었다.

동글고 무난한 멜로디의 음악은 1980년대 우리 진전가요를 연상시키는 장르 일색이었다. 그러나 장르란 선택하려 드는 자에게만 유효한 것. 열대의 하루 중 가장 정겨운 시간대에 연 날리는 아이들과 산책 나온 꼬마 비구니 스님들과 쪼그리고 앉아서 머리를 빗는 할머니와 길을 건너는 병아리 떼 사이를 거니노라면 알게 된다. 선택이란, 오직 바쁜 자들의 몫이라는 걸. 느긋한 자들은 주어진 공간의 배열과 사건의 나열을 유순히 음미할 뿐이라는 걸.

밍군 빌리지에서도 역시나 비슷한 빗방울 전주곡을 만났다. 음악이 흘러나오는 수레를 향해 다가가자, 청년이 환히 웃었다. 청년에게 그 순간 나오고 있는 '그 음악'을 달라고 했을 때 그는 정지 버튼을 누르고 정말로 '그 음악'이 나오던 테이프를 주었다. 새 테이프가 없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테이프의 먼지를 털며 이것이야말로 새 테이프이라고 했다.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은 어차피 먼지에 뒤덮여 있었다. 중고와 새것의 차이가 처음 판매되는 것인가 두 번 이상 판매되는 것인가로 결정되는 거라면, 아직 한 번도 팔린 적 없는 그 테이프는 비록 먼지투성이었지만 새 것이라 불려야 하는 건지도 몰랐다.

얼마냐고 물었을 때 그는 예상되는 가격의 대략 다섯 배를 불렀다. 그러지 말고 적당한 가격을 알려달라고 했을 때 그는 그것이야말로 적당한 가격이라고 했다. 그 마을에 그의 테이프를 살 주민은 없어 보였다. 가격이라는 것이 수요와 공급 사이의 접점에서 결정되는 것이라면, 간혹 배를 타고 그 작은 마을을 방문하는 외국인만을 상대하는 그에게 그것은 정말로 적당한 가격인지도 몰랐다. '몰랐다'가 두 번 반복되면 '맞는 것'이 되는 것이 느슨한 여행 중의 올바른 의사 결정 태도다. 미얀마에서는 미얀마적인 것이 옳은 것. 나는 그 가격에 테이프를 샀다.

미얀마를 다녀오고 나서 제법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해질녘이 되면 아직도 고개를 두리번거리곤 한다. 황야의 무법자처럼 이 도시의 기계적 소음과 부산함을 일시에 잠재우며 울려 퍼질 빗방울 전주곡을 고대하면서. 아마 나는 미얀마에서 영혼이 여백을 만들어 잠시 쉬었던가 보다. 거기서 길을 잃어 행복했던가 보다. 



04

05



오소희 여행작가

endofpacific@naver.com

'사람' 여행가. 세상의 변방을 거닐며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들과 소통, 연대하는 힘을 기르고 있다. 저서로는 '바람이 우리를 데려다주겠지', '사랑바보' 등이 있다.

# 순환출자를 통한 몸집 부풀리기, 규제하거나 시장경제의 힘을 활용하거나

여야를 막론하고 순환출자(順換出資)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순환출자가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금지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재벌그룹들이 계열사를 늘리고 계열사를 지배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요 수단이므로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한다. 금지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과거에 이미 폐기한 오래된 규제이며 따라서 이와 같은 구시대적 규제를 다시 부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 재벌들, 투자금액보다 더 큰 비율로 여러 기업의 경영권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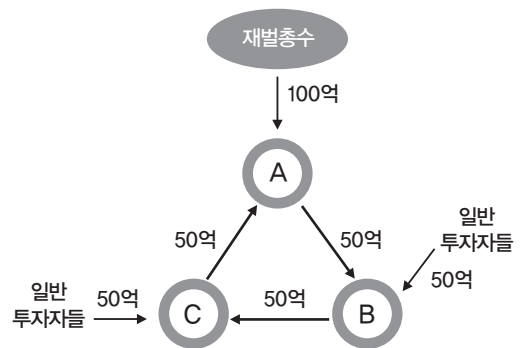
3개 이상의 계열사가 연쇄적으로 출자해 자본금을 늘려 나가는 것을 순환출자라고 한다. 예컨대 재벌총수가 100억원을 투자해 A사를 설립했다고 하자. 재벌총수가 B사를 설립하도록 A사에 지시하면 A사는 다음과 같이 B사를 설립할 수 있다. B사에 50억원을 투자하고 일반 공모로 50억원의 투자를 추가로 여러 사람들로부터 유치하면 100억원짜리 B사를 설립할 수 있다. 이때 B사의 경영권은 최대주주인 A사가 갖게 되므로 A사를 소유한 재벌총수는 B사의 경영권도 소유한 셈이 된다.

재벌총수는 A사를 경유해 B사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C사를 설립하라고 지시한다. 즉 B사가 50억원을 투자하고 일반 공모로 50억원을 모집한다. 이 경우 C사의 자본금도 100억원이 되며 역시 재벌총수의 지배 아래 있게 된다. 재벌총수는 C사로 하여금 다시 A사에 50억원을 투자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A사의 자본금은 150억원으로 증가하게 되지만 경영권은 여전히 재벌총수에게 있다. 전체 자본금인 150억원의 3분의 2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쇄적으로 B, C사의 경영권도 재벌총수에

계 주어진다.

재벌총수는 100억원만을 투자했는데 B와 C사의 대주주가 될 뿐만 아니라 A사의 자본금도 50억원이 증액되는 추가적 혜택도 누리게 된다. 보통의 경우 주식회사의 경영권은 최대주주가 갖게 되는 권리이므로 자신이 투자한 금액의 2배 정도 되는 회사를 소유할 수 있다. 위에서 보여준 사례는 순환출자를 이용해 투자금의 3.5배 자본금을 가진 회사들을 경영할 권리를 확보했다. 이것이 재벌들이 순환출자를 선호하는 원리다. 순환출자에 더 많은 회사를 이용하면 3.5배보다 더 큰 비율로 여러 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B사가 부도가 난다면 A사의 입장에서는 자본 중 큰 부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C사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대주주이며 경영권자가 사라지게 된다. C사의 경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다. 때문에 B사는 부도나기 전에 C사로 하여금 모기업의 부도를 막도록 할 동기가 있다. 즉 한 계열사가 부실해지면 순환출자에 연관된 다른 계열사들까지 부실해지는 부실



〈그림 1〉 순환출자의 자본 흐름

### 순환출자를 통한 부풀리기와

폐해를 막을 방법은 무엇인가?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규제를 재도입해 거품을 제거하거나

인수합병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허용하면 된다. 두 가지 정책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달려 있다.

문제는 순환출자도 금지하지 않고 인수합병도

활성화하지 않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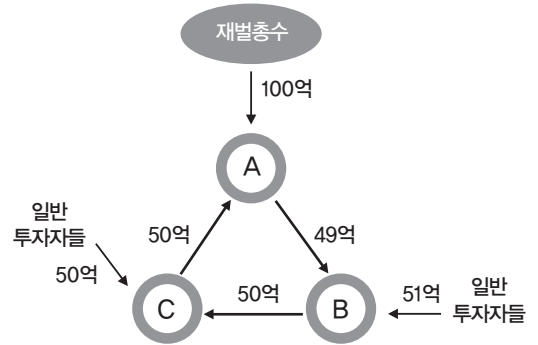
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현행 상법에서는 A사와 B사가 서로 출자하는 상호출자는 금지돼 있지만,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순환출자의 규모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순환출자는 사실 상호출자의 복잡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 순환출자 금지하는 규제 재도입 혹은 인수합병 활성화

순환출자가 외국에서는 문제 되지 않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일까? 이와 관련해 생각할 것은 인수합병의 가능성이다. 우리나라는 인수합병이 활성화돼 있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쉽다. 순환출자에 참여한 중간에 위치한 기업을 인수하면 그 밑에 소속된 기업들도 한꺼번에 인수할 수 있다. 또한 순환돼 있으므로 그 밑의 기업들로 연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순환출자에 포함된 기업들은 인수합병의 좋은 대상이 된다.

<그림 2>는 <그림 1>을 약간만 변형한 것이다. B사에 대한 A사의 투자금이 49억원이고 일반투자자들이 투자한 금액이 51억원이라고 생각해 보자. 이 경우 B사의 가치는 100억원이다. 일반투자자들은 분산돼 있으므로 경영권은 여전히 최대주주인 A사 또는 재벌총수가 보유하고 있다. 만약 누군가가 순환출자된 상황을 인지하고 B사를 인수하려 한다고 생각해 보자. 일반투자자들은 그들이 투자한 51억원보다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면 주식을 팔 것이다. 이 대가를 주고 주식을 사오면 B사를 인수할 수 있다. 이렇게 B사를 인수한다면 C사의 경영권도 같이 인수된다. B사는 C사의 최대주주이기 때문이다. 물



<그림 2> 인수합병 위험을 내포한 순환출자

론 같은 이유로 A사의 지분도 일정부분 보유하게 된다. B사의 인수기업은 새로운 재벌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인수합병의 위험 때문에 외국에서는 순환출자를 하지 않는다. 다르게 해석하면 인수합병을 통해 순환출자가 자연스럽게 해소됐다고 볼 수도 있다. 애초 우리나라의 재벌총수는 순환출자를 통해 몸집을 부풀렸다. 하지만 부풀린 몸집을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처음부터 몸집을 부풀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집을 부풀린 기업이 있다면 인수합병을 통해 순환출자의 맥이 끊어져 어차피 순환출자는 계속될 수 없다.

이런 이치를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은 두 가지다. 첫째,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규제를 재도입해 거품을 제거하도록 한다. 둘째, 인수합병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허용한다. 이 경우 순환출자가 해소되도록 하는 시장경제의 힘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두 가지 정책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순환출자도 금지하지 않고 인수합병도 활성화하지 않는다면, 순환출자를 통한 부풀리기와 폐해는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필자

\* 이 글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KD의 공식견해나 『나라경제』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상택**  
이화여대 경제학 교수  
sangkim@ewha.ac.kr

# Negative wealth effect

## 한국경제의 복병, '가계부채'와 '부동산 거품 붕괴'

2011년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경제성장률을 앞지른 후 두 지표 간 차이는 더욱 확대되고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증가율은 점차 둔화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도 가계부채는 정부의 연착륙 대책을 무색하게 하듯 2011년 말 현재 약 912조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특히 전체 가계부채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최근 3년 사이 잔액이 약 14% 늘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연체율은 무려 85%나 증가했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향후 경기가 안 좋아져 소득증가율이 둔화하고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 자산가격 거품 붕괴, 불황 국면의 장기화 초래

국민은행이 발표하는 전국 주택매매가격지수는 2012년 2월 말 현재 102.8p(2011년 6월 100 기준)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6%에 가까운 성장률을 시현하는 등 주택가격을 포함한 부동산가격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경제의 펀디멘탈이 취약할 경우 경기회복의 모멘텀 역시 작기 때문에 이 추세는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 같다. 본래 내수기반이 취약하고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유럽위기의 조기 해결 가능성이 낮아 당분간 경기하강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주택수요를 떠받쳐 왔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 사회·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부동산가격의 중장기 전망 역시 그리 밝지 않다. 오히려 지금은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격 거품의 붕괴로 불황 국면이 장기화될 것이 우려되는바, 자산가격의 급격한 하락은 가계 및 기업(금융회사 포함) 자산의 동반부실로 인한 음(陰)의 자산효과(negative wealth effect; 주택자산의 가격하락으로 인한 소비



2012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대폭 감소하고 실거래 가격도 약세를 보여 주택시장이 급속히 냉각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월 서울 송파구 잠실2단지 상가 내 공인중개업소에 내걸린 '급매매' 매물표의 모습

감소)를 통해 내수를 위축시키고, 자산가격 거품을 유발했던 시중의 과잉유동성은 거품 붕괴와 함께 퇴장하면서 신용경색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금은행의 총예금 대비 기업예금 비중은 2005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 추세가 더욱 두드러진 반면, 가계예금 비중은 하락하고 있다. 현 추세로 가계예금이 줄고 기업예금이 증가할 경우 금융회사의 유동성 관리는 점점 어려워지고 자금중개 기능도 약화될 수 있다. 기업예금은 가계예금에 비해 건당 규모와 변동성이 커 일시적으로 인출수요가 몰릴 경우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이 자금부족 주체에서 자금잉여 주체로 바뀌어 가면 가계예금을 기업대출로 연결해 주던 전통적 자금중개 기능은 약화된다. 이 경우 기업예금을 가계대출로 연결하는 새로운 신용채널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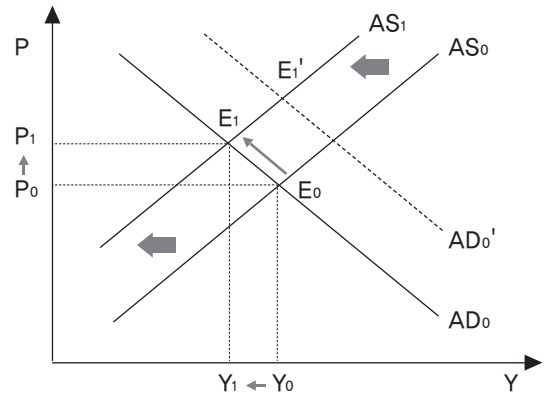
이 부각되는데, 이때 가계대출이 부실화되면 기업예금의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이 발생해 가계발 금융위기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성장·고용의 딜레마 심화→디플레이션으로의 전환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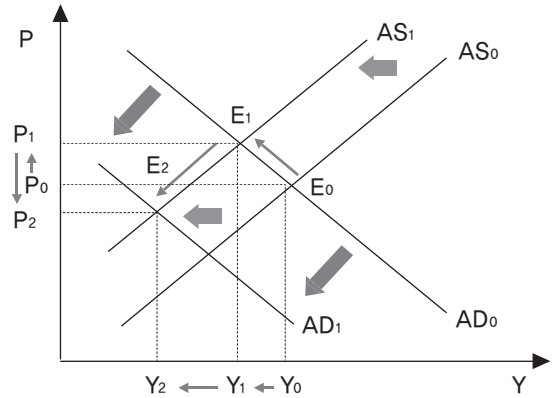
우리 경제는 천연자원, 소재·부품 등 원재료, 중간재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물가가 환율 변동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 게다가 최근엔 주요 수출대상국이 경기침체에 빠져들고 있어 소비, 투자 등 내수 역시 부진을 면치 못해 대내외적으로 총수요가 확대될 모멘텀을 발견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화가치가 하락하기만 하면 수입물가가 올라 공급 측면에 애로가 발생(그림 1)에서 총공급곡선이  $AS_0 \rightarrow AS_1$ 으로 좌측 이동)하면서 생산감소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그림 1)에서  $E_0 \rightarrow E_1$ )이 염려되곤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총수요 확대정책을 실시할 경우 물가가 더욱 올라 서민생활을 위협하게 되고(그림 1)에서  $E_1 \rightarrow E_1'$ ), 그렇다고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인상하면 가계부채 부담이 가중되고 부동산시장이 경착륙할 우려가 있다. 또한 수출 주도의 제조업은 고생산성-인력부족, 내수 위주의 서비스산업은 저생산성-과잉취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지닌 채 양극화로 치달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절약적 기술을 채택하고 있는 제조업에 성장 드라이브를 걸 경우 경제의 대외의존성은 더욱 고착화되고 고용사정은 개선되기 어렵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생산과 고용이 감소하면서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 총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고 이에 따라 생산, 고용, 물가가 동시에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그림 2)에서  $E_1 \rightarrow E_2$ ). 더욱이 부동산시장이 경착륙할 경우 가계부채 부담이 증폭

-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
-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더욱이 부동산시장이 경착륙할 경우 성장과 물가, 성장과 고용의 딜레마 상황을 심화시켜
- 디플레이션 국면으로의 전환을 더욱
- 빠른 속도로 부추길 수도 있다.



(그림 1) 스태그플레이션



(그림 2) 디플레이션

되면서 신용경색과 원화가치 급락으로 이어지고 성장과 물가, 성장과 고용의 딜레마 상황을 심화시켜 디플레이션 국면으로의 전환을 빠른 속도로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참고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은 디플레이션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가계발 금융위기 및 거품붕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디플레이션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호(5월호)에 상세히 논의하기로 하자.

\* 이 글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KD의 공식견해나 『나라경제』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dhkim@kfi.re.kr

# 창의성으로 변신하라

; 확대 · 축소

## 커져라, 여의봉아! 작아져라, 여의봉아!

손오공이 여의봉을 구름에 닿을 만큼 크게 하고 귀에 넣을 수 있도록 작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물이나 관념을 확대시키고 축소시키는 발상법을 통해 창의성을 발휘해 보자. 이 발상법은 발명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 모니터나 스피커의 크기를 키우거나, TV나 라디오 등을 작게 만들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도 있다. 동종업계 1위의 회사로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인수합병(M&A)을 통해 덩치를 키우는 것이다.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사업단별로 분할해 위험을 회피하기도 한다.

하지만 확대하거나 축소할 때는 이러한 작업에 수반되는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비행기를 무작정 크게 만들면 날지 못할 수 있다. 길이를 늘이면 날개의 면적은 제곱씩 늘어나는 반면 체적은 세제곱씩 늘어나므로 날개가 몸집을 견디지 못한다. 인수합병을 통해 회사의 덩치를 키우는 것도 합병에 따른 X-비효율성(경쟁 압력이 떨어져 기업 내부에 생기는 비효율을 총칭, 여기서는 기업이 커짐에 따라 내부관리 기능이 떨어져 생기는 비효율을 의미)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합병의 이익은 없어지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몸집만 비대한 공룡이 돼 사라질 수 있다. 축소할 때도 마찬가지다. 물체를 줄여나가다가 나노(nano, 10<sup>-9</sup>) 수준에 이르면 물성이 갑자기 달라진다. 나노 테크놀로지 연구에서 하향식(Top-down) 접근과 상향식(Bottom-up) 접근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그러한 데서 연유한다.

아이작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The Law of Gravity)을 발견한 것도 이 확대·축소의 발상법을 이용한 것이다.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것을 하늘 위로 확장해 달을 보며 사과와 지구의 상호작용, 달과 지구의 상호작용의 관계를 비교해 만유인력을 발견한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경제학으로 확장해 두 도시 간 거리와 두 도시의 인구 수(만유인력의 법칙에서 질량에 해당)로 소매업의

상권을 결정하는 원리(The Law of Retail Gravitation)를 만들었고, 최근에는 국제무역에서 만유인력 모델을 많이 활용한다.

비즈니스 창의성 분야의 전문가 마이클 미갈코의 「창의적 자유인」에는 한 사이즈로만 나오던 콘돔을 20% 정도 키워 매그넘 콘돔으로 파는 사례가 나오는데 이것의 판매 실적이 최고라고 한다. 남자들이 큰 것을 달라고 할 때 느끼는 자신감이나 과시욕 같은 것이 판매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유로 여성용 옷이나 브래지어에 실제 사이즈와는 다른 사이즈의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방법도 있다. 55사이즈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조금 더 큰 사람도 그 사이즈를 입을 수 있도록 하든지, C컵 브래지어라고 하면서 그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를 가진 사람도 착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등이 해당된다.

## 선택을 축소해도 좋을 수 있다

전통경제학 특히 합리적 선택이론에선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행동경제학에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서양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는 애플타이저(전채요리), 스프, 샐러드 소스, 메인요리의 종류와 조리 정도, 디저트 등 여러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데 서양사람 중에도 이것을 불편해 하는 사람이 많다. '오늘의 요리'와 같이 하나의 메뉴로 성공을 거둔 레스토랑도 많고, 호텔이나 심지어 슈퍼마켓에서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의 수를 축소해 판매량을 늘린 사례도 많다.

올해도 벌써 4분의1 이상이 지났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계획한 것도 많았겠지만 이제 선택을 줄여 한 가지라도 확실히 추진해 새롭게 변신하는 2012년이 되도록 하자. 당첨



**노경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실 비서실장  
 kwrho@mest.go.kr  
 경제학 박사. '두뇌 개발', '창의성'에 관심이 많으며, 생각을 꽃피우는 방법을 소개한 책 '생각 3.0'을 펴냈다.

# 중동지역 전문인력 진출 활성화 방안

고용노동부

취업이 힘들어 고민이라면 중동으로 눈을 돌려 보자! 세계경제 둔화에도 고유가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중동에서는 건설뿐 아니라 교육, 의료, 원전 등에서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활로를 뚫겠다는 취지로 지난 2월 중동지역 전문인력 진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책해설 Plus에서는 중동지역의 일자리 현황과 전망 등을 살펴보고, 현지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일꾼을 직접 만나 그곳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새 정책을 말한다

# 청년들이여, ‘기회의 땅’ 중동으로 눈을 돌리자!

1970년대 제1차 중동 붐 당시, 우리나라 건설 근로자들이 떠나면 열사의 땅 중동에서 땀 흘려 일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에는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월등히 높은 급여가 매력적이었고, 그렇게 벌어들인 외화가 가계에 보탬이 됨과 동시에 기업과 국가 발전의 소중한 종자돈이 되기도 했다.

## 세계 최고 인프라에 쾌적한 생활여건 갖춰

지금, 중동은 어떤 상황인가? 지난 2월 터키를 시작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UAE 중동 3개국을 순방하고 돌아온 이명박 대통령은 “중동은 더 이상 열악한 사막의 땅이 아니며, 주요 도시들은 모두 세계 최고 인프라에 쾌적한 생활여건을 갖춰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로 나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발 재정위기로 세계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중동 국가들은 고유가 덕에 호황을 누리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UAE 세 나라가 국가개발계획에 투입하는 연간 예산만 6천억달

리에 이른다. 건설뿐 아니라 IT,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인력과 자본을 요구하는 프로젝트들이 대거 추진되고 있다. 말 그대로 ‘제2의 중동 붐’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근무환경도 완전히 바뀌었다. 두바이를 비롯한 중동의 주요 도시는 세계의 여느 대도시 못지않은 IT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영어도 자유롭게 통용되고 있다. “흔히들 중동이라고 하면 열사의 사막을 생각한다. 하지만 두바이는 중동 최대의 무역항을 갖춘 엄연한 해안도시고, 그 어떤 도시보다 역동적이고 현대적인 그야말로 단어 그대로의 ‘City’다.” 2010년 두바이항공 승무원으로 입사한 윤모 씨의 이야기다.

요컨대 제2의 중동 붐과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근무여건은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을 열어주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정부는 ‘중동지역 전문인력 진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우리 인력이 중동 지역에서 손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지원 전략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책을 통해 전문인력

〈표〉 2012년 중동지역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사업명	부처(수행기관)	하반기(990명)	인턴기간	지원 대상
중소기업 해외인턴	중기청(중소기업진흥공단)	80명	6~8개월	대학 4학기 이수자(전문대 2학기) 및 졸업 후 3년 이내
외식기업 청년인턴	농식품부(농수산식품유통공사)	60명	3~12개월	식품관련학과 4학기 이수자(전문대 2학기) 및 졸업 후 1년 이내
해외관광 인턴	문화부(한국관광공사)	50명	6개월	대학 · 전문대 졸업(예정)자
글로벌 현장학습	교과부(대교협, 전문대교협)	400명	4~6개월	대학 · 전문대 재학생, 휴학생
글로벌 무역 전문가 인턴	지경부(무역협회 외 4개 기관)	400명	2~6개월	대학 · 전문대 재학생, 휴학생 및 졸업생



중동 카타르 도하에서 한 시민이 마천루 숲을 뒤로 하고 조깅을 하고 있다. 2022년 월드컵 유치에 성공한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들이 대거 진행 중이다.

수요 발굴, 중동지역에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 민·관 협력지원체계 정비 등 3대 핵심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유망 직종 DB 제공 등 맞춤형 취업지원

첫째, 중동 현지 또는 해외정보망을 활용해 건설·항공승무원·간호사 등 기존의 취업알선 직종을 넘어 IT·자원개발 등 현지 유망직종의 전문인력 수요를 발굴한다. 각 직종별로 전문인력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들에게 구인정보, 자격요건, 근무조건 등을 상세히 제공하는 등 맞춤형 취업지원을 추진해 나간다. 전문인력이 우리나라 진출기업이나 자영업의 범위를 넘어 현지기업 및 글로벌 기업에도 취업할 수 있도록 구인처 개척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둘째, 중동지역에 특화된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단기적으로는 중동지역을 대상으로 ‘자치단체-학교’ 협력모델인 글로벌 청년취업(GE4U)사업, 해외취업연수 등을 실시한다. 중·장기적으로도 중동 국가에 청년 인재를 매년 파견해 지역 전문가로 육성하고, 중동 국가들과 직업훈련 분야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식기업 해외인턴, 관광인턴, 글로벌 무역전문가 인턴 등 관계부처별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을 중동지역 인력수요에 부합하도록 규모를 확대하고, 하반기 해외인턴 선발 시 중동지역 우선 선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동지역 자원개발 및 대형 프로

젝트 수주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턴에 대해서는 취업비자를 연장하는 등의 조치도 강구할 것이다.

셋째, 민·관 협력 지원체계를 정비한다. 민간 부문의 역동성을 최대한 살려 나가면서 공공 부문에서의 체계적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확충할 것이다. 우선 해외 프로젝트 진출기업 및 정부부처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중동지역 전문인력 진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지원 협의체’를 운영해 취업비자 등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동 국가 현지공관에 해외취업담당관을 지정해 현지에서도 취업 관련 애로사항 해결에 노력한다.

중동 진출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해외기업-구직자’ 간 화상면접 지원, 취업 희망국가 및 직종에 대한 상세정보 제공 등 심층적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외 취업지원 종합상담센터를 설치하는 등 온·오프라인에 걸쳐 폭넓은 서비스도 제공할 것이다. 특히 올해 5월과 10월에는 중동지역을 대상으로 한 취업박람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해 현장에서 ‘구인-구직’이 바로 이뤄지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과거 우리 아버지 세대와 달리 이제 중동이 필요로 하는 인력의 대부분은 전문 관리·기술직 고급 인재들이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중동 진출 인력이 해마다 2천명에 달하지만, 신규 인력이 크게 부족할 정도로 인력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에게겐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이 기회를 잘 살린다면 우리의 일자리 영토 확장은 물론, 국내 청년실업 문제 완화와 국가 브랜드 제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우리 청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청년들이여, 이제 중동으로 눈을 돌려 보자! ▶ 관련 뉴스



**이태희**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관  
sunlight915@moel.go.kr

중동 일자리 시장

## 중동 해외인력 수요 폭증... 완벽 냉방으로 한국보다 시원해

지난해 내내 민주화 시위사태를 겪었던 중동지역의 청년 실업률을 보면 30%를 넘는 나라가 많다. 하지만 해외 인력을 적극 받아들이는 나라들도 있다. 산유국이면서 선진국 이상의 높은 소득수준을 갖고 있는 UAE, 카타르, 쿠웨이트는 고유가로 벌어들인 오일머니로 철도·공항 등 인프라 시설부터 공장, 도시 건설까지 엄청난 규모의 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렇지만 전문지식을 갖춘 자국민의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아 개발에 필요한 인력을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이들 3개국의 외국인 비율은 약 80%에 달한다.

지난해 플랜트 기자재 공급업체인 현지기업 A사 사장이 자기 회사에서 일할 한국인을 소개해 줄 수 없겠느냐고 물어왔다. UAE에서 공사를 수주한 한국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을 상대로 영업을 해줄 한국인 관리자를 찾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들이 중동지역에서 프로젝트를 대거 따내자 현지 기업의 한국인 채용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건설 분야 외에도 눈여겨볼 일자리는 많다. 특히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제약이 많은 중동에선 한국 여성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UAE의 에미레이트 항공과 에티하드 항공에는 한국 여성 승무원이 각각 700명, 150명 정도 일하고 있다. 특급호텔에서 일하는 한국 여성들도 늘고 있다. 또한 의료시설이 늘어나면서 의사·간호사 등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다. UAE와 쿠웨이트는 한국 의료인의 면허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의원 개원도 비교적 쉬운 편이다.

대부분 중동에선 영국 식민지의 영향으로 영어가 통용된다. 현지기업에 취업하려면 영어와 더불어 해당 분

야의 전문지식을 갖춰야 한다. 중동지역은 산유국 특성상 석유가스, 석유화학 등 산업 및 건설 분야의 일자리가 많다. 중동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에는 전문지식을 갖춘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한국인도 자격요건만 갖추면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2022년 월드컵 개최국으로 결정된 카타르는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일자리가 폭증하고 있다. 전 세계에 350개 이상의 사무소를 갖고 있는 인력채용 중개회사 리드 스페셜리스트 리크루트(Reed Specialist Recruitment)사는 중간 관리자급 이상 전문인력 중개회사다. 이 회사는 카타르가 필요로 하는 해외 전문인력 채용을 위해 뉴질랜드·영국·남아공에서 최근 취업설명회를 열었고, 수백명의 취업을 성사시켰다.

미국 엔지니어링 기업인 플루어사의 아부다비 현장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근무했던 어느 한국인은 “외국 업체는 권한과 책임이 분명해 한국회사보다 일하기 쉽다”고 말한 적이 있다. ‘중동=열사의 땅’이라는 등식도 깨지고 있다. 냉방시설이 완벽해 한여름에 오히려 한국보다 더 시원하게 일할 수 있다. 사회·교육·문화적으로 서구식 시스템이 잘 갖춰져 생활환경도 서울에 크게 뒤지지 않는다. 우리가 몰랐던 중동, 달라진 중동. 중동 취업시장의 문을 힘차게 두드리 보자. **박민정**



**오응천**  
KOTRA 중동지역본부장  
ecoh@kotra.or.kr

# 모자이크 사회지만 이슬람으로 하나 돼

역사 속에서 우리는 중동 사람들과 여러 경로를 통해 만나왔다. 고구려 유민 고선지가 당나라 군사를 이끌고 탈라스강변으로 가 사라센 군인들을 만났고, 장안에서는 신라와 서역의 상인들이 어울렸으며, 개경을 내 집 드나들 듯하던 회회인(回回人, 무슬림을 지칭하는 말)들이 수만을 헤아렸다. 사람만 오간 것이 아니다. 신라인들은 왕릉 주변에 서역인의 석상을 세웠고, 개경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 아랍주(아랍지방을 거쳐 몽골에서 전래된 술, '아락'은 아랍어로 소주를 가리킴)를 마셨다. 세종대왕 앞에서 축사를 낭송하던 무슬림 대표의 예에서처럼 우리는 중동지역에서 온 사람들과 즐거운 만남을 가져왔다. 한동안 잊혀졌던 그들을 다시 만난 지 이제 반세기다.

아랍 국가들은 아랍어를 모국어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결정적 공통점이 있지만 사실 이란이나 터키는 각각의 모국어가 따로 있다. 따라서 이들이 여타 아랍 국가들과 중동이라는 하나의 틀로 묶이는 이유는 이슬람 역사를 공유한다는 점과 현재 이슬람을 신봉하는 국민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일 것이다.

중동은 말하자면 모자이크 사회다. 어떤 유기체적 결합을 통한 동질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말이다. 중동 국가 각각은 자연환경뿐 아니라 역사발전 과정, 의식이나 정치·경제 상황이 모두 다르다. 그러니 '중동 문화'라고 뭉뚱그려 부를 수 있을지 의문마저 제기하게 된다. 이슬람으로 인해 중동 각국이 무척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곳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정치적으로 통일된 국가 모양새를 갖추본 적이 없다. 더구나 19세기와 20세기를 가로지르며 위세를 떨친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의 입맛에 따라 강제로 쪼개진 후 분열 양상이 견고해지

기만 했다.

그러면 중동을 하나로 아우르는 단 하나의 문화적 양상인 이슬람에 대해 생각해보자. 우리나라에서는 전근대적이고 후진적 종교라는 인상을 얻고 있지만 가톨릭의 뒤를 잇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교세를 가진 종교다. 13억명이 넘는 교인을 가진 보편적 종교라는 말이다. 쉽게 생각해보자. 세계적이고 보편적인 종교가 무척이나 비도덕적이고 반인도적일 수 있는 걸까? 당연히 계도 무슬림의 절반은 여성인데 그런 여성을 억압하고 학대하는 종교가 어떻게 보편종교가 될 수 있었을까?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항상 괴리가 있기 마련이다. 우리는 보통 무슬림을 통해 이슬람을 이해하려 하는데 여기서 많은 오해가 생겨난다. 이슬람은 매우 가부장적 사회에서 생겨나 유지되고 발전했다. 1,400여년 전 배태된 이슬람의 혁명적 이상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외연만을 앵무새처럼 외쳐대는 가부장 문화가 이슬람의 정신을 가장해 행세하고 있는 것이다. 이슬람이 사회 내에서 기능하는 정도도 지역과 나라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 그리고 중동 사람들의 일상적 삶에 이슬람이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생각해볼 문제다. 예를 들어 중동 국가들과 국가대표급 축구경기를 자주 치르고 있는데, 그들이 추구하는 방식을 '이슬람식' 축구로 봐야 하는가 말이다. [박지현 기자]



**안정국**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HK연구교수  
kookan@daum.net

취업성공자 인터뷰

## “명문대 졸업장 · 토익점수 필요 없어요”

임광태(Peter Lim, 38세) 에미레이트항공사 승무원/승무원 트레이너



### 취업한 지 얼마나 됐나? 입사 계기는?

6년이 넘었다. 중동에 오기 전에는 한국에서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석사를 마치고 프리랜서로 강의를 했다. 부모님께서 박사까지 공부해 교수가 되길 원하셨다. 하지만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었고, 도전하고 싶었다. 어렸을 때부터 중동에 관심이 많았고 자원이 풍부한 만큼 기회도 많을 거라 생각했다. 에미레이트 항공사의 승진 체계가 한국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알고 입사를 결심했다.

###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승무원을 하면서 승무원을 가르치는(트레이너) 일을 병행하고 있다. 트레이너로는 아시아 남자 최초다. 물론 여자들이 많이 일하는 곳이니 남자가 별로 없긴 하다(웃음). 하지만 전 세계 100여개국 사람들, 특히 영어가 모국어인 영국, 호주 사람들 앞에서 영어로 그 사람들을 교육시킨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

### 입사 준비과정에서 한국과 차이점이 있다면?

한국 항공사는 지원 자격이 까다롭다. 대학 졸업장과 토익점수가 필수다. 하지만 우리 회사는 고졸도 지원 가능하며, 영어점수도 필요 없다. 이태원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친구가 열심히 스피크 쌓기를 한 친구보다 유리할 수 있다. 손님을 대하는 매너나 손님과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기 때문이다.

### 중동에 대한 부담은 없었나?

물론 있었다. 처음엔 잘 몰랐으니까. 중동하면 걸프전, 테러 등이 떠올랐고 무슬림도 과격해 보였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코란이 울려 퍼지는데 기분이 묘하더라. 200미터 간격으로 사원이 있고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니 시끄럽기도 했고, 적응이 잘 안 됐다. 하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다. 오픈마인드가 중요하다. 문화라는 것은 존중받아야 하는 거지 다르다고 배척하는 것은 아니니까.

### 힘들었던 점은?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것이 제일 힘들었다. 다행히 두바이는 다른 지역보다 개방돼 교회도 있고 성당도 있다. 원래 크리스천인데, 교회에 나가면서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던 점이 큰 도움이 됐다.

### 한국엔 취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많다. 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같이 일하는 10년차 여자 선배가 있다. 전문대만 졸업했지만 현재 매니저다. 한국에선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이곳에서 공부도 계속해 석사까지 마쳤다. 열심히만 한다면 차별 없이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다. 또 중동국가들은 석유와 천연자원이 풍부해 기본적으로 부유한 나라들이다. 한국에서 하는 일을 똑같이 해도 이곳에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석유가 고갈되기 전에 한국 청년들이 빨리 진출해 돈을 많이 벌어갔으면 좋겠다(웃음). 최근 원전 수주 등으로 우리나라와 외교 관계까지 좋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있겠는가. 싱가포르에선 이미 예전부터 중동에 많은 청년들이 진출했다. 현재 주요 요직에 있는 사람도 꽤 있다.

### 앞으로의 꿈은?

예전부터 열심히 일기를 쓰고 있다. 수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이런 경험을 책으로 쓰고 싶다. 여러 사람에게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남양주

● 안선경 나라경제 기자

# 글로벌 청년취업은 국가적 · 시대적 과제라는 인식 절실해

해외봉사에 참여한 이후 막연하게 해외취업을 생각하게 됐고 4학년 여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글로벌 청년취업 센터'에 해외봉사 및 해외인턴십을 신청했다. 공단으로부터 중동지역 전문인력 진출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인 'IT기반 지리정보시스템(GIS) 전문가 양성' 과정을 추천 받아 24주 동안 직무역량과 실무 어학능력을 키웠다. 연수를 마친 후 공단이 추천한 '현장인턴십 프로그램'을 신청해 국내 GIS 중견기업인 K사에서 6개월의 현장인턴십을 마쳤다. 현장인턴십과 병행하는 '주말 실무 어학능력 심화 코스'에도 참여했다. 맞춤형 연수에서 현장인턴십과 해외취업처 알선까지 글로벌 청년취업지원센터의 원스톱(One-Stop) 서비스 덕분에 UAE 취업에 성공했다. 내일이면 아부다비행 비행기에 오른다. 세계를 상대로 자신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글로벌 노마드(Global Nomad, 지구촌 유목민) 후배들이여, 우리 구호 한 번 외칠까? '다세, 닥세 화이팅'. 그래 닥치고 세계로야!"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은 현 정부의 중점 국정 과제다. 대학생들의 해외봉사 및 해외인턴십 참여 확대, 항공 승무원 등 맞춤형 해외취업, 해외취업박람회 개최 등 실질적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까진 단기 산업연수, 대학졸업생들의 스펙 쌓기 차원에 머물러 있다.

해외취업이 청년들에게 '도전하는 일자리', '가고 싶은 일자리'가 되고, 글로벌 지역 전문인력 양성 및 진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첫째, 글로벌 청년취업은 국가적 · 시대적 과제라는 인식 공유가 필수적이다. 둘째, 글로벌 지역 산업동향과 인력수급에 대한 전문역량을 정부 특히 고용노동부가 갖춰야 한다. 셋째, 워크 트레이

드(Work-Trade) 차원에서 국가고용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력 본격 유입도 20년째를 맞았다. 불법체류자의 양산이라는 그림자도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는 중소기업에 없�선 안 될 국가노동인력으로 자리 잡았다. 우리도 들어온 만큼 내보내야 한다. 그냥 내보내선 안 되고 '글로벌 노마드'로 키워 세계를 무대로 당당히 자신의 꿈과 비전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전문인력을 내보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와 대학과의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이다. 우리 선조가 모시 적삼에서 그물까지 솜씨 좋게 베를 짜듯 교육과 훈련, 자격을 씨줄과 날줄로 삼아 맞춤형 글로벌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해외봉사, 해외인턴 참여인력 풀 DB 구축뿐만 아니라 취업처에 맞는 맞춤형 직무연수와 취업알선, 현장인턴십 지원제도 등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대학이 함께하는 '해외취업보장형 학과 운영'도 고려해볼 만하다.

물론 앞의 해외취업 성공기는 지어낸 이야기다. 하지만 현실이었으면 좋겠다. 청년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와 나라가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나에게 묻는다. 그리고 나라에 묻는다. "너희는 청년들의 아픔, 꿈과 희망을 위해 한 번이라도 뜨거웠던 적 있었느냐고". 나라장제



노현중

한국교통대(전 충주대) 행정정보학과 교수  
nhj6508@naver.com

# 아름다운

# 소

# 通

통

햇살이 눈부시던 주말의 한낮. 해운대로 향하는 지하철 2호선 출발지점인 장산역의 지하철 안에는 이빨 빠진 듯 들성들 성 빈 좌석이 눈에 띄었다. 자유로운 복장의 승객들은 귀속 말을 속삭이거나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눈을 감거나 신문을 읽는 등 차분한 분위기였다.

두어 정거장쯤 지났을까. 들고 있던 시집을 떨어뜨렸을 만큼 갑작스러운 소음이 객실의 앞쪽에서 들려왔다. 중절모를 눌러쓴 노인이 맞은편 노약자 보호석에 앉아 있는 3명의 청년을 꾸짖는 소리였다. 성난 노인은 오른쪽 검지를 날카롭게 세운 채 몸을 반쯤 일으키며 눈을 부라리고, 청년들은 뜻 모르는 질책에 의아해하며 꺾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눈만 껌뻑이고 있었다.

영문을 알지 못하는 승객들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침을 삼키며 그 광경을 주시하고 있을 뿐. 몇 마디 더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노인은 혹시나 하는 기세가 역력한 채 이번엔 우리말이 아닌 영어로 물었다. "Do you not understand korean?" 말소사! 바로 그때, 싸늘한 공기를 뚫고 들려온 몇 마디 단어 역시 영어였으니. "I do not know korean. What is wrong with~." 긴장으로 움츠러들어 몹시 작아진 소리 이긴 했지만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 한국을 방문 중인 그 외국 청년들의 목소리에는 못내 억울한 듯 원망이 배어 있었다.

일순 별칭게 달아올라 손찌검이라도 할 듯 기세가 등등했던 노인의 얼굴은 빠르게 평온을 되찾았다. 또한 낯선 나라에서 봉변을 당할 수도 있었던 청년은 타이베이에서 왔다고 말하며, 오해가 풀렸음에 안도의 가슴을 쓸어내리는 모습이

멀리서도 보이는 듯했다.

노인은 이유도 모른 채 회를 내 미안한 속내를 손을 잡아 주는 것으로 대신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하철을 타면 이 좌석은 장애인이나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 약자를 위해 비워 두어야 한다고 설명했고, 젊은이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옆의 일행들에게 그 가르침을 전달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던지. 또한 어르신들의 유창한 영어회화 실력과 미안함을 표현하는 슬기로움에 존경의 눈길을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 대화란 혼자만의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의 이해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씨줄과 날줄로 엮어나가는 낱말들의 뜨개질과 같은 것이다. 또한 대화란 잘못 뒤엎긴 말의 실타래를 풀어줄 귀한 열쇠 같은 것이다.


얼마 전 서울의 지하철에서 중년의 취객이 보호석에 앉아 있는 정신지체 고등학생에게 폭력을 휘두른 일이 있었다고 한다. 주변에 있던 아주머니의 적극적인 만류로 더 이상 확대되지는 않았더니 얼마나 다정한 일인지. 그뿐 아니다.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친구들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모 중학생 자살사건이나 연이은 여고생 자살사건 등도 어쩌면 대화와 소통이 부족해 일어나게 된 끔찍한 결과가 아니었나 싶다.

통하면 살고, 막히면 죽는다는 말이 있다. 오해를 이해로, 부정을 긍정으로 바꿔주는 소통이라는 이름의 열쇠. 사람이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잠을 자듯 소통이란 일상생활에서 매우 익숙한 것이지만, 실행하기 쉽지 않은 일 중 하나인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소통에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 여유를 갖고 마음을 나누는 것.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진심이 깃든 말 한마디로부터 이해와 소통은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그날 만약 최후통첩 같은 영어가 흘러나오지 않았다면, 또는 타이베이에서 온 청년이 영어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날의 '아름다운 소통'은 오래오래 나의 기억에 머물러 앞으로의 삶에 환한 등불이 돼 줄 것 같은 행복한 예감이 든다. 박명재



**허봉조**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관리팀장  
hbj0013@korea.kr



## 경제 정책 해설

**68 '복지' 증대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동시에**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기획재정부

**70 자원공급 안정 수준까지  
에너지 자주개발을 끌어올린다**  
2020년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35% 이상 달성  
지식경제부

**72 지금부터는 철도도 경쟁이다**  
수서발 KTX 신규운영자 선정 추진  
국토해양부

# ‘복지’ 증대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동시에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 “협동조합은 매우 독특하고 가치 있는 기업모델로 빈곤을 낮추고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 UN ‘세계 협동조합의 해’ 선포식, 2011년 11월)

국제연합(UN)은 2012년을 UN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고 각국 정부가 협동조합

기업의 활성화에 동참해 줄 것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2009년 채택했다. ‘협동조합’이 2008년 세계적 경제위기에도 강한 면모를 보였고, 저성장 시대에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실제로 UN과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GM, 애플, 나이키 등과 같은 다국적 기업이 8억명의 근로자

를 고용할 때 협동조합은 10억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협동조합기본법」이 2011년 말 국회를 통과한 뒤 지난 1월 공포됐으며 오는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일까? 그간 우리나라에는 농협·수협·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8개의 개별 「협동조합기본법」이 있었



다. 지금까지는 농업, 어업 등 8개 분야에 한해서만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업종과 분야에 제한 없이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 조합원이 주인이자 경영자

아직까지 우리에게 낯선 사업방식인 협동조합은 과연 어떤 것일까? 스페인의 축구 명문 FC 바르셀로나, 세계적 농업회사 미국의 선키스트와 뉴질랜드의 제스프리, 미국의 뉴스통신사 AP통신,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4개 기업 모두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협동조합은 회사의 주인인 조합원이 모여 결성하고 다함께 경영하는 기업모델이다. 실제로 FC 바르셀로나는 축구를 사랑하는 전세계 17만3천여명의 출자자가 모여 구성된 기업으로 이들은 투표로 구단주 격인 회장을 직접 선출한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경영, 공동의 소유, 배당의 제한, 출자액에 상관없이 1인 1표의 의결권과 선거권(주식회사는 1주 1표)을 갖는 것, 수익금은 배분하기보다는 자본금으로 쌓여뒤 경제위기나 대량해고 사태를 사전에 대비하는 것 등을 기업 운영의 원칙으로 한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지난해 “협동조합은 매우 독특하고 가치 있는 기업모델”이라고 평가한 점도 바로 이 같은 독특한 특징 때문이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면 (일반)협동조합에 대한 법인격은 ‘법인’으로 하고 협동조합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설립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한편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즉 ‘비영리법인’은 기획재정부 장관 인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3년마다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

〈표〉 숫자로 풀어보는 알기 쉬운 「협동조합기본법」

1	‘1인 1표’의 의결권(상법은 ‘1주 1표’)	5	5인 이상 설립 가능(최소 설립인원)
2	2개의 법인격(법인·비영리법인)	6	제6조(목적) 조합원 봉사, 민주적 운영 등
3	3년 주기 실태조사(정부의 책무)	7	7월 첫 토요일은 ‘협동조합의 날’(홍보)
4	자본주의 4.0(대안적 기업모델 도입)	8	8개 협동조합법의 일반법(기본법 성격)

하며 그 조사내용을 토대로 협동조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실태조사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등 다양하고 포괄적인 법적 책무를 부여받고 있다.

### 출자금 규모 상관없이 5명 이상이면 설립 가능

「협동조합기본법」 2조(정의)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하는 … 사업조직”이다. 쉽게 풀이하면 협동조합이 설립될 수 있는 영역이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경제 분야라는 것이다. 우선 기존의 1차 산업(농·수협)과 금융(새마을금고·신협) 등에 제한돼 있었던 협동조합이 이제는 금융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출자금 규모에 상관없이 5명만 모이면 설립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단순히 협동조합의 설립조건이 낮아지고 분야가 늘어난 것만은 아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사회적 협동조합’을 별도로 구분·정의해 기존 사회적기업과 비영리단체들이 수행하던 공익사업, 사회적 목적사업을 사회적 협동조합이 수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줬다. 조합원의 편익과 더불어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와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활동 등을 동시에 수행하는 사회적 협동조합(비영리법인)이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법 시행 초기에는 ‘자활공동체’, ‘돌봄노동’, ‘대안기업’ 등의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협동조합 설립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이나, 향후에는 ‘청년창업’, ‘공동육아’, ‘대안학교’, ‘농

촌봉사’, ‘교육기부’ 등 창의적 형태의 협동조합이 우리 생활 곳곳에서 새로운 활력을 줄 전망이다.

기존의 민·상법과 다른 새로운 법인격을 부여하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면 우리 경제와 사회에 크고 작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 이미 관계부처 합동TF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법 시행에 따른 정책 과제를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연구기관TF를 출범·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이 다양한 형태의 소액·소규모 창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경제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해 ‘일하는 복지’ 제도를 보완·증대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협동조합은 시장 중심 경제와 정부 주도 경제체제의 양 극단이 갖는 한계를 보완해 준다.”

“우리는 두레, 품앗이 등 협동과 협력의 DNA가 발달해 있어 세계 어느 나라보다 협동조합이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을 갖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협동조합 간담회, 2012년 2월 8일, 강원도 원주) ■

# 자원공급 안정 수준까지 에너지 자주개발률 끌어올린다

## 2020년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35% 이상 달성

◎ 우리는 에너지의 96%를 수입하는 세계 4위의 에너지 수입국이다. 요즘같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는 에너지 자원 정세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지금 우리나라는 산업의 에너지 자원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휴대폰, LCD TV 등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해 희토류·리튬 등 전략광물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 상황을 맞고 있다.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2007년 4.2%에서 2011년 13.7%**

하지만 자원개발의 특수성으로 인해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가 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자원은 전략적 상품으로 이를 보유한 국가들이 무기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 그 추세가 더 심화되고 있다. 중동·남미·아프리카 등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에서는 정상의 의지가 사업 추진의 결정적 요인이다. 또한 자원개발은 고위험·대규모 사업으로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며 사업성 공률이 낮고(10~15%) 장기간의 투자회수 기간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나라가 자원개발의 중요성을 인

지난 3월 5일 UAE 아부다비에서 UAE 유전 최종 본계약이 체결됐다. 사진은 현장 굴착 전경



식하고 있으며 우리의 경쟁국들도 자원 확보를 위해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활용한 공격적 투자를 통해 전 세계 각지에서 자국의 자원개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도 2004년 이후 20%대로 정체돼 있는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외국에서 들여온 자원 중 국내 기술과 자본으로 확보한 양의 비율)을 2030년 40% 이상으로 목표를 재설정하는 등 자원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두 차례 석유파동 이후 1981년 마두라(인도네시아 자바 동북부에 있는

섬) 유전 획득을 시작으로 자원개발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짧은 역사와 일천한 경험, 열악한 환경에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그리고 현 정부 들어 보다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결과 35년 해외자원 개발 역사에서 질적·양적 측면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했다.

우선 에너지 자원 자주개발률을 대폭 제고했다.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은 2007년 4.2%에서 2011년 13.7%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6대 전략광물(유연탄·우라늄·철광·동·아

연·니켈)도 2007년 18.5%에서 2011년 29.0%로 상승했다. 또한 리튬·희토류 등 희유금속도 2007년 6.1%에서 2011년 12%로 약 2배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상외교를 통해 UAE와 이라크 등 중동 지역에 최초 진출하는 성과도 올렸다. UAE는 전 세계에서 미국·영국·프랑스·일본만이 진출해 있는 나라로 30여년 만에 그 외국자인 우리나라에 석유개발 문호를 개방했다. 우리는 3개 미개발 광구에 참여해 유전을 개발하고 이와 별도로 10억배럴에 해당하는 생산유전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확보했다. 이라크는 세계 3위 석유매장국으로 한국가스공사가 이라크 중앙정부 입찰에 참여해 4개 생산·개발 광구를 확보했다.

미개발지였던 아프리카에서도 큰 성과를 거뒀다. 동아프리카의 모잠비크에서 한국가스공사가 초대형 가스전 발견에 성공했다. 현재까지 발견된 양만 30Tcf(Trillion cubic feet)로 가스공사 지분에 해당하는 가스량이 우리나라 2년 치 가스소비량과 맞먹는다. 그 외에도 미국·캐나다 등에서 유망 비전통 자산을 인수해 비전통 유가스 분야에서도 입지를 확보했으며, 캐나다 우미악 광구 지분을 인수해 자원개발 영토를 극지방까지 확대했다.

### 북극 등 미개발 지역 선점 노력 강화

그동안 정부는 과감한 투자로 자주개발률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등 성과를 거뒀지만 최근의 수급불안, 가격상승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정부는 자원공급 혼란에 대비할 수 있는 최소 자주개발률 수준에 안착하도록(석유·가스 기준 2020년 35% 달성 목표) 올 한 해 다방면으로 자원개발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20%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1일 64만배럴 수준의 자주개발물량, 2011년 말 대비 17만 배럴이 추가로 필요하다. 부족한 물량은 공기업, 민간기업의 생산광구 투자 확대와 기존 개발·생산광구 증산을 통해 충분히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2012년 투자규모는 2011년 88억달러 대비 34% 증가한 118억달러). 이와 함께 6대 전략광물은 2020년까지 자주개발률 32%로, 희유금속은 13%로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국내 자원에 대한 탐사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제2의 동해 가스전 발견을 추진할 계획으로 4월부터 한국석유공사-민간기업이 함께 동해 가스전 인근 추가탐사를 추진한다. 그 외에 충주·홍천 등 희토류 유망 지역 탐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지난해 발판을 마련한 대형 자원개발 프로젝트의 가시적 성과를 도모할 것이다. 이미 UAE와는 3개 미개발 광구 본계약을 지난 3월 체결했으며 10억배럴 이상 생산유전 참여도 협상에 속도를 더할 것이다. 이라크도 생산광구 증산과 함께 오는 5월 예정된 4차 입찰에서 우리 기업이 신규 유전·가스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넷째, 미개발 유망 지역 선점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다. 올 상반기 중 북극권 유전 개발진출 종합전략을 수립해 덴마크 등 인접국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2011년 7월)을 계기로 아프리카 협력 사업도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비전통 자원 확보를 위해 중국(세일가스), 베네수엘라(초중질유), 인도네시아·남아프리카공화국(CBM) 지역 신규 진출을 추진할 것이다.

다섯째, 자원개발 공기업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석유공사 대형화 전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세계 50위권의 자원개발(E&P)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POST 3020 전략'(2013~2017년)을 수립한다. 한국가스공사도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한국광물자원공사도 세계 20위권의 자원개발 전문기업으로 도약하도록 인력·자본 확대를 추진하며 광물개발강국 도약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여섯째, 자원개발의 또 다른 축인 자원개발서비스 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서비스산업 육성 근거를 마련하고, 시추선서비스 전문회사 설립, 외국기업과의 합작법인 설립, 국제 공동연구개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일곱째, 자원개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펀드투자 위험보증 여력의 대폭 확대를 추진하고 인력양성 시스템 개편, R&D 특화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자원개발 분야 인력과 기술력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홍보·공시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사실 중심'의 홍보를 지원하고 광물개발 평가·공시 기준을 도입할 예정이다.

에너지와 자원을 해외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에너지 수급의 급격한 변화와 가격상승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가장 경제적인 해법은 바로 해외자원 개발이다. 자동차·반도체·조선 산업이 척박한 토양에서도 정부와 기업의 유기적 협력과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세계최고 수준에 도달했듯이 자원개발도 장기적 시각에서 연속성을 갖고 민관이 합심해 추진한다면 충분히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

● 전민영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전략과장  
junmy@mke.go.kr



# 지금부터는 철도도 경쟁이다

## 수서발 KTX 신규운영자 선정 추진

◎ 2005년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철도는 국가기관인 철도청이 철도시설을 소유하고 운영 업무를 담당(국유국영)했다. 하지만 관청조직의 한계상 비효율적 인력관리, 경직적 경영전략 등으로 자동차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매년 수천억원의 국고지원금(2003년 1조647억원)이 투입되는 등 국민 부담도 커져 갔다. 이로 인해 철도에 대한 투자매력도 떨어져 철도망 확충이 지연되는 등 한국철도 전체가 침체의 길로 접어들게 됐다. 철도 수송수요 부담률 역시 1980년 24.9%에서 2001년 19.1%로 떨어졌다.

### 코레일 독점 속 역주행·탈선·지연 빈발

이에 정부는 국유국영철도라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5년에 철도의 시설과 운영 부문을 수직적으로 분리(상하분리)하는 구조개혁을 단행했다.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기반시설 부문은 국가가 책임지는 대신, 시설 부담을 덜어낸 운영 부문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다수의 운영사업자가 담당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철도청의 시설·운영조직을 철도

〈그림〉 2015년 고속철도 운영노선도



지난 3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KTX 경쟁 도입과 관련한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자료집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행사는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 신규 운전자 선정을 위한 사업제안요청서 초안에 대해 설명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설관리공단과 철도공사로 분리하고, 철도 운송사업 부문은 신규 철도운송사업 면허 발급 등을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은 당시 제정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사업법」과 구조개혁 기본계획에 담겨 있다.

2005년 철도구조 개혁 이후 철도시설투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따라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자동차와 비교해 에너지 효율성이 높고, 탄소배출이 적은 철도의 역할증대를 위해 2020년까지 총 88조원을 투자할 것이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년)에 따르면 2010년 현재 3,557km에 이르는 국가철도망을 2020년 4,934km까지 확대해 KTX로 전국 주요거점을 90분 안에 연결하는 철도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반해 철도운송 부문은 철도공사가 장기간 독점하고 있어 시장변화와 소비자요구에 둔감하고 영업부채(1993년 1조5천억원, 2005년 1조5천억원 부채탕감을 했음에도 현재 3조5천억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독점폐해가 계속되고 있다. 역주행·탈선·지연 등 서비스와 안전이 나빠져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코레일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독점적 지위에 안주한 코레일은 구조개

혁(공사화) 이후에도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을 소홀히 해 영업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인건비가 계속 증가하는 등 많은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고속철도를 건설할 때 발행한 철도시설공단 채권도 코레일이 납부하는 선로사용료로 상환해야 하는데 현재 코레일이 납부하는 사용료 수준이 낮아 철도건설부채는 매년 수천억원씩 그 규모가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철도건설부채는 2004년 5조6천억원, 2010년 11조7천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엔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신규 노선인 수서발 KTX부터 경쟁체제로 개편

이러한 비효율적 독점운영체제에서는 철도망을 건설할수록 철도부실은 더 커지고, 이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철도독점의 폐해를 막고 새로운 철도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철도운송사업에 경쟁을 도입할 필요가 있었다. 항공, 통신 등 다른 사례를 보더라도 경쟁을 통한 이용자 편의 증대, 산업경쟁력 강화 등의 긍정적 효과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철도독점을 유지해 온 프랑스까지도

최근 자국의 철도여객시장을 완전 개방하기로 결정하는 등 세계 철도시장도 이제는 개방과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도 더 이상 철도 경쟁도입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하고 여러 차례 내부 토론, 연구용역,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수서발 KTX 신규 노선에 경쟁을 도입하기로 추진방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2015년 개통예정인 수서발 KTX에 신규 철도운영자를 선정함으로써 철도 경쟁구도를 형성할 계획이다. 준비기간(30개월) 등을 감안해 올해 상반기까지는 신규 운영자를 선정해야 한다. 현재 건설되고 있는 수서-평택 간 수도권고속철도가 완공되면 수서에서 출발하는 호남선, 경부선 KTX 노선이 생긴다.

사업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입찰 경쟁을 통해 선정하며 선정 시엔 현재 코레일 요금 대비 10% 요금인하를 의무화하고, 선로사용료도 현재 코레일이 납부하고 있는 매출액의 31%보다 9% 많은 40% 이상을 납부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근 반(反)재벌정서와 맞물려 제기되고 있는 대기업 특혜 문제는 참여기업의 지분구조를 공공 위주로 개선해 해결할 계획이다. 코레일 등 공기업 참여가 허용

되며 중소기업이 참여할 경우 평가가점을 부여하는 한편, 일반국민 지분도 30% 이상 확보토록 했다. 총운영기간은 15년으로 한정하고 운영기간 중에도 5년마다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 소비자 만족도가 미흡한 경우 운행횟수 감축, 선로사용료 할증 등 패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

경쟁이 도입되면 철도운영자 간 고객 유치 경쟁으로 요금, 서비스 등 모든 부분에서 개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코레일도 예외일 수 없다. 이는 결과적으로 철도수요 증가로 이어져 철도산업 파이 전체를 키우게 될 것이다. 경쟁과 개방은 세계적 추세다. 1970년대 이후 필사즉생(必死則生)의 심정으로 택한 개방·

경쟁 전략이 오늘날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 이제는 철도산업 차례다. 지금부터는 철도도 경쟁이다. [1]

● **고용석** 국토해양부 철도운영과장  
kys0516@korea.kr



## KTX의 친환경성, 먼 거리일수록 빛을 발한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동하려고 한다. 당신이라면 어떤 교통수단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나라 국민의 64.3%는 KTX를 선택했다.

리서치 전문기관인 ㈜메트릭스가 지난해 10월 24일부터 11월 30일 사이 실시한 교통수단별·구간별 이용현황 조사결과, 서울을 기점으로 한 대전 이북의 구간에서는 승용차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대구 이남의 구간에서는 KTX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km 안팎의 단거리일 때는 승용차를, 중장거리일 때는 KTX를 선택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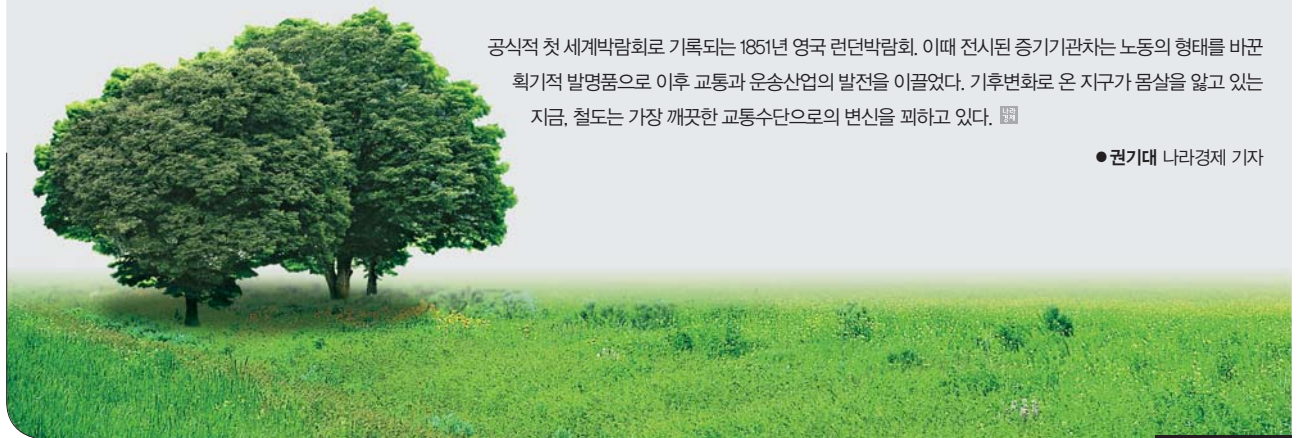
특히나 최장 구간인 서울~부산은 KTX가 64.3%의 점유율을 보였다. 뒤를 이어 비행기 15.6%, 승용차 11.2%, 고속버스 5.5% 그리고 KTX에 비해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려진 새마을호·무궁화호가 3.4%를 기록했다. KTX 서울~밀양 구간의 경우엔 82.7%라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서울~천안은 승용차의 점유율이 75.8%, KTX는 7.3%에 그쳤다. 주목할 점은 새마을호·무궁화호의 점유율이다. 이 둘은 이동거리가 멀수록 KTX와 반대로 오히려 점유율이 낮아졌다. 비교적 낮은 운임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이용도가 저조한 것은 이용객들이 시간의 기회비용에 보다 무게를 두기 시작했음을 말해준다. 철도와 도로 간 연계운행체계가 정착되고 소득수준이 향상될수록 장거리 이용객의 KTX 선호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결과가 수단별 공급특성과 도로사정, 연료비 등을 감안하더라도 KTX가 중장거리 이동수단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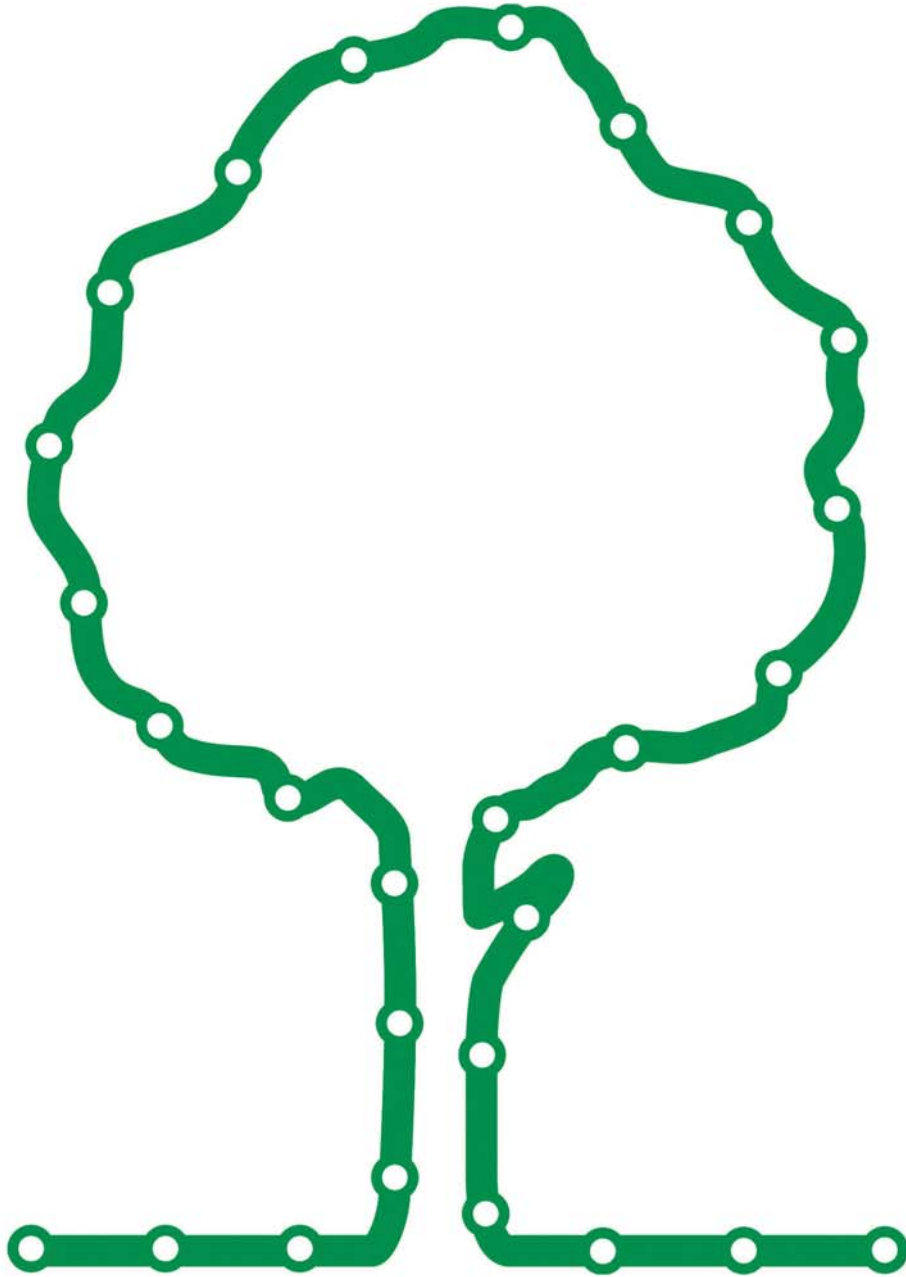
여기에 철도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다.

코레일철도연구원에 따르면 기차로 1km를 이동하면 평균 26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만 자동차는 6배 이상을 배출한다고 한다. 서울~부산을 이동할 때 자동차 대신 철도를 이동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나무 11그루를 심었을 때와 똑같은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얻는다는 것이다. 나무를 심지 못할 바에야 철도를 선택하시라! 그야말로 일거양득. 게다가 이산화탄소의 경우 철도가 자동차의 9분의 1 수준이라 중장거리 이동 시 KTX를 선호하는 국민들의 선택은 탁월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전기로 운행되는 KTX는 대기오염 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아 사실상 자전거를 제외하고 가장 깨끗한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철도의 친환경적 면모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철도를 이용하면 교통체증, 유류비 상승으로부터 자유롭고 도심까지 이동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

공식적 첫 세계박람회로 기록되는 1851년 영국 런던박람회. 이때 전시된 증기기관차는 노동의 형태를 바꾼 획기적 발명품으로 이후 교통과 운송산업의 발전을 이끌었다. 기후변화로 온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 철도는 가장 깨끗한 교통수단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1]

● **권기대** 나라경제 기자





## 나무 심는 지하철?

우리나라 CO<sub>2</sub> 배출량 세계 7위.  
운송수단 배기가스 중 자가용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 75%,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만으로도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일어납니다  
이제 어딘가로 이동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보세요  
CO<sub>2</sub>도 줄이고 숲도 살리고!  
당신의 작은 실천에 대한민국은 더 푸르러집니다

**kobaco**

한국방송광고공사 | 공익광고협의회

# 다윗이 골리앗에 대응하는 전략

글로벌 경쟁시대에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대기업의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 발전과도 직결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국가 경쟁력 발전을 위해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한 대·중소기업 경쟁력의 동반 성장은 필수불가결하다. 이에 정부는 각종 정책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의 발판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기업 스스로도 공생발전을 위한 노력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설문이나 방송 매체에 따르면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들이 경제 침체보다 대기업과의 경쟁이나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등으로 힘들다고 답하고 있다.

## ‘숨어 있다가 내 싸움터로 끌어들여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경쟁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유될 수 있다. 이렇듯 다윗에 불과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고 나름의 경쟁력을 갖춰 공생발전을 위한 정책의 효과를 누리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탄생하기 위해선 어떠한 전략을 택해야 할까?

첫 번째 전략은 ‘숨어 있다가 내 싸움터로 끌어들여라!’이다. 이 전략은 정체를 최대한 숨기고 준비가 될 때까지 숨어 있다가 자신 있는 분야에서 승부를 내는 것이 핵심이다. 중소기업은 자금과 규모에서 대기업과 정면 승

부를 통해 경쟁에서 우위를 취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다윗과 골리앗이 나란히 서서 서로 주먹을 한 대씩 교환하는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골리앗의 체중과 힘은 기본적으로 다윗의 수십 배에 달하기 때문에 골리앗의 펀치 두 방이면 다윗은 희생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된다. 정면 대응은 다윗의 입장에 처한 중소기업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전략일 뿐이다. 다윗은 자신의 빠른 속도와 작은 몸집을 이용해 골리앗의 시야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소기업 역시 마찬가지. 중소기업은 처음에는 대기업의 눈에 띄면 안 된다. 눈에 띄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이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는 상품이나 기술 등을 개발하는 데 온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동시에 이러한 상품이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틈새시장 발굴을 소홀히해서는 안 된다. 대기업의 시야에서 벗어나 안정되게 경쟁력 있는 상품과 기술을 개발하고, 이미 발굴해 놓은 시장에서 시장 선도자의 역할을 가지고 판매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후발 주자인 대기업과 경쟁하면 이미 반은 승리해 놓고 경쟁을 시작하는 것이다. 아무리 대규모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이라도 소비자에게 시장 선도자로 각인되고 훌륭한 제품 경쟁력이나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제치고 우위를 점할 수는 없다.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대결에 임한 다윗, 즉 중소기업의 승리로 귀결될 것이다.

다음의 두 가지 사례를 보자. 우선 첫 번째 사례는 신생 항공사의 사례다. 프론티어(FRONTIER)항공과 피플익스프레스(PEOPLEExpress)항공이라는 두 신생 항공업체는 기존의 대형 항공사인 콘티넨탈(Continental)항공이나 유나이티드(United)항공과 경쟁해야 했다. 이 중 프론티어항공은 철저하게 대형 항공사의 시각에서 벗어나 은폐하는 전략을 통해 생존할 수 있었다. 그러나 피플익스프레스는 대형 항공사와 정면 승부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이후 피플익스프레스는 대형 항공사의 집중공격 대상이 됐다. 대형 항공사들은 운임 조정, 다양한 무료 서비스 실시(기내 식사, 잡지), 원가 절감 노력 등을 통해 신생 항공사인 피플익스프레스를 공격했고 결국 규모나 자금 그리고 네트워크 면에서 대형 항공사에 밀릴 수밖에 없던 피플익스프레스는 도산하고 말았다. 이 사례는 다윗에 불과한 중소기업이 단순히 자신의 무기 하

나만을 믿고 정면 승부를 걸어봤자 결국 힘에 밀려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두 번째 사례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것으로 자신만의 힘을 갖추고 자신의 싸움터에서 싸우는 경우다. 기존의 회계 프로그램은 기능이 많을수록 우수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이 시장에 등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트위트(INTUIT)의 CEO인 스캇 쿡은 4년간 P&G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소비자 테스트 결과를 소프트웨어 산업에 처음 도입했다. 소비자 테스트 결과 회계 프로그램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다양한 기능을 가진 우수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단순하고 쉬운 기능과 저렴한 가격을 갖춘 프로그램이었다. 인트위트는 이러한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해 기존 회계 프로그램 대비 가격 및 작업 소요시간이 50% 정도 감소되고 전문 서식이 아닌 일반인을 위한 단순한 서식을 지닌 회계 프로그램을 시장에 출시했다. 그 결과 기존의 대기업들이 점유하고 있던 회계 프로그램 시장의 점유율을 70%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 대기업과의 싸움에서 승자가 됐다.

### ‘대기업의 힘을 역이용하라!’

두 번째 전략은 ‘대기업의 힘을 역이용하라!’이다. 이 전략은 첫 번째 전략인 ‘숨어 있다가 내 싸움터로 끌어들이라!’로 대기업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을 때 취할 수 있는 전략이다. 즉, 어쩔 수 없이 골리앗인 대기업과 정면 대응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이다. 대기업은 골리앗과 마찬가지로 몸집이 크고 힘이 세다. 이를 역으로 생각해보면 유연성과 속도가 떨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델(DELL) 컴퓨터가 시장에 등장했을 당시 기존 PC 시장의 지배자들은 컴팩(COMPAQ), 휴렛패커드(HP), IBM 등이었다. 델은 우선 기존 업체들이 수익을 얻는 원천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기존 PC 시장의 지배자들의 강점은 전 세계로 제품을 보급하는 유통 네트워크였다. 이러한 유통 네트워크를 통해 상품이 미치는 범위를 넓히고, 소비자 로열티를 높여왔다. 그러나 이는 다음의 치명적인 단점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가 바로 과다 재고 보유다. 광범위한 유통 네트워크는 필연적으로 다량의 재고 보유를 초래했다. 이로 인해 기존 PC 시장의



델은 재고 보유분량을 줄여 원자재 비용을 6% 가까이 낮췄다. 이러한 재고 및 원자재 비용절감을 통해 델은 경쟁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폴란드 델 컴퓨터 공장의 생산라인

지배자들은 평균 55일 분량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점을 간파한 델은 평균 8일 분량의 재고를 보유해 47일의 재고 보유 기간의 차이로 원자재 비용을 6% 가까이 낮출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재고 및 원자재 비용절감을 통해 델은 경쟁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됐다. 두 번째 단점은 고객의 로열티를 판매망이 점하고 있다는 것. 기존의 PC 제조사는 소비자의 니즈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었다. 그러나 델은 소비자의 PC에 대한 기호와 용도가 다양하다는 점을 간파했다. 고객이 델에 직접 PC를 주문해 기호 변화를 바로 반영한 만족도 높은 제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취해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그 결과 델의 매출은 급격히 상승했으며 1999년 미국 내 1위의 컴퓨터 제조 및 판매업체가 됐다.

지금까지 살펴본 두 가지 전략은 다윗인 중소기업이 골리앗인 대기업의 특성과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해 경쟁에 이용함으로써 불공정한 상황에서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대응 방법이다. 기업 간 경쟁은 전쟁과도 같다. 현대사의 거의 모든 승리원칙을 포괄하는 손자병법은 궤도(詭道, 적을 속이는 것), 출기(出奇, 기묘한 책략), 격허(擊虛, 허술한 곳을 치는 것), 임세(任勢, 대세에 순응), 주동(主動, 주도권), 집중(集中, 총력전)의 6원칙을 제시한다. 위의 두 전략도 어찌 보면 이러한 손자병법 전략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확실한 전략을 가지고 경영에 나서야만 이기는 경영이 가능하며 이는 중소기업이 가져야 할 필수 무기다. **심명재**



**김수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kimsu02@snu.ac.kr  
미시간주립대 경영대학원 박사, 생산전략, 공급사슬관리(SCM), 서비스운영관리를 전공했으며, 서울대 경영대학 부학장 및 서울대 경영정보연구소를 맡고 있다.



# 기업의 경쟁법 준수,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기업 간 자유로운 경쟁은 시장경제를 유지하는 필수 요소로서, 이를 저해하는 카르텔이나 독점력 남용 등 시장에서의 경쟁을 해치는 행위를 방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경쟁법(Competition Law, 우리나라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목적이다.

지난 20년간 전 세계적으로 리니언시 프로그램(leniency programmes,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활발한 활용, 카르텔 위반 행위에 대한 무거운 과징금 부과, 개인에 대한 형사벌 강화 등 경쟁제한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법 위반행위는 여전히 늘고 있다. 국제 카르텔의 경우 1990~1995년 연간 평균 6.3건이 적발된 데 반해 2004~2007년엔 평균 32.9건이 적발됐다[2011년 4월 DAF/COMP(OECD사무국 이슈페이퍼) 4쪽 각주 재인용]. 이러한 적발률 증가를 설명할 수 있는 요소로는 리니언시 프로그램의 활용도 증가, 개별 경쟁당국의 카르텔 적발의지 강화 및 경쟁당국 간 정보교환 증가, 국내 카르텔보다 국제 카르텔에 대한 경쟁당국의 법집행 관심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그 외 카르텔 형성을 자체 증가도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경쟁당국에 의한 사후적인 법집행 강화에 초점을 맞추기에 앞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경쟁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카르텔 형성 자체를 예방하는 방안을 경쟁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고려하면 어떨까.

2011년 6월 개최된 OECD 경쟁위원회 회의에서는 기업들의 경쟁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라운드테이블 논의가 이뤄졌다. 세계 각국의 경쟁당국은 기업들이 경쟁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음에서는 과징금, 징역형 등 전통적인 방법들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리니언시 제도, 사적 소송, 평판 저하, 자격박탈, 기업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등 최근 부각되는 몇 가지 새로운 방안들을 알아보기로 한다.

### 리니언시·사적 소송 등 통해 기업담합을 사전에 방지

먼저, 기업의 자율준수 또는 기업에 대한 경쟁법 위반 행위 억지(deterrence)라는 측면에서 과징금 부과와 형사벌이 각기 어느 정도 기능을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EU는 형사벌보다는 과징금 부과에 중점을 뒀고 미국은 벌금보다 개인에 대한 형사벌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법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징금(fines) 부과 크기에 대한 전통적 연구에 의하

면, 카르텔 행위로 인한 기대 피해액이 기대 이익보다 크도록 과징금액을 산출하게 돼 있다. 과징금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적발률이 낮더라도 충분한 억제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EU,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의 총과징금부과액 및 건당 과징금부과액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다. EU가 부과한 총과징금액은 1990~1994년 3억4,400만유로에서 2005~2009년 96억유로로 증가했고, 미 법무성이 부과한 과징금도 같은 기간 1억4,200만 달러에서 33억5천만달러로 증가했다[같은 책 5~6쪽 각주 14, 17 재인용].

과징금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 아직도 범위반으로 인한 불법소득에 비해 과징금 수준이 낮은 상태라는 견해가 있는 반면, 높은 과징금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며 기업들이 이를 소비자에게 높은 가격으로 전가할 우려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징역형(imprisonment)은 과징금과 달리 개인과 기업의 인센티브를 연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17개 OECD 회원국이 이를 운용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은 징역형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가다. 법무성 반독점 부차관보인 스콧 헤먼드는 “미국의 징역형 부과 가능성에 대한 공포로 국제 카르텔이 미국까지는 확대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같이 징역형이 카르텔을 억제하는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진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징역형이 카르텔을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 수단인지 의문을 갖는 견해도 있다. 미국에서 징역형 부과 건수 및 정도가 증가하고 있다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징역형의 효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카르텔의 발생 건수 및 그 위법성이 커짐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리니언시 제도는 공모자들이 언제든 카르텔을 신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카르텔을 불안정화시키는 제도다. 전 세계적인 리니언시 제도 도입 추세는 카르텔 집행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발전이라고까지 불리고 있다. 리니언시 신청자 수 측면에서 볼 때 리니언시 제도는 세계적으로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일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카르텔 행위 억제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적 손해배상 소송(private actions)은 경쟁당국의 과

징금 부과에 의한 억제효과를 더욱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실제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할 뿐 아니라 적발확률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사적 소송이 가장 성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1990~2008년까지 40대 사적 소송의 총보상금이 180억달러였는데 같은 시기에 미 법무성에 의한 총형사벌금 부과액은 42억달러였던 점에서 사적 소송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을 알 수 있다[같은 책 15쪽 각주 66 재인용]. 그러나 사적 소송의 억제효과는 지나치게 높은 과징금 부과가 갖는 한계(기업들이 소비자에게 이를 전가)와 동일한 한계를 지닌다.

미국 등 경쟁당국은 때때로 범위반 행위자의 형벌을 감경해 주는 대신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유죄합의(plea bargaining/settlement)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제도는 리니언시 제도와 마찬가지로 범위반 행위에 대한 유죄선고율을 높인다는 점에서 효율적이긴 하지만 징벌의 심각성을 경감시킨다는 상반관계(trade-off)에 직면할 수 있다. 합의내용이 지나치게 관대할 경우 범죄 억제능력이 약화되는 한편 리니언시 제도의 효과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미국 반독점사건의 약 90%는 이러한 합의로 종결됐는데 지난 18년간 미국에서 가격담합에 대한 기소 자체가 거의 없었음을 근거로 법원에의 기소 위협 자체가 공허한 외침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견해도 있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경쟁법 위반으로 고발될 경우 상당한 평판 저하에 직면한다. 이러한 ‘고발의 평판효과(reputational effect of prosecution)는 과징금 및 징역형 수준을 완화해도 된다는 견해의 논거가 되기도 한다. 평판효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견해는 사업자의 법준수 결정에서 중요한 것은 경쟁당국의 적발 및 제재 가능성과 그로 인한 평판효과이지, 제재의 심각성 및 과징금·징역형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자격박탈(debarment/disqualification)은 평판효과를 제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범위반 개인의 회사 내 지위를 일정 기간 박탈하는 것이다. 과징금 부과와 달리 행위자 개인 평판에 침해를 가함으로써 위반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회사 또한 변화에 직면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일부 학자는 과징금 및 징역형 수준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범위반 과소억지(under-deterrence)가 해결

되지 않는 것은 이것이 제대로 된 제재수단이 아니기 때문이고, 과징금 부과로 사업자보다 소비자와 주주가 더 고통을 받는다는 점에서 경영진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는 자격박탈 방법이 더 우월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징역형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경영진이 직원의 카르텔 가담을 예방·방지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제재 측면도 있으며, 자격박탈로 인한 억지효과 증대를 감안할 경우 최적 과징금 및 징역형 수준 또한 낮아져 사회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2010년 영국 공정거래청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자격박탈은 형사제재에 이어 두 번째로 범위반 억지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경쟁법 위반 시 정부의 연금기금 투자혜택 중단하기도

사내 경쟁법 자율준수 프로그램(corporate competition compliance programmes, 이하 CP)을 운용하고 있는 사업자가 범위반 행위를 할 때 보통 사업자보다 더 높은(또는 더 낮은) 수준의 제재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선 아직 통일된 의견이 없다. CP 운용 여부와 과징금 수준이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는 프로그램의 운용사실만 갖고 특혜를 줄 필요가 없다고 한다. 현재 과징금 수준이 범위반 발생을 억지하기 위한 최적 수준으로 설정돼 있다면 CP 운용에 대해 과징금의 추가 감경혜택을 줄 경우 범위반 억지효과가 상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반면, CP 운용실적이 좋은 기업에 대해선 과징금 감면 또는 면제까지 해줘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즉, 사업자가 반독점법 준수를 위해 합리적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가격담합에 참여한 경우 기업 또는 경영진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CP를 운용한 것에 대해 과징금 감경 혜택을 줄 경우 저비용의 CP를 피상적으로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캐나다 경쟁당국은 CP 운용기업에 과징금 감경 혜택을 주기 전에 CP가 잘 설계되고 이행됐음을 사업자가 먼저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의 자율준수를 이끌기 위한 독특한 아이디어로 경쟁법 위반 행위에 정부의 연금기금 투자 혜택을 연계하려는 시도가 있다. 노르웨이에는 정부의 연금기금 윤리위

원회가 있어서 담배제조기업, 아동노동력 이용기업 등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기업에는 기금 투자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노르웨이 경쟁당국은 이러한 윤리 카테고리 안에 경쟁법 위반사항을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스웨덴 연금기금은 2001년 스칸디나비아안 에어라인이 다른 항공사와 카르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이 기업을 투자대상에서 제외했다. 투자제외대상 기업의 블랙리스트는 통상 5년간 지속되는데 스칸디나비아안 에어라인은 5년이 지난 2006년 종업원에 대한 교육 등 세 부적 경쟁법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한 후에야 다시 연금 투자대상 기업에 포함될 수 있었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경험을 얘기해 보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1년부터 CP를 도입하면서 이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그러나 이 제도를 도입한 기업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생기고, 인센티브만을 바라고 형식적으로 CP를 운영하는 부작용 때문에 2006년도부터는 기업의 CP를 평가해 등급을 매기는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이 제도도 일부 기업들이 평가받기를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개선할 여지가 있다. 무엇보다도 CP를 성실하게 운영하는 기업과 형식적으로만 운영하는 기업을 제대로 차별해내는 작업이 어렵지만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기업들이 경쟁법을 잘 지키게 할 것인가에 대한 OECD 국가들의 고민과 아이디어를 살펴봤다. 결국 과징금, 형벌 등의 채찍과 리니언시, 자율준수 등의 당근을 잘 엮어서 기업들의 경쟁법 준수라는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일 것이다. 나의경제

\* 이 글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주OECD대표부 및 외교통상부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수**  
주OECD대표부 참사관  
ysyeel@daum.net



WTO

# ‘WTO 무역정책검토’는 회원국 경제정보의 보고(寶庫)

WTO는 ‘무역정책검토’를 통해 WTO 규범의 직접적 규율 대상인 상품·서비스 무역과 지식재산권 보호는 물론 거시경제와 투자 등 무역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각 회원국의 정책, 제도 및 법령, 관련 관행과 구체적 조치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폭넓은 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지 16년이 지나면서 이제 일반인들에게도 다자무역규범을 관장하는 WTO의 존재와 기능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WTO의 주요 기능은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이 중 현재 진행 중인 ‘도하 개발 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 등을 통해 기존 WTO 규범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무역규범을 만드는 입법 기능,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WTO 회원국 간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사법 기능은 언론 기사 등을 통해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다. 반면, 기존 WTO 규범을 집행하는 행정 기능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언론이나 일반인들의 관심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WTO의 각종 기구, 이사회, 위원회 등을 통해 수행되는 다양한 행정 기능 중 하나로 ‘무역정책검토제도’(Trade Policy Review Mechanism)를 들 수 있다. 말 그대로 각 WTO 회원국의 무역정책을 검토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를 통해 WTO 규범의 직접적 규율 대상인 상품·서비스 무역과 지식재산권 보호는 물론 거시경제와

투자 등 무역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각 회원국의 정책, 제도 및 법령과 함께 관련 관행과 구체적 조치 등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폭넓은 분석과 평가가 이뤄진다. 따라서 WTO에서의 무역정책검토 과정과 그 결과는 각 회원국의 경제와 무역 전반에 걸친 정책, 제도, 법령, 관행 및 조치 등에 관한 종합적이고 상세한 정보의 보고(寶庫)로서 매우 중요하고 이용가치가 높다. 더욱이 투명성 차원에서 관련 자료가 모두 공개되므로 수요자가 전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그렇다면 WTO 무역정책검토제도는 왜 필요한 것일까. 앞서 무역정책검토가 정보의 보고로서 이용가치가 높다는 ‘실용적’ 차원에서 중요성을 강조했으나 WTO 시스템 차원에서 무역정책검토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첫째, 회원국들이 WTO 규범을 보다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 둘째, 각 회원국의 무역정책과 관행의 투명성, 이에 대한 여타 회원국의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다자무역체제의 기능을 원활히 하는 데 기여하며 셋



지난 3월 20일 필리핀에 대한 제4차 무역정책검토회의가 WTO에서 진행됐다. (편집자 주: 이날 회의에는 필자가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회의 현장을 생생하게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사진까지 찍어 보내왔다.)

제, 각 회원국의 무역정책과 관행이 다자무역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는 목적을 갖는다. 이러한 목적은 무역정책검토제도의 법적 근거인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부속서 3에 명시돼 있다. 또한 이 부속서는 무역정책검토가 WTO 협정에 따른 특정 의무의 강제 또는 분쟁해결 절차의 기초로 사용되거나 회원국에게 새로운 정책적 약속을 부과하려는 의도로 이뤄지는 것이 아님을 밝혀 법적 효력이 없는 '동료 검토(peer review)'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각 회원국에 대한 무역정책검토의 주기는 '최근 대표적 기간 중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정해지는데 상위 4개 회원국은 2년(최근엔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 그 다음 16개 회원국은 4년(우리나라 포함), 여타 회원국은 6년마다(최빈개도국의 경우에는 더 긴 기간 설정 가능) 무역정책검토를 받는다.

**경제·무역 전반에 걸친 정책·제도·법령 총망라해**

WTO 무역정책검토 절차는 당해 연도에 검토를 받을 주기에 해당하는 회원국(이하 '수검국')에 대해 전년도에 WTO 사무국이 가능한 수검일자를 제시하고 수용 여부를 문의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수검일자가 확정되면 이에 따라 수검준비 일정이 정해지고 검토회의 개최 시까지 보통 1년 정도의 준비과정이 소요된다.

사무국에서는 먼저 수검국의 경제와 무역 전반에 걸친 정책, 제도, 법령, 관행 및 조치 등에 관한, 일반적으로 4개 장(전반적인 경제환경, 무역정책 관련 체제, 조치

별 무역정책과 관행, 부문별 무역정책)으로 구성되는 종합적인 보고서의 초안을 순차적으로 작성한다. 초안 작성은 오랜 기간 무역정책검토 업무를 담당해 온 사무국 전문가들이 수검국에 요청해 받은 자료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직접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지며, 필요한 경우엔 수검국의 언어에 능통한 사람을 채용해 수검국의 언어로 된 자료를 수집해서 활용하기도 한다. 요즘엔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사무국에서 수검국 정부의 도움 없이도 수검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가 훨씬 용이해졌다.

이렇게 각 장별 초안이 완성되면 사무국은 이를 단계적으로 수검국 정부에 송부하고, 수검국 정부에서는 사실과 다른 기술 내용에 대한 정정사항과 사무국의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제시하며, 사무국은 이를 고려해 보고서 초안을 수정한다. 사무국 보고서는 사무국의 책임 아래 작성되는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기술 내용을 바로잡는 것 외에 수검국 정부가 제시한 의견을 수용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사무국의 판단에 달려 있다. 따라서 사무국이 내린 결론을 수검국 정부의 입장에 부합하게 수정하도록 하려면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해야 한다.

사무국 초안에 대한 일차적 의견교환이 완료되면 사무국 담당직원의 수검국 방문 협의가 이뤄진다. 이를 통해 보고서 내용에 대한 사무국과 수검국 정부 간 추가적 대면 협의는 물론 수검국의 학계나 업계뿐만 아니라 해당 수검국에 주재하는 외국 상공회의소 등의 대표자와

사무국 담당 직원 간 면담도 이뤄지게 된다. 이는 수검국 정부 의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보고서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완성된 보고서는 검토회의 개최 5주 전쯤 회원국들에게 배포되고, 회원국들은 이 보고서와 수검국 정부가 제출한 별도의 보고서(policy statement) 내용을 바탕으로 서면 질문을 작성해 사무국을 통해 수검국에 전달한다. 수검국은 검토회의 개최 전 이에 대한 서면답변을 제공한다. 이후 이틀간의 검토회의가 열리는데, 첫째 날은 수검국이 자국의 경제 및 무역 전반에 걸쳐 지난번 무역정책검토 수검 이후 그간의 진전 사항을 설명하고, 여타 회원국들이 이를 평가하거나 추가적인 질문을 한다. 둘째 날엔 첫째 날 제기된 사항에 대한 수검국의 답변과 여타 회원국들의 추가질문이 진행되고 시간부족 등의 이유로 답변이 이뤄지지 못한 질문에 대해서는 검토회의 개최 후 1개월 이내에 서면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 수준 높고 객관적인 자료...

#### 민간 업계와 학계도 꼭 활용해야

이와 같이 사무국 보고서는 1년여에 걸친 준비기간 동안 전문가들의 철저한 자료조사와 수검국 정부는 물론 수검국 정부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가질 수도 있는 국내외 업계 및 학계 등의 검증을 거쳐 작성되므로 그 수준이 매우 높고 객관성이 담보돼 WTO 회원국들도 사무국 보고서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다. 일례로, 각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개시하기 전 협상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상대국의 정책과 제도 등에 대해 알기 위해 우선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것이 WTO 사무국에서 작성한 해당국 무역정책검토 보고서가 됐다. 또한 각국이 검토회의 전에 제출하는 서면질문에는 일반적인 무역 및 투자 관련 정책, 제도 및 법령뿐만 아니라 질문 제출국이 국내 업계 등을 통해 수집한 구체적 조치에 관한 양자통상 현안 관련 질문도 포함되고 수검국은 이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수검국과 여타 WTO 회원국 간 현안과 이에 대한 수검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정보원이 된다.

사무국 보고서와 수검국 정부의 보고서는 해당 수검국에 대한 검토회의 개최 당일, 그리고 서면질문과 답변 및

검토회의 시 각국의 발언 내용을 수록한 회의록은 보통 검토회의 개최 6주 후에 WTO 홈페이지(<http://www.wto.org>)를 통해 공개되므로 일반인들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그해 무역정책검토회의 전체 일정도 WTO 홈페이지에서 입수 가능). 특히 사무국 보고서 및 서면질문과 답변 내용은 각 회원국 정부가 해당 수검국에 대한 무역 및 투자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데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뿐만 아니라 해당 수검국과의 무역 및 투자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 업계와 관련 연구에 종사하는 학계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많이 담고 있어 정부와 민간 모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 업계나 학계에서 특정 WTO 회원국의 무역 및 투자 관련 정책, 제도, 법령, 관행 및 조치 등이 관련 WTO 규범에 비춰볼 때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교통상부 등 우리 관련 정부 기관이나 해당 WTO 회원국에 주재하는 우리 공관 등에 전달하면 필요시 양자적인 해결을 도모함과 동시에 해당국에 대한 WTO 무역정책검토 시에도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물론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WTO 무역정책검토는 2~6년의 개최주기가 있고 법적 효력이 없는 '동료 검토'의 성격을 가지므로 신속한 해결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나 양자 현안을 WTO라는 다자 차원에서 제기함으로써 수검국과 여타 회원국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중장기적으로 관련 정책과 제도 등의 개선을 검토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4년마다 검토를 받는 우리나라에 대한 제6차 무역정책검토회의가 오는 9월 예정돼 있다. 준비과정과 검토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과 제도 등에 대한 부당한 지적에 대해서는 당당히 대응하되 합리적 비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체질을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문]

\* 이 글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주재네바대표부 및 외교통상부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유병석**  
주재네바대표부 1등서기관  
bsyoo00@mofat.go.kr



# 유럽 재정위기 이후 ECB 역할 놓고 ‘갑론을박’

지난 2년여간 남유럽을 휩쓴 재정위기에서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LOLR; Lender of Last Resort) 기능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났다.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이 최종대부자로서 유로존 국채를 무제한 매입해야 국제시장이 안정되고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온 유럽이 시끌벅적해기 때문이다. 으레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에 처한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것으로만 여겨져 온 탓에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영국 경제학자 월터 배젓(Walter Bagehot)은 1873년 그의 저서 『Lombard Street』를 통해 ‘금융기관에 대한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 원칙’을 제시했다. 이는 지금까지도 중앙은행 LOLR 기능의 고전적인 정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에 따르면, 중앙은행의 LOLR 기능은 건전하지만(solvent)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illiquid)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우량 담보에 의거해(against good collateral) 벌칙성 금리로(at a penalty rate) 무제한(freely) 자금을 대출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 독일 반대로 유로존 국채 매입 차단당한 ECB

현대 중앙은행은 대부분 공개시장에서 국채 등 신용도가 높은 유가증권을 사고파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채시장 안정은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 만큼 일시적으로 국채시장이 불안해질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조기 개입하는 게 효과 측면에서도 탁월하고 논리적으로도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구조적인 악성 재정적자를 보전하

는데 중앙은행 발권력이 동원되는 것은 금물이다. 이는 곧 재정화폐화(財政貨幣化, fiscal debt monetization)를 의미하며, 악성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을 포함해서 주요국 중앙은행은 필요한 경우 국채를 무제한 매입할 수 있다. 이는 물가안정과 함께 금융안정을 추구해야 하는 중앙은행에 충분한 재량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사이의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 그리고 중앙은행의 독립적인 통화정책 운용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국채 매입과 관련한 중앙은행의 정책수단이 재정화폐화 등의 폐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ECB는 주요국 중앙은행과 달리 유로존 국가의 국채를 무제한 매입할 수 없다. EU의 헌법인 유럽조약(제123조~제125조)에서 회원국 정부에 대한 ECB의 직접신용 제공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인플레이션에 극도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독일이 ECB 설립

을 주도하면서 재정회피화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 데 기인한다. 이러한 연유로 ECB는 국채 등 유가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시하거나 환매조건부(RP)로 매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2009년 말 그리스에 재정불안이 발생했을 때는 EU 집행위원회 내부에서도 “금융시장이 과잉반응하고 있다”면서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였다. 그러나 그리스 등에 구제금융이 집행되고 5천억유로 규모의 유럽금융안정기금(EFSF; 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und)이 발족됐음에도 금융불안이 오히려 확대되면서 이탈리아 및 스페인 국채의 금리까지 급등하자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 유로존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 견해가 넘쳐나는 가운데 급기야 2011년 하반기에 들어서는 ECB가 국채를 무제한 매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유럽 재정위기의 근본 원인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사이의 견제와 균형의 부재, 즉 단일 통화정책은 존재하나 재정정책은 각 회원국 정부가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데 있다는 점이 분명하다. 이 과정에서 재정적자(GDP 3% 이내) 및 정부부채(GDP 60% 이내)에 관한 의무 규정인 안정성장협약(SGP; Stability and Growth Pact)을 일부 회원국이 계속 어겼음에도 EU 차원의 제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재정정책 운용에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만연해졌던 것이다.

그러나 EU의 평균 재정적자는 GDP의 5% 내외에 불과하다. 경수수지도 미국과 달리 균형 수준이다. 그럼에도 재정적자가 GDP 대비 10%를 넘나드는 미국이나 영국이 아닌, EU 역내에서 재정위기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유럽인들이 당혹해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여겨진다. 이 과정에서 국채 매입과 관련한 미국이나 영국의 중앙은행과 ECB 사이의 기능 차이가 부각되고, 이에 따라 ECB가 이탈리아나 스페인의 국채를 무제한 매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된 것이다.



ECB가 두 차례 실시한 1조유로가 넘는 3년 만기 장기유동성 공급으로 유럽 은행들이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국채를 적극 사들여 이들 국채의 유통수익률이 크게 안정되고 있다. 사진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ECB 앞의 유로화 조형물

하여튼 유럽 재정위기는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새삼 부각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현실성을 떠나서, 일본 나이가 미국의 재정위기 가능성을 주장하는 경제전문가들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08년 리먼브러더스 도산 이후의 글로벌 금융위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비교적 큰 어려움 없이 무난한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던 데는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 튼튼한 재정은 실물경제 떠받치는 근본 원동력

우리 정부는 2009년 3월 30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금융시장에서는 이로 인해 총 60조원 규모의 국채가 신규 발행될 것인 만큼 시장금리가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왼쪽)는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지원이 합의되고 나서 가진 2월 24일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회견에서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긴축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양적완화를 실시한 미국 중앙은행처럼 국채 매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당시 한국은행 내부에서는 그다지 걱정을 하지 않았다. 통화안정증권이라는 든든한 방어막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이 무역흑자 등으로 발생하는 초과 유동성을 흡수하고자 발행하는 것으로, 필요한 경우 만기 이전이라도 상대방으로부터 다시 매입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국채 대신 통화안정증권으로 유동성을 조절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 정부가 과거 고도성장 과정에서도 균형재정을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당연히 정부는 국채를 많이 발행할 필요가 없었고, 한국은행은 국채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동성 조절을 위해 자체 증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2009년 말 현재 통화안정증권 발행잔액은 140조원을 넘었다. 추경예산 등과 관련해 총 60조원 규모의 국채가 발행되더라도 한국은행이 유사한 규모의 통화안정증권을 매입하면 전체 유동성 총량은 변화가 없게 된다. 즉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으로부터 통화안정증권을 매입하면 시중은행들은 여유자금을 갖게 되고, 이는 다시 신규 발행된 국채 매입에 운용될 수 있는 것이다.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은 원칙적으로 신용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은행들이 국채를 매입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당시 한국은행은 국채시장에 사실상 개입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의 신규 국채 발행은 무리 없이 이뤄졌다. 음으로 양으로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이 지니는 강력한 방어기능을 금융시장 관계자들이 인지하게 된 탓일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는 수십년에 걸쳐 축적된 건전한 재정운용의 힘이 수십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국채 발행과 나아가 실물경제를 떠받치는 근본적인 원동력으

로 작용했다고 보는 게 훨씬 타당할 것이다.

유럽 재정위기는 최근 큰 고비를 넘은 듯하다. 엄격한 재정규율을 통해 구조적인 재정적자를 최소화하려는 신재정협약이 타결되고,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도 사실상 마무리된 점 등이 주된 요인일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ECB가 두 차례 실시한 1조유로가 넘는 3년 만기 장기유동성 공급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확실하다. 유럽 은행들이 이를 통해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국채를 적극적으로 사고 있고, 따라서 이들 국채의 유통수익률이 크게 안정되고 있는 것이다.

재정위기 우려가 진정되면서 ECB의 LOLR 기능 확대와 관련한 논의도 많이 수그러들었다. 이는 상업은행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ECB가 국채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음이 확인된 데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 유럽 재정위기의 진행과정이 앞서 언급한 2009년의 우리 경험과 상당 부분 오버랩된다는 것이 무척 재미있다. 일부 국가의 불량한 재정상황 때문에 유로화의 운명을 걸고 분투해야 하는 ECB의 동료들과 비교하면, 견실한 재정을 지닌 정부 덕분에 2009년과 같은 상황에서도 심하게 야근하지 않을 수 있었던 필자는 분명 운 좋은 중앙은행의 직원이라는 생각이다. 필자의 견해

\* 이 글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주유럽연합대사관 및 외교통상부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서정의**  
한국은행 차장,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파견  
sje1205@bok.or.kr



# 재벌기업 개혁에 나선 이스라엘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분야에 진출하면서 정부와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이스라엘에서도 재벌기업에 집중된 경제력이 회자되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재벌개혁이 추진 중이다. 이스라엘 정부의 재벌개혁안은 지난해 10월 내각의 승인을 얻었으며 수개월 내 법으로 제정될 전망이다.

이스라엘에서 재벌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지난해 여름 페이스북에서 시작된 국민들의 시위 때문이다. 처음엔 높은 주택 임차료에 대한 항의에서 시위가 시작됐으나 점차 의료·교육 시스템, 비싼 자녀양육비 등 경제 전반의 고물가에 대한 시위로 확산됐다. 이스라엘 정부는 'Trachtenberg 위원회'를 구성해 포괄적인 경제구조 개혁 대책을 마련했는데 이 중 한 가지가 바로 재벌개혁이다. 재벌기업의 독점적 이윤 추구를 고물가의 원인 중 하나로 본 것이다.

### 상위 10대 재벌의 주가총액 비중 41%나 돼

2010년 기준 이스라엘 상위 6대 재벌그룹의 매출액은 이스라엘 총GDP의 25%를 차지한다. 상장기업 중 26%는 재벌기업에 소유돼 있다. 〈그림〉은 경제력 집중도가 높은 나라의 순위를 보여주는데 이스라엘은 상위 10대 재벌그룹의 주가총액 비중이 41%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다음으로 높다. 한국은 이스라엘의 다음이다.

이스라엘 6대 재벌기업은 'Nochi Dankner', 'Bino',

'Tshuva', 'Ofar', 'Lev Leviev', 'Azrieli'이다. 각 재벌기업들은 금융, 유통, 통신, 소비재, 석유화학, 전기기기 등 이스라엘의 전 산업 분야에 걸쳐 핵심적인 기업들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 이스라엘 재벌의 특징은 제조업과 금융업을 같이 갖고 있다는 점이다. 최대 재벌기업은 Nochi Dankner인데 보험, 금융, 유통, 통신, 제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400억달러의 자산과 130억달러(2010년)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 재벌기업의 경제력 집중에 따른 폐해를 다음의 네 가지 정도로 보고 있다. 첫째, 재벌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경쟁이 없어졌고 재벌의 독점 및 과점적 이윤 추구가 고물가 현상이 계속됐다. 둘째, 한 재벌기업이 금융과 제조업을 같이 소유함으로써 두 산업의 견제 또는 통제력이 상실됐다. 한 예로 'Delek'그룹은 금융 자회사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부동산 개발을 위한 자회사를 통해 미국에 투자했다가 미국 부동산 침체로 큰 손해를 봤다. 이 손실을 금융 자회사의 투자자에게 전가시키면서 투자자의 반발과 여론의 비난을 받았

다. 셋째, 재벌기업이 작은 규모의 유통업체를 인수하거나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함으로써 중소기업개발 기업들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했다. 넷째, 재벌기업들이 네트워크를 활용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제정했다. 'Israel corp'의 전기차의 경우 '충전소 설치와 시설에 관한 법'이 회사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하도록 돼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등장한 이스라엘 정부의 재벌개혁안은 2011년 10월 내각에서 승인됐으며 수개월 내에 법으로 제정될 전망이다. 해당 재벌기업은 법이 제정되면 4년 이내에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제조업과 금융업을 분리해야 한다. 새로 형성되는 재벌기업의 경우 제조업 매출 17억 달러와 금융업 112억 달러의 기업을 동시에 소유할 수 없다. 이미 두 산업의 기업을 모두 갖고 있는 기존 재벌기업의 경우는 제조업 매출 21억 달러까지 허용한다. 또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이사직 겸임이 금지된다. 법 제정 이후 2년의 조정기간이 허용될 예정이다. 둘째, 재벌의 피라미드식 소유구조가 제한된다. 피라미드식 소유구조를 3단계(지주회사 포함)까지만 허용하며 기존 소유구조의 경우엔 4단계까지 허용하되 4단계 업체의 이사회 내·외부 이사 포함 조건이 강화된다. 셋째, 'Antitrust Regulatory' 커미셔너의 행정권이 강화된다.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그룹에 대한 구조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넷째, 정부 자산 및 인프라 매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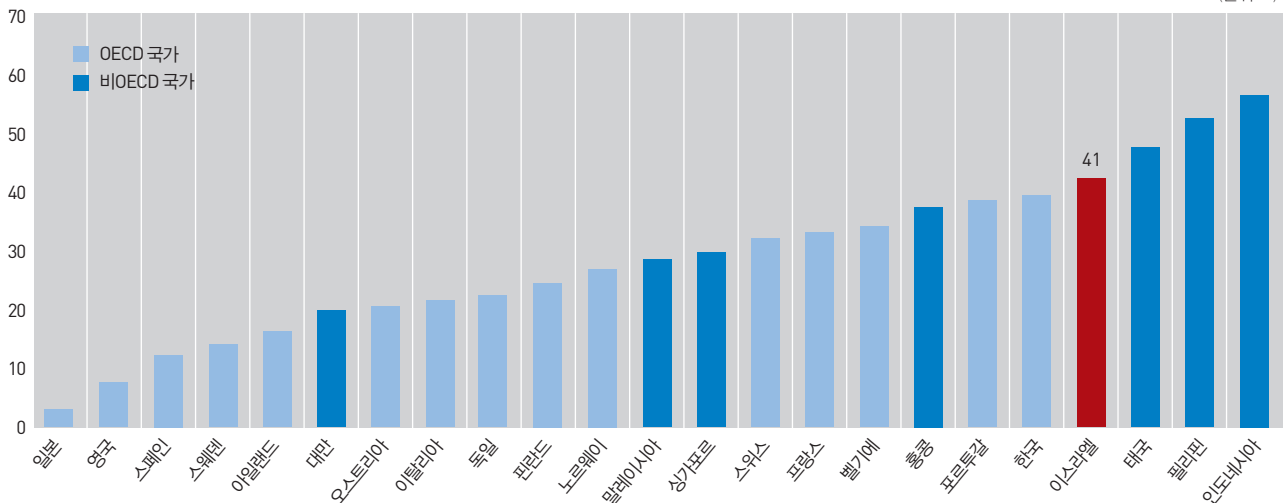
시 재벌기업의 참여가 제한된다. 정부 소유의 인프라 기업(물, 에너지, 통신, 교통, 의료 및 자연자원 등) 매각 시 구매자가 이스라엘 내 매출액이 17억달러 이상이거나 해당 인프라에 대한 50% 이상의 지분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 특별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의 승인이 필요해진다. 이외에도 4천만달러 이상 또는 공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 자산 또는 권한 매각 시 Antitrust 커미셔너의 승인이 필요하다. 다섯째,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의 제품 판매, 자산 거래, 서비스 제공, 대출 거래 등에 대한 감사도 강화된다. 여섯째, 소주주 권한이 강화돼 인터넷을 통해 주주총회 등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된다. 증권감독청에서는 집단소송(Class Action) 및 대표소송(Derivative Action)에 대한 파이낸싱을 확대한다. 일곱째, 금융기관의 자금공급을 제한한다. 금융기관은 전체 운용액의 5% 이상을 한 업체에 대출할 수 없으며 최대 대출업체 5개사의 합계가 2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룹의 경우 그룹당 10%, 최대 대출 5개 그룹이 40%를 초과할 수 없다. 여덟째, 기관투자자들의 투자결정 시 대상기업에 대한 기업 지배구조 및 차입매수 현황 등을 중요한 의사결정 요소로 고려하도록 했다.

### 시장경쟁 촉진하려면 재벌개혁은 불가피

국민들은 고물가의 일부 책임이 재벌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개혁을 지지한다. 또한 재벌이 정부와 시

(그림) 주요 국가별 10대 대기업의 주가총액 비중

(단위: %)



자료: Economics Department, SEC

〈표〉 이스라엘의 주요 재벌기업

재벌그룹	지주회사	주요 계열사	총자산 (백만달러)
Nochi Dankner	I.D.B. Holdings (외 3개 업체)	Clal Insurance(보험), Clal Finance(금융), Supersal(유통), Cellcom(통신), Hadera Paper(제지), Given Imaging(의료기기), 013Netvision(통신), Gol(의료)	39,906
Bino	F.I.B.I. Holdings	First International Bank(은행), UBank(은행), Massad Bank(은행), Bazan(석유화학), Paz(석유화학), Pazgas(가스)	28,775
Tshuva	Delek Group	The Phoenix(보험), Gadot Biochemical Industries(바이오화학), Delek Petroleum(석유화학), Delek Automotive(자동차), Delek Real Estate(부동산)	26,256
Ofer	Israel Corporation	Mizrahi Tefahot Bank(은행), Israel Chemicals(화학), Tower Semiconductor(반도체), Oil Refineries(석유화학), ZIM(해운), Betterplace(전기자동차)	14,218
Lev Leviev	Africa Israel Investments	Africa Israel Industries(철강), Negev Ceramics(세라믹), Africa Israel Properties(부동산), LLD Diamonds(다이아몬드)	7,543
Azieli	Azieli Group (외 1개 업체)	Leumi Card(금융), Tambour(화학), GES(담수화), Sonol Israel(석유화학), Supergas(가스), Azieli Shopping Centers(유통)	6,098

자료: D&B(2011년, \$ = 3.5NIS)

장에 대한 영향력, 독점체제 구축 등으로 부를 축적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부는 재벌개혁으로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2월 재벌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경쟁 지지, 독점 반대”라고 말했다. 2013년 총선을 앞둔 정부로서는 민심을 얻기 위해서라도 재벌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와 소매업 등에서 자신들의 사업영역을 침해당한 적이 있는 중소기업들 역시 재벌개혁에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재벌개혁 법안이 제정되더라도 재벌들이 이를 우회하는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우려한다.

당사자인 재벌기업들은 GDP 2천억달러 정도인 이스라엘의 작은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재벌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력 집중은 불가피하며 소비자에게 주는 부정적 후생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스라엘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대기업들이 해체될 경우 수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스라엘의 재벌개혁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도 몇 가지 시사점을 준다.

우선, 경제의 체질강화와 물가인하를 위해서는 재벌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재벌개혁은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둘째, 제조업과 금융업은 분리되는 것이 좋다는 점이다. 그동안 이스라엘 재벌그룹은 금융업과 제조업을 같이 소유해 금융 계열사가 제조 계열사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

자원 왜곡 배분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셋째, 외국인 투자유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다. 이스라엘은 독점 및 과점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경쟁제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재벌기업 개혁이 완료되면 이들 계열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넷째, 경쟁촉진을 위해서는 시장개방이 불가피하다. 이스라엘은 재벌기업이 취급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 철폐, 350달러 미만의 소규모 수입에 대한 면세 적용을 통해 독과점 분야의 경쟁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물가인하를 유도할 예정이다. 다섯째, 인터넷 영향력으로 인해 재벌기업의 국내외 가격차별 정책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재벌개혁의 시작도 페이스북 북에서의 고물가 시위에서 비롯됐는데, 최근 한 이스라엘 재벌기업이 생산하는 초콜릿이 이스라엘 시장에서 미국보다 3배 비싸게 팔리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대기업에 대한 가격인하 압력과 함께 재벌개혁 요구가 다시 불붙고 있다. 박민준

\* 이 글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KOTRA 및 KDI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영선**  
KOTRA 이스라엘 텔아비브 무역관장  
yslee@kotra.or.kr

〈표〉 이스라엘의 주요 재벌기업

재벌그룹	지주회사	주요 계열사	총자산 (백만달러)
Nochi Dankner	I.D.B. Holdings (외 3개 업체)	Clal Insurance(보험), Clal Finance(금융), Supersal(유통), Cellcom(통신), Hadera Paper(제지), Given Imaging(의료기기), 013Netvision(통신), Golf(의류)	39,906
Bino	F.I.B.I. Holdings	First International Bank(은행), UBank(은행), Massad Bank(은행), Bazan(석유화학), Paz(석유화학), Pazgas(가스)	28,775
Tshuva	Delek Group	The Phoenix(보험), Gadot Biochemical Industries(바이오화학), Delek Petroleum(석유화학), Delek Automotive(자동차), Delek Real Estate(부동산)	26,256
Ofer	Israel Corporation	Mizrahi Tefahot Bank(은행), Israel Chemicals(화학), Tower Semiconductor(반도체), Oil Refineries(석유화학), ZIM(해운), Betterplace(전기자동차)	14,218
Lev Levia	Africa Israel Investments	Africa Israel Industries(철강), Negev Ceramics(세라믹), Africa Israel Properties(부동산), LLD Diamonds(다이아몬드)	7,543
Azieli	Azieli Group (외 1개 업체)	Leumi Card(금융), Tambour(화학), GES(담수화), Sonol Israel(석유화학), Supergas(가스), Azieli Shopping Centers(유통)	6,098

자료: D&B(2011년, 1\$ = 3.5NIS)

장에 대한 영향력, 독점체제 구축 등으로 부를 축적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부는 재벌개혁으로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2월 재벌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경쟁 지지, 독점 반대”라고 말했다. 2013년 총선을 앞둔 정부로서는 민심을 얻기 위해서라도 재벌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와 소매업 등에서 자신들의 사업영역을 침해당한 적이 있는 중소기업들 역시 재벌개혁에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재벌개혁 법안이 제정되더라도 재벌들이 이를 우회하는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우려한다.

당사자인 재벌기업들은 GDP 2천억달러 정도인 이스라엘의 작은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재벌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력 집중은 불가피하며 소비자에게 주는 부정적 후생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스라엘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대기업들이 해체될 경우 수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스라엘의 재벌개혁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도 몇 가지 시사점을 준다.

우선, 경제의 체질강화와 물가인하를 위해서는 재벌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재벌개혁은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둘째, 제조업과 금융업은 분리되는 것이 좋다는 점이다. 그동안 이스라엘 재벌그룹은 금융업과 제조업을 같이 소유해 금융 계열사가 제조 계열사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

자원 왜곡 배분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셋째, 외국인 투자유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다. 이스라엘은 독점 및 과점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경쟁제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재벌기업 개혁이 완료되면 이들 계열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넷째, 경쟁촉진을 위해서는 시장개방이 불가피하다. 이스라엘은 재벌기업이 취급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 철폐, 350달러 미만의 소규모 수입에 대한 면세 적용을 통해 독과점 분야의 경쟁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물가인하를 유도할 예정이다. 다섯째, 인터넷 영향력으로 인해 재벌기업의 국내외 가격차별 정책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재벌개혁의 시작도 페이스북에서의 고물가 시위에서 비롯됐는데, 최근 한 이스라엘 재벌기업이 생산하는 초콜릿이 이스라엘 시장에서 미국보다 3배 비싸게 팔리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대기업에 대한 가격인하 압력과 함께 재벌개혁 요구가 다시 불붙고 있다. 닐라 정혜

\* 이 글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KOTRA 및 KDI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영선**  
KOTRA 이스라엘 텔아비브 무역관장  
yslee@kotra.or.kr

2012년 「나라경제」는 연중기획으로 '함께 사는 세상\_다문화'를 진단해본다. 2011년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이 140만명을 넘어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에 진입했지만 다문화에 대한 국민의식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 사회의 다문화 현황과 특성, 외국인 이주자들의 고충, 다문화 사회의 국민의식, 이주민 정책 과제 등을 집중 조명해본다.

10만번째 귀화인 로이 알록 꾸마르 부산외대 인도어과 교수

## 모두가 동등하고 평등한 '같은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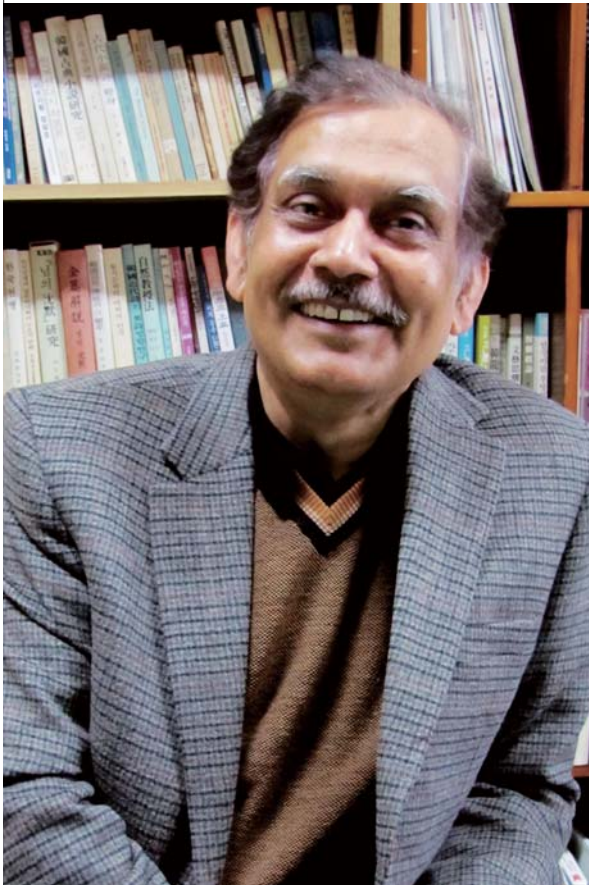
1957년 제1호 귀화자가 탄생한 이후 54년 만에 우리나라도 귀화인 10만 시대를 열었다. 10만번째 귀화인은 바로 인도 출신의 로이 알록 꾸마르(55세) 교수. 1980년 3월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입국해 한국인과 결혼한 뒤 2명의 딸을 낳고 키우며 살아온 게 어느덧 32년. 부산외대에서 강의하고 있는 그를 만났다. 넉넉한 웃음과 반갑게 맞이하는 정겨운 말투에서 이방인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 한국인이 되는 데 30년 이상이 걸렸다.

인생의 3분의 2를 이곳에서 보냈다. 내 아이들도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생계를 꾸리면서 꼬박꼬박 세금도 냈다. 그런데 외국인으로 생활하면서 매일매일 겪는 불편함들을 보고 선배나 친구들이 "왜 사서 고생을 하나. 한국사람보다도 더 한국인인데"라고 말하곤 했다. 그러나 나는 한국어와 한국의 사회·문화를 제대로 알고, 나를 만난 사람이 나를 한국사람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내 앞에 있는 숙제를 다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행히 내가 준비하는 동안 한국 사회도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서로 준비가 다 되기 전까지는 국적을 바꾸고 싶지 않았다. 국적 취득이 나에게 자존심, 자존감을 찾는 일이기도 했다. 사람은 자존심을 먹고 사니까.

### 한국에 귀화하게 된 중요한 계기는 무엇인가?

지난 30년 동안 한국을 지켜본 사람의 입장에서 변화의 바람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내가 국적을 취득하려 할 때, 한국은 이중국적 제도를 도입했다. 물론 난 해당 사항이 없다. 인도는 이중국적을 불허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인도 국적은 포기해야 한다. 한국의 이러한 변화 자체가 매력적이고 조그마한 틈이 생긴 것이 그저 반가웠다. 경직된 사회가 어느 정도 이완된 느낌이었을까. 또 하나는 내 생활 때문이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국적은 걸림돌이었다. 주민번호 없이는 연구 프로젝트는커녕 당장 인터넷 사이트 하나 가입하는 것도 어려운데 무슨 연구를 할 수 있겠나.



외국인번호는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데 한계가 있다. 원고료 입금은 물론 자료를 찾거나 내가 쓴 칼럼이나 논문도 회원 가입이 안 돼 보질 못한다.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불편하고 번거로울 수밖에 없다.

###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나서도 여전히 차별이 있다고 느낄 때가 있나?

차별이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어디든 있다. 차이를 인정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단적인 예로 '로이 알록 꾸마르'라는 이름을 바꾸지 않고 국적을 취득했으나 내 이름을 모두 다 쓸 수 있는 서류 양식은 많지 않다. 세 글자 혹은 네 글자로 돼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풀네임을 다 써본 적이 없다. 하하. 이런 시스템적 문제를 바로잡는 데도 시간이 꽤 걸린다.

### 한국인이 외국인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 것 같나?

전보다 나아진 것은 사실이다. 물론 선진국에도 차별이 존재하지만 적어도 법·제도적 차별은 없다. 그 사람이 싫어도 앞에서는 차별을 안 한다. 한국은 너무 솔직하다. 바로 앞에서 차별하고 무시한다. 지난해 우즈베키스탄 출신자가 피부색이 다르고 에이즈를 옮길지도 모른다는 이유 등으로 사우나 출입을 거부당한 사건은 한국의 배타적 태도와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좋은 예다.

로이 알록 꾸마르 교수는 한국인이 외국인을 보는 시각 자체도 매우 제한적이라고 했다. 그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한국에서 외국인은 모두 미국인이었다. 그 역시 미국인에서 인도사람이 되는 데 10년이 걸렸다. 인도와 인도네시아를 구분한 지도 얼마 안 됐다고 말했다.

### 두 딸은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한국 생활에서의 편의를 위한 선택이었는지 궁금하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한국에서는 22살이 되면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그전까지는 양국 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었는데 유학 또는 여행 갈 때 비자 발급 등의 절차가 번거로웠다. 또 하나는 국적의 의미와 개념이 달라졌다는 생각이다. 글로벌 시대에 제일 정확한 국적은 이메일 주소다.

### 서울대 유학생이었는데 부산에 내려와 살게 된 이유가 있나?

솔직히 이렇게 놀러왔게 되리라곤 상상하지 못했다. 유학을 마치고 나면 인도로 돌아가 교편을 잡을 생각이었다. 지인이 급하게 강의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잠시 도와줄 생각으로 내려왔다. 그때가 1989년 9월 즈음. 가족과 아이들이 서

울에 있어 처음엔 서울과 부산을 왔다갔다 했다. 장소만 달라진 거지 교편을 잡겠다는 목표는 이룬 셈이다. 하하.

### 다문화 가정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을 자주 한다고 들었다. 주로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가나?

환경이 달라지면 당연히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여성이 시집을 가면 환경이 바뀌지 않나. 문화·음식을 포함해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지만 해결해야 할 도전이라고 말해준다. 문제해결 능력의 향상이 관건인데 다문화 가정의 언어습득 능력이나 적응력을 봤을 때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적응이 상당히 빠르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제사부터 시작해서 한국 문화와 언어를 습득하는 데 채 3년이 안 걸린다. 요즘 젊은이들 중에 제사상을 차릴 줄 아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 언어와 문화에 빨리 적응하는 것이 지름길이다. 인정받을 때까지가 위기고 가장 힘드니 그때를 잘 넘겨야 한다고 강조한다.

### 한국말, 어렵지 않나? 언제부터 말하고 글을 쓰는 게 자유로웠나?

인도의 교육환경이 큰 도움이 됐다. 인도에선 다양한 언어 사용이 보편화돼 있다. 헌법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언어가 17개다. 인도사람 네 명이 모이면 5개 이상의 언어와 5개 이상의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말이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다. 언어도 처음 접할 때가 문제지 그 이후부터는 문제 없다. 인도에서는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4~5개 언어를 습득한다.

### 한국의 다문화 정책, 어디서부터 풀어나가면 좋을까?

한국은 다문화주의를 무질서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인식을 빨리 바꿔야 한다. 넓은 시각에서 바라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외국 인력의 유입을 부담으로 느껴서는 안 된다. 진정성을 갖고 그들을 도와줘야 한다.

### 끝으로 독자 또는 정책 담당자에게 제안하고 싶은 게 있다면?

다문화주의 경제를 연구해야 할 시점이다. 록셈부르크를 보라. 50% 이상이 외국인이다. 부자 나라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잘 살펴봐라. 결코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다.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외국 인력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지 깊이 있게 연구해야 한다. 미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던가. 바로 외국 인력이다. 싱가포르 인구의 2배가 외국인이다. 그들을 무시하고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모두가 동등하며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할 '같은 사람'이란 것을 받아들이는 시점이다. 박정호

● 권기대 나라경제 기자

## 동화주의 · 혈통주의에 기댄 이주정책 재검토돼야

이제 어디서나 '다문화'라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게 됐지만 한국 사회의 현실은 민족적 소수자들에게도 처우와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지는 다문화주의의 이상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

그동안 정부는 다문화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결혼이주민과 그 2세를 위한 갖가지 지원책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인 배우자나 그 가족의 신분보증이 있어야 체류연장이 가능하다.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권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종속돼 있는 한 아무리 많은 지원정책이 실시돼도 결혼이주민이 평등한 부부관계를 누리며 안정적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국내체류 이주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전문인력 이주노동자를 위한 다문화정책이 실시된 적이 없다. 법개정으로 이제 이주노동자는 최장 10년간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됐지만 장기체류 이주민으로서 당연히 보장돼야 할 사회권 및 가족동반권은 여전히 고려조차 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을 옮길 권리, 자유롭게 계약할 권리, 취업과 체류연장 등이 기업주에게 완전히 종속돼 있어 형식적으로 보장된 노동권도 흔히 무용지물이 되곤 한다.

이주민 유입의 역사가 20여년이 넘고 장기체류 이주민들이 늘면서 이주민인권 문제의 영역은 훨씬 더 다양해지고 있다.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들의 건강권과 교육권이 그 대표적이다. 법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정착과 가족동반은 금지돼 있는데 실제로는 가족을 데려오거나 가족을 형성한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런 가족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한국에서



지난 3월 2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충북 제천 한국폴리텍 다솜학교 개교식에 참석했다. 다솜학교는 전국의 모든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기술습득과 취업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설립된 고교과정의 대안학교다.

태어나 자라고 있지만 한국 국적은 커녕 한시적 체류권도 없는 실정이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모의 나라에도 출생신고를 못해 무국적자인 경우도 많다. 법적으로 존재조차 없는 이런 아이들의 부모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은 아이가 아픈 것이다. 의료보험이 없기 때문에 감기로 병원에 가도 치료비가 엄청나다.

체류권이 없는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은 단속과 추방이다.

본인의 의사로 미등록 상태가 된 것이

아니라 남편의 폭행으로 집을 나온 결혼 이주여성이거나 잔업수당을 주지 않아 항의했더니 기업주가 사업장 이탈신고를 해버린 이주노동자일 수도 있는데 말이다.

이주노동자의 정착과 가족동반을 허용하지 않는 단기로테이션 제도, 동화주의와 혈통주의에 기초한 한국의 이주정책은 현재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중이다. 지난해 취업기한이 끝나 돌아가야 할 이주노동자 4명 중 1명이 돌아가지 않았다. 사회가 배타적일수록 이주민이 사회에 통합되지 못한 소수자로 남게 된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준다. 혹시 한국 사회가 지금 경제적 · 사회적 · 정치적 권력에서 배제돼 기댈 곳이라곤 민족적 · 인종적 · 문화적 정체성밖에 없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다. **박영**



**이한숙**  
이주와 인권연구소 소장  
mihu@paran.com

# 평범한 일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힘



마음의 집 노인대학 학생들과 노인요양병원에 갔다. 삶의 끝자락에서 있는 노인분들을 위한 위문공연인 만큼 잠시나마 즐거움과 위안이 됐으면 하는 조심스럽고 간절한 마음이었다. 공연장 무대에 들어서자 앞자리에 낯익은 할머니 한 분이 눈에 띄었다.

가톨릭 노인학교에서 수년간 춤을 열심히 잘 따라 하던 분인데 한동안 안 보이신다 했더니 이 병원에서 요양을 하고 계신 것이다. 너무 늙고 초췌한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를 하고 공연을 시작했다. 무대 밑에서 그 할머니가 어렵פות한 기억을 더듬어 쉬운 동작을 따라 하는 모습이 기쁘기도 했지만 쇠약해진 몸짓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 자꾸 눈물이 났다.

공연단 전체를 움직이는 지휘를 하고 있다는 것도 잠시 잊고 오직 그분을 위한, 그분과 단둘이서 하는 율동인 것처럼 시선을 맞춰가며 마음을 모아 공연을 마쳤다. 예전에 함께 춤을 췄던 친구들이 얼마나 그리우실까 생각하니 공연 뒤에도 한참을 멍한 마음이었다.

삶이라는 것. 이는 화려한 과거의 일도, 절망과 역경을 이겨낸 일도, 지난날을 회상하는 일도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조그만 목표와 꿈이 있고 희망의 싹을 틔워 감동하고 감동을 주는, 모든 일상의 일들을 풍요로운 이야기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아침 일찍 부지런을 떨며 머리에 롤을 감았다. 어르신들께 항상 활기찬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도 나의 일이다. 역시나 빼곡한 일정의 하루가 시작된다.

김해 상동노인학교에 가는 날, 오늘도 누군가가 나를 기다려 준다는 행복감과 설렘으로 수업준비를 한다. 수년 전 사고로 쓰러져 두문불출하던 그분도 나를 기다릴 것이다. 사고로 안면이 몹시



변해 남에게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아 더욱 바깥출입을 못하셨던 분이다.

마을 노인들의 건강체조 프로그램을 맡았을 때 그분을 처음 보았다. 당시에는 몹시 주저하셨으나 더 많은 관심을 가져 드린 게 용기가 됐는지 1년이 지난 지금은 팔을 머리 위로 올릴 수 있게 됐고 율동도 자유롭게 하시게 됐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을 열고 이웃에게로, 바깥으로 나오면서 얻게 된 그분의 자신감이다. 아울러 육체의 회복 덕에 본인은 물론 주위 친구들 모두 감격하고 있다. 나의 작은 노력이 재활의 기쁨이 된 것이다. 또 절망과 고독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그분의 용기는 언제나 내 삶의 죽비(竹篋)가 돼 준다.

노인요양시설 등 각종 노인 관련 시설에서 노인분들께 체조나 율동을 가르치는 나는 이제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 질병도 질병이려니와 고독이라는 길고 긴 늪이다. “해가 지고 불 꺼진 집에 들어가는 것이 죽기보다 더 싫다”던 한 어르신들의 절규가 생각난다. 마치 세상과 격리된 것처럼 혼자 살아가시는 분이었다. 또 한 분,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수년 동안 새벽 시간에 매일 전화를 하신 분이 있었다.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사셨는데도 말상대가 없어 내게 전화를 해 같은 말을 수없이 되풀이하셨다. 자기 이야기를 누군가 들어 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며 그것이 삶의 기쁨이었던 그분의 작은 소망이 항상 내 가슴에 얹혔다.

오늘도 나는 즐거운 춤과 몸짓을 그분들께 나눠드리다. 그리곤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건강을 빌며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새삼 떠올려본다. ■



**박덕자**  
마음의 집 노인대학 학생  
pdj0706@yahoo.co.kr

# 創職

## 현수막 에코백 제작자

현수막과 광고판, 페타이어가  
세상에서 하나뿐인 패션소품으로 재탄생

업사이클링(upcycling)은 자원을 재활용하되 기존 것에 가치를 더해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 쓰는 것을 말한다. 리사이클링(recycling, 재활용)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다. 빈 우유팩은 깨끗이 씻어 말리고, 낡은 흰 옷은 포도껍질로 천연염색을 한다. 말려둔 우유팩을 여러 개 이어 붙이고 염색한 천으로 커버를 씌워 수납 바구니를 만드는 것. 이처럼 버려진 것에 디자인을 더해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업사이클링이다. 궁극적으로 친환경 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늘려 사람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미 현대문명의 편리함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간단한 업사이클링 과정을 듣고도 복잡하고 귀찮은 것으로 생각하기 일쑤다.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에서 업사이클링 분야는 사회적기업의 몫인가 보다. 사회적기업 '터치포굿'(Touch for Good)을 창업한 박미현 대표(27세, 사진)의 이야기를 들어 보자.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그녀는 학기 중 NGO에서 일하면서 환경 문제에 눈 뜨기 시작했다. 때마침 '청년을 위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됐는데, 여기서 만난 팀원 모두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컸다. 그들과 함께 환경오염을 줄이면서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한 번 쓰고 버려지는 현수막으로 패션소품을 만들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밤을 지새운 것도 여러 차례. 스펙 쌓기식 취업준비가 무가치하게 느껴진 반면 이 일은 가슴이 뛰었다. 7주간의 아카데미 과정만으로 끝내기엔 아쉬움이 남았던 팀원들은 'Work Together' 공모전에서 사업화 가능성을 시험해 보기로 의기투합했고, 호평 속에 상까지 받았다. 터치포굿의 탄생이었다. 터치포굿,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내기 위한 손길쯤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녀는 수명이 다한 현수막과 광고판, 페타이어 등으로 가방이나 파우치, 신발 등 예쁜 패션소품을 만들어낸다. 단, 버려지는 재료를 수거하기보단 기업·학교·단체 등에서 게시기간이 끝난 현수막이나 광고판 등을 기증받는다. 환경을 한 번 더 생각하는 문화가 모두에게 정착되기를 바라서다.

"현수막이나 광고판 등은 추가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세제로 세탁을 해요. 특정 기업명이나 개인의 이름이 적힌 부분은 제거하고 색과 형태를 재구성하는 디자인 작업을 한 다음 본격적인 제작에 들어가지요. 제작도 아무 업체에나 맡기지 않습니다. 자활단체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저소득층 여성들이나 우수한 기술을 가진 국내 영세 작업장에 맡겨요. 국내에 일자리

를 제공하고 지역 공동체와의 연계를 꾀하기 위해 서죠. 이런 과정이 끝나면 비로소 홈페이지나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얻은 수익금의 일부는 환경질한을 앓는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해 쓰지요."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무관심을 짚어내자는 철학을 갖고 시작한 일이지만 고민도 많고 어려움도 많다. 사회적기업을 두고 무조건 좋은 일을 하는 기업체로 인식해 따짜고 따 돈을 요구하는가 하면 정부지원금을 보고 뛰어 들었다는 오해도 한다. 무턱대고 온갖 폐기물을 사무실 앞에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종종 반가운 전화도 걸려온다. 현수막, 광고판으로 뒤편 거냐고 묻는 전화다. 이런 관심이 계속되다 보면 언젠가는 그들도 버려지는 현수막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될 것이리라. **김민정**

● 김민정 한국고용정보원 직업연구센터 연구원

mulpure3001@daum.net



박미현 터치포굿 대표와 업사이클링 제품들

# 텃밭을 풍성하게 하는 잎채소

처음 텃밭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잎채소에 열광한다. 잎채소만큼 봄여름 식탁을 풍성하게 해주는 작물이 없기 때문이다. 잎채소를 키우는 재미는, 씨를 뿌리고 올라오는 어린 잎을 솥아먹고, 다 자란 잎을 질릴 만큼 뜯어먹고 나서 꽃을 보고 씨를 받는 그 모든 과정을 겪는 데 있다. 모종을 심기보다는 씨로 심는 게 가꾸는 재미나 먹는 재미에서 단연 앞선다. 더욱이 씨로 뿌리는 포기가 더 오래도록 싱싱하게 자란다. 그러나 씨를 종묘상에서 사거나 얻어다 심자.

씨가 트는 데는 빛이 필요 없어 씨를 흙으로 잘 덮어준다. 물과 양분, 온도가 적당하면 씨는 잠자고 있던 생명을 일깨우며 싹을 틔운다. 그러나 상추는 유독 빛을 필요로 하므로 씨를 살짝 가릴 정도만 흙을 덮어준다.

## 4월 초순~중순에 심을 잎채소

상추만 해도 청상추, 적상추, 치마상추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거기다 치커리류, 겨자채, 청경채까지 쌈채 목록은 다채롭다. 4월에는 아욱, 근대, 열무, 얼갈이배추, 양배추 등 잎채소와 대파, 부추 등 양념채소도 심는다. 이들 채소는 15~25℃



사이, 즉 초여름까지 자라며 따먹을 수 있다.

## 씨로 심기

잎채소는 뿌리가 깊이 자라지 않아 평평한 밭두둑에서 가꾼다. 밭두둑에 손가락으로 살짝 골을 내는데, 골과 골 사이를 25cm쯤 벌린다. 손바닥에 씨를 한 움큼 얹고 골을 따라 한 두 알씩 떨어뜨린 뒤 씨의 두 배쯤 되는 두께로 흙을 덮는다. 밭이 아주 마른 게 아니면 씨 뿌린 뒤 물을 주지 않아도 된다.

## 모종으로 심기

모종 역시 평평한 밭두둑에 심는다. 구멍이 깊이는 10cm, 간격은 사방 25~30cm로 넉넉하게 잡는다. 구멍이에 물을 흠뻑 준 뒤 모종을 심고 파낸 흙을 다시 덮어 잘 여며준다.

## 가장자리에 양념채소 심기

밭 가장자리로는 대파와 부추를 심는 것도 좋다. 이들 양념채소는 향이 강해 벌레를 막아준다. 씨로 줄뿌림해도 되고, 대파 모종이나 부추 뿌리를 사다 구덩이를 파서 심어도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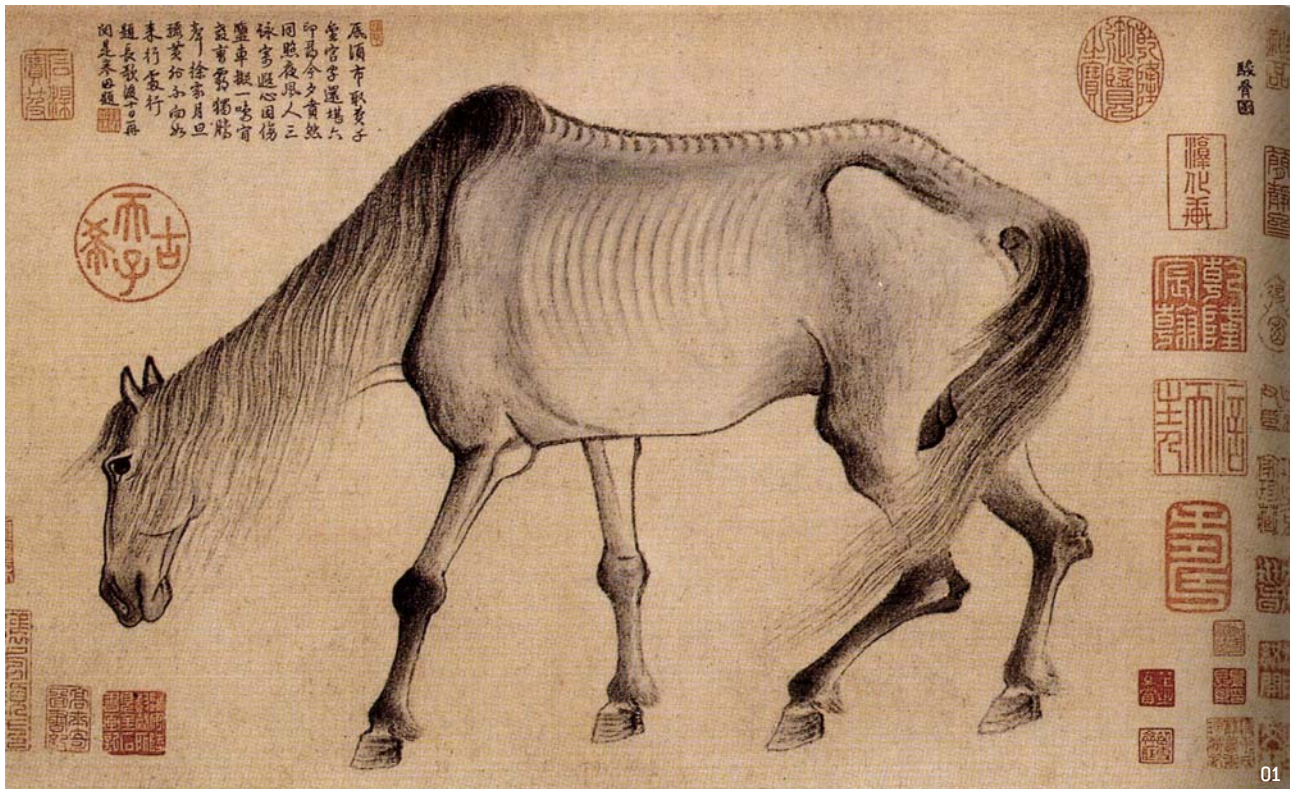
## 가꾸기

밀거름을 한 텃밭에 뿌린 잎채소는 날이 따뜻해지면서 쑥쑥 자란다. 열무, 청경채, 양배추에 배추벌레나 진딧물이 낄 때는 싹뜨물발효액이나 목초액을 주면 좋다. 잘 발효된 오줌액비는 공짜로 얻는 유용한 질소질 거름으로 잎을 키우는 잎채소에 그만이다. ▶ 관련 정보



**김지숙**  
jsskim@naver.com  
전국귀농운동본부 텃밭보급소에서 펴내는 『텃밭신문』 편집장. 텃밭농사를 시작하고 나서 오심견도 고치고 복잡한 머릿속도 많이 맑아졌다고 한다.

## 공개(龔開)의 준. 골. 도.



중국 화가들은 말(馬) 그림을 즐겨 그렸다. 당(唐)의 한간(韓幹), 송(宋)의 이공린(李公麟), 원(元)의 조맹부(趙孟頫) 등 역대의 일급화가들은 저마다 말 그림을 남겼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다. 전통적으로 중국에서 말은 벼슬아치를 상징했다. 통치자를 도와 정사를 보필하는 문관, 전쟁터에 나가 나라를 지키는 무관 모두 말을 탔다. 말은 영웅호걸, 곧 인재를 상징했던 것이다. 통치자에게 인재만큼 소중한 것이 없음을 새삼 언급할 필요도 없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모두 얼마나 훌륭한 인재를 확보하고 있느냐에 달렸다는 점을 역사가 말해 주기 때

문이다.

원나라 초기에 활동했던 화가 공개(龔開, 1222~1307년) 역시 말 그림을 그렸다. '준골도'(駿骨圖)라는 제목의 이 그림은 언뜻 보기에 말 그림의 원조 격인 한간의 '조야백'(照夜白)을 연상시킨다. 당 현종(玄宗)의 애마이자 명마였던 조야백의 힘찬 형상을 마치 단독 초상화를 그리듯 그린 이 명마의 초상은 애석하게도 머리 부분만이 원래의 그림이고 나머지는 후대에 덧칠을 해 어설픈 모습이 되고 말았다. 공개도 한간의 전례를 따라 말 한 마리를 마치 초상화 그리듯 그렸다. 준수한 얼굴에 바



01 공개, 준골도, 원, 종이 위에 수묵, 29.9×56.9cm, 오사카 시립미술관  
02 한간, 조야백, 부분, 당(8세기), 비단 위에 수묵, 30.8×33.5cm, 뉴욕 메트로폴리탄미술관  
03 정사초, 뿌리 없는 난초(無根蘭), 1306년, 오사카 시립미술관



람에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가 제법 명마의 태를 뽑내지만 뜻밖에도 몇 달은 굵은 듯 갈비뼈가 앙상한 모습이다. 화가는 왜 하고많은 말을 두고 하필 이토록 수척한 말을 그린 것일까. 대체 무슨 사연인 걸까.

공개는 원래 송나라 때 염세(소금판매에 부여한 세금)를 거두는 하급관리였다. 그런데 그의 나이 47세에 나라의 멸망이라는 비운을 맞이한다.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던 송 왕조가 몽골 쿠빌라이의 말발굽 아래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다. 새로 중원의 주인이 된 원 왕조는 관료 조직의 중추를 몽골인과 색목인(色目人, 이슬람인과 몽골 외의 유목민)으로 구성하고 자신들에 저항한 송나라 사람을 비롯한 한인들을 하급 신민으로 강등시키는 한편 이들의 고위관료로의 진입을 제도적으로 완전히 봉쇄했다.

문화적 자존심이 강했던 송나라의 사대부는 자신들이 멸시했던 유목민으로부터 굴욕을 당한 것은 물론 당장 생계까지 위협받는 처지로 전락한 것이다. 당대 떠돌던 “여덟째는 농민, 아홉째는 유생, 열째는 거지”라는 말만 봐도 한족 지식인들의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원의 야만적인 문화에 동화되기를 거부하고 송의 유민(遺民)이라는 자의식을 갖게 됐고 글과 그림을 통해 원 왕조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공개 역시 주린 배를 움켜쥐고 그림과 글씨를 통해 망국의 설움을 달랠 수밖에 없었고 ‘준골도’는 그런 비분강개(悲憤慷慨)의 속내를 토로한 작품 중 하나였던 것이다. 그는 수척한 말 그림 위에 이 말이 원래는 송나라 황실의 마구간에 있던 준마로 왕조의 멸망 후 버려진 말이라는 내용을 담은 시를 적어 넣었다.

“구름과 안개가 하늘 길에 떨어진 이래 / 전 왕조(곧 송나라)의 열두 마구간이 텅 비었네 / 이제 누가 이 수척한 말을 가여워할꼬 / 저녁 노을 진 모래 해안에 우뚝한 그림자만 산처럼 비출 뿐이네”

결국 수척한 말은 멸망한 송 황실임을 상징하는 동시에 뿌리 뽑힌 한족 유민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정사초(鄭思肖, 1241~1318년) 역시 그림을 통해 유목민 왕조에 대한 저항의식을 드러냈다. 그도 공개와 마찬가지로 송나라 말기의 사대부였는데 나라가 망하자 세상을 버린 채 은둔하다가 생을 마쳤다. 그는 ‘뿌리 없는 난초’(無根蘭, 1306년)를 그려 이민족의 지배 아래 뿌리 뽑힌 한족의 절박한 상황을 묘사했다. 엄동설한에 꽃을 피우는 난초는 선비정신의 표상으로, 뿌리가 뽑힌 난초는 곧 망국의 상황 속에서 좌절의 늪에 빠진 한족 지식인의 처지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공개의 ‘준골도’는 그림이 때로는 글보다 작자의 내면을 드러내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인 수단임을 확인시켜 준다. 송나라의 문인화가 사물의 겉모습보다 그것의 본질적인 속내를 그려 전달하는 사의(寫意)에 그 의의를 두면서 출현했다면, 원나라의 문인화는 화가의 내적인 의도를 구체적인 사물을 빌려 전달하는 전통을 수렴함으로써 문인화를 본격적인 발전의 궤도 위에 올려놓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그 중심에 공개를 비롯한 송의 유민화가들이 있었다. **▶**



**정석범**

한국경제신문 문화전문기자  
sukbum@naver.com  
프랑스 파리대학 미술사학 박사, 저서로는 「어느 미술사가의 낭만적인 유럽문화기행」, 「아버지의 정원」 등이 있다.



**이만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경제학회 회장

## 복지와 재정건전성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선거철만 다가오면 그 실천 가능성을 외면한 선심성 공약(空約)이 난무하는 역사적 진실을 올해에도 새삼 확인하면서 과연 우리 정치권의 선진화는 가능한 것인가 하는 반문(反問)을 되뇌게 한다.

최근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쏟아내고 있는 복지공약은 재원의 지속 가능성이란 측면에서 그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질 않아 어느 당이 집권하는가에 상관없이 정치 불신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우리의 복지재정 규모가 GDP에서 점유하는 비중이 OECD 선진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이유로 공약을 실현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지만 이는 우리가 처한 복지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연유한다.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역사상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7%에 도달하는 고령화 사회가 2001년에 시작해 2026년에는 그 비중이 20%에 이르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 기간이 불과 25년으로 일본이 36년, 독일이 77년, 미국의 경우 90년, 프랑스는 160년이었던 사실을 감안할 때 고령화의 진행 정도를 우려하기에 충분하다.

뿐만 아니라 출산율도 세계적으로 171위에 위치할 정도로 낮아 2020년대에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저성장의 늪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리고 통일이 도래할 경우 2천만 북한 주민들에 대한 복지지출을 외면할 수 없다는 사실도 제약조건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최근 모 통계학자는 이러한 인구구조를 고려할 때 연금재정의 고갈시기가 2060년이 아닌 10여년 정도 앞당겨질 것을 경고하고 있다. 지난해 모 국책연구기관에서 추정한 바에 의하면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

출로 2050년경 우리의 국가부채 규모가 GDP의 140%에 달할 수도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의료보험재정은 그 심각성이 더하다. 2010년 현재 노인 인구는 11%이고 의료비의 31% 정도가 노인에게 지출되는데 20년 후에는 노인인구가 24%에 이르고 전체 의료비의 65%가 노인에게 돌아간다는 우울한 통계치를 접할 때, 복지재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효율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는 전달체계의 개선도 요망되고 있다.

보육·교육·문화·주거·의료 등 분야별 제도개선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며 시민단체 등을 활용한 자발적 감시·감독체계의 도입 등을 제도화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의 지나친 복지 공약으로 우리의 재정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재정규율(fiscal rule)을 통해 재정적자나 국가채무가 중·장기적으로 일정비율 이상 되지 않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방안도 연구·검토돼야 할 것이다. 새로운 복지 제도의 도입 시 재원조달 방안을 의무적으로 첨부하는 방안 등도 그 사례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복지제도와 재정제도의 총체적 변혁이 함께하지 않을 경우 향후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해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최근 남유럽 국가들이 경험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도 누적된 재정적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우리 경제도 그 해법을 모색하는 데 있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관련 글

\* 이 글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KDI의 공식견해나 『나라경제』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